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

2020. 12. .

(협동조합)자치경영컨설팅

제 출 문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귀하

이 보고서를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12. .

(협동조합) 자치경영컨설팅

이 보고서는 (협동조합) 자치경영컨설팅이 대전광역시의회 연구용역을 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따라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대전광역시의회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제1장 총설	1
제2장 자치법규(조례)의 문제점 및 개정 의견	4
제3장 대전광역시 조례 실태 분석	6
제1절 일자리경제국(제8편)	6
제2절 과학산업국(제9편)	107
제3절 문화체육관광국(제12편)	122
제4절 보건복지국(제13편)	156
제5절 환경녹지국(제15편)	218
제6절 도시재생주택본부(제18편)	268
제7절 사업소(제21편)	297
제8절 기타	305
■ 참고 문헌	317
[붙임 1]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조례) 분석 목록	319

제1장 총 설

1. 연구배경 및 목적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자치입법권은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개정하는 조례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자치단체의 조례는 소관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여야 하고, 주민부담 및 권리제한 등에 대한 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행정수요의 다변화 등으로 활발한 자치법규(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이 제·개정되었음에도 이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지방의회가 재구성된 1991년 이후 자치단체에서는 조례 제정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조례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방분권화가 강조되는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조례가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주민들의 불편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있다. 특히, 일부 조례는 규제강화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다.

조례가 주민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불편을 준다면 지방자치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게 된다. 대전광역시 조례 중에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정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조례 정비를 통해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주민에 대한 규제와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규정의 개정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관 조례에 대한 정비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주요 조례의 정비 방향 및 내용을 설정하고, 의원의 조례 제·개정안 발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범위

연구범위는 대전광역시 전체 조례 600여 건 중에 주민생활과 지역발전에 직접 관련된 조례가 많은 제8편(일자리경제국 소관), 제12편(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3편(보건복지국 소관), 제15편(환경녹지국 소관), 제18편(도시재생주택본부), 제21편(사업소 소관) 300여 건 조례를 연구·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문제가 있는 142건 조례를 분석하

였다. 조직·업무 등 단순 기술적 조례는 과업수행을 통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대전광역시 조례 중 연구대상 조례를 분석하여 상위법령 제정·개정사항을 미반영한 조례,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이탈, 불일치 포함) 우려가 있는 조례, 법령상 위임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는 조례,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조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조례 등을 발굴하여 조문별로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이 연구는 연구대상 조례를 검토·분석하여 문제가 있는 조례의 조문 규정에 대해 문제점과 개정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연구하였다.

가. 조례분석, 조문별 문제점 분석 및 개정 의견 제시

-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미반영 및 위반사항
- 주민불편 사항 및 위임 없는 규제사항
- 장기간 미정비로 유명무실한 사항
- 유사 중복 조례의 통·폐합할 사항
- 위원회 회의기능을 다른 위원회로 대행할 수 있는 사항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 등

나. 조문 규정 내용이 중복된 조례의 통·폐합 등 의견 제시

- 현행 조례 중에 내용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례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다. 자문을 통한 입법 전문가 의견 수렴

- 국회에서 입법을 수행한 입법전문가의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용역수행에 적극 반영
- 연구내용의 전문성과 타당성, 적절성 확보

라. 중간보고 등을 통한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의견수렴

-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에게 대한 연구 중간보고 등을 통해 의견 수렴

마 조례 조문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조문 규정별로 개정의견 제시

- 다른 자치단체 우수조례 및 선행연구 검토 및 조사
- 대전광역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례 정비방안을 도출하여 의견 제시

4. 과업수행자

성명	직위(직급)	주소(개인주소)
최민수	책임연구원 (협동조합자치경영컨설팅 대표)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1로 146, 201동 502호
윤진훈	연구원 (행정학박사, 전 국회 전문위원)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290, 304동 1503호
박찬수	연구원 (협동조합자치경영컨설팅 이사)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 71, 2718동 1202호

5. 사업추진 일정

공정	10월			11월			12월		
1. 계획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2. 사례조사 분석									
- 조례 현황분석 및 평가대상 확정									
-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분석									
3.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 평가기준에 따른 조문별 평가									
- 조례 조문별 문제점 분석									
4. 개선안 구상 및 제시									
- 중간보고를 통한 의견수렴									
- 전문가 의견 수렴									
- 조례 정비·개선안 제시									
5. 보고서 작성 및 연구성과물 납품									
6. 기타(최종보고)									

제2장 자치법규(조례)의 분석 착안사항 및 개정 의견 제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법령 범위 안에서 제정하여야 한다. 특히,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제정된 조례 중에는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 규정이 있고, 법률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도 있다. 또한 조례 규정이 불합리하여 주민불편이나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거나 입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용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조례를 분석한다.

1. 대전광역시 조례의 분석 착안사항

가. 조례 조문 규정의 상위법령 위배 여부

나.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에 대한 의무부과 및 권리제한 여부

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의 미반영 여부

라. 불합리한 규정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 여부

마. 그 밖에 조례 입법체계에 적절한지 여부 등

2. 개정 의견 제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그 위임범위를 일탈해서는 아니 된다.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해서도 아니 되며, 상위법령이 제·개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례도 법령과 마찬가지로 입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조례의 일반원칙과 분석 착안사항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소관 조례(연구대상 조례)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유형의 의견을 제시한다.

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의 개정방안

상위법령에 위배(위임범위와 입법취지의 일탈 및 불일치 등 포함)된 조례 규정에 대해 상위법령 규정에 맞추어 개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상위법령 규정 및 체계에 따른 정비

조례에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한 경우에 규정을 추가하거나 새로이 신설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상위법령을 조례에 재규정하는 경우에도 누락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발견하고 개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삭제방안

조례 규정 중에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즉, 서류제출 및 보존의무 부과 등을 삭제하도록 하여 법령의 근거 없는 주민부담 등 규제에 대해 폐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규정에 대한 준용 방안

위원회 조례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각각 규정하여 동일한 조문이 반복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각 위원회 조례에서는 이를 준용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입법체계에 따른 정비방안

조례 입안기준과 한글맞춤법(용어선택의 적정성, 띄어쓰기, 용어순화, 오기, 누락사항 등)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에 대한 개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기본조례 등을 통한 조문 정비방안

기본조례를 활용하여 중복된 규정을 관련 조례에서 삭제하고, 기본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특히, 조례 중에 내용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례를 통·폐합하는 등의 개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 단체장 위임사항에 대한 시행규칙으로 규정 방안

조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단체장(시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시

민들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단체장의 재량권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시장에 게 위임한 사항 중에 중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 조문 규정의 불합리성 개정방안 제시

조례 조문 규정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아 주민불편을 야기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3장 대전광역시 조례 실태 분석

제1절 일자리경제국(제8편)

1. 대전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시·도 경제협의회 규정」 (대통령령 제28211호) 제9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 (1) 제2조(기능), 제3조(구성), 제8조(회의결과에 대한 반영) 및 제9조(간사)

(가) 조문규정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4. 「시·도 경제협의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시·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의안의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한다.

1. 경제 관련 기관·단체 대표 또는 부대표
2. 기업체 대표 또는 부대표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회의결과에 대한 반영) 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2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의 기능(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 법령인 「시·도 경제협의회 규정」 제2항 제1호가 “지역경제에 관하여 2 이상의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광역시·도에서도 지역경제에 관하여 2 이상 구·군과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도 이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 제2호의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은 중장기 계획수립 및 대책의 주체가 특정화 되지 않았음.
-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하면서 시장의 자문기구인 대전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의 위원장을 시장이 직접 맡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문기구의 위원장을 자문받는 주체가 직접 담당할 경우 자문기구의 논의가 형식화될 우려가 있음. 타 시·도의 조례를 살펴보다도 이러한 예는 흔치 않음.¹⁾
- 제9조는 간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정화되지 않아 누가 간사인지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업무담당자들이 간사직무를 기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되며, 간사가 자주 바뀔 경우 업무의 연속성도 저해될 수 있음.

1) 충청남도만이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 제안(제2조, 제3조, 제8조 및 제9조 개정)

- 제2조를 개정하여 “지역경제에 관하여 2 이상 구·군과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중장기 계획수립 및 대책의 주체를 명기함.
- 자문기구의 위원장을 시장이 직접 맡아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제3조를 개정하여 위원장은 시의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경제부시장, 그리고 부위원장은 타 시도와 같이 기획조정실장 등이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제9조 간사는 협의회의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자이므로 사전에 특정함으로써 업무의 확실성과 계속성을 제고 함.

현행	개정 의견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u>중장기 계획수립 및 대책에 관한 사항</u> <u><신설></u> 3. ~5. (생략)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u>대전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중장기 계획수립 및 대책에 관한 사항</u> 3. <u>지역경제에 관하여 2 이상의 자치구·군과 시와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u> 4.~6. (현행 제3호 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3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u>시장</u> 이 되며 부위원장은 <u>위원</u>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의안의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한다. 1.~3. (생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u>시 경제부시장</u> 이 되며 부위원장은 <u>시 기획조정실장</u> 이 된다 ③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제9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u>경제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u>	제9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u>시 경제정책과장</u> 이 된다.

2.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근로복지 기본법」 제28조 제1항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2조(명칭과 위치) 및 제5조(사용허가)

(가) 조문규정

제2조(명칭과 위치)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용허가)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설치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법」 제28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책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의 설치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조례에서 시설의 설치를 규정해 줄 필요가 있음.
- 제5조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변경을 규정하고 있을 뿐 허가의 취소에 대하여는 조례의 규정이 없음. 허가의 취소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해행위이므로 반드시 그 근거와 기준을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다) 제안(제2조 개정, 제5조의2 신설)

- 제2조에 근거 법률을 명기하여 실체적 설치와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를 함께 규정함.
- 시설의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규정을 신설함.

현행	개정 의견
제2조(명칭과 위치)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제2조(근로복지회관) ①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근

<p>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p> <p><신 설></p>	<p>로자종합복지회관(이하“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대전광역시에 두는 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p> <p>제5조의2(시설의 사용 제한 및 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지관 운영목적에 위배 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

3.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근로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근로복지 기본법」 제4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및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근로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지원은 해당연도 이자 수입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근로복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장의 결정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설치목적은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그 근거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개별기금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불필요함. 오히려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이 기금설치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그리고 기금의 설치에 제1조 목적 규정의 내용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의 설치 규정(실체 규정)을 두어야 함.
- 제5조는 기금의 관리·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주체가 누락 되었음.

(다) 제안(제1조 및 제5조 개정, 제1조의2 신설)

- 제1조를 개정하여 불필요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삭제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를 기금설치의 근거로 규정함.
- 제1조의2로 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함.
- 제5조를 개정하여 제6조로 하고, 제1항에 기금의 운용·관리 주체를 규정함.

현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근로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금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이하 “복지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p>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 중 여유 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u>예탁하여야 한다</u>.</p> <p>② 기금의 지원은 해당연도 이자 수입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근로복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u>대전광역시장</u>이 결정한다.</p>	<p>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u>시장</u>이 관리·운용하며,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u>예탁 한다</u>.</p> <p>② 기금의 지원은 해당연도 이자 수입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근로복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u>시장</u>이 결정한다.</p>
---	---

(2) 제6조(심의위원회)

(가) 조문규정

제6조(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6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근로복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함. 이런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기본적 사항에 당연히 적용될 수는 있겠지만 세부 심의 사항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례에서 기금운용심의회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원회의 기능도 함께 규정해 줄 필요가 있음(「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도 위원회를 조례로 설치 할 경우 그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을 각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
- 이 조례에서는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본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관리·운용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관련 조례를 적용하게 됨.

2)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절차 등) ① 담당 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과 조례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 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대전광역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항, 분쟁 조정 및 지방보조금 지급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제안(제6조 개정)

- 제6조 본문을 개정하여 제7조 제1항으로 하고(제2조가 신설 되었으므로), 제1항에 대전광역시 근로복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함.
- 제2항으로 누락 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함.

현행	개정 의견
제6조(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근로복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신 설>	제7조(심의위원회) ³⁾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대전광역시 근로복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지원 4. 그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대전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가 설치한 대전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3) 제2조가 신설됨에 따라 현행 제5조를 제6조로 개정함.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9조(임대료 등)

(가) 조문규정

제9조(임대료 등) ① 임대아파트에 입주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정한 임대료 등을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 한 임대료 등은 환 불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증금은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계약이 해지된 경우 체납액 등을 공제한 후 환 불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9조는 임대료 등을 규정하면서 별표로 보증금과 월 임대료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입주자에 따라 사용량이 다를 수 있어서 수익자(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는 공공요금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또한 임대기간 중 한 달 미만의 기간에 대한 임대료 계산기준 규정이 없음.

(다) 제안(제9조 개정, 제9조의2 신설)

- 제9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1월 미만의 임대기간에 대한 임대료 계산기준을 규정함.
- 그리고 별도로 제9조의2를 신설하여 공공요금의 부담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행	개정 의견
<p>제9조(임대료 등) ① 임대아파트에 입주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정한 임대료 등을 납부 하여야 한다.</p> <p>② 이미 납부 한 임대료 등은 환 불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증금은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계약이 해지된 경우 체납액 등을 공제한 후 환불 한다.</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9조(임대료 등) ① 임대아파트에 입주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정한 임대료 등을 납부 하여야 한다.</p> <p>② 이미 납부 한 임대료 등은 환 불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증금은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계약이 해지 된 경우 체납액 등을 공제한 후 환불 한다.</p> <p>③ <u>1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임대료는 거주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u></p> <p><u>제10조(공공요금) ① 입주자는 거주기간에 대한 관리비 등 공공요금을 부담한다.</u></p>

	② 1월 미만의 기간 거주자에 대하여는 호당 전월(납기) 사용료를 적용하여 일 할 계산 한다.
--	--

5.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2조(협의회 구성) 및 제9조(수당 등)

(가) 조문규정

제2조(협의회 구성) ①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2조에서는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1항은 협의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어디에 설치하는지 그 위치를 밝히지 않고 있음. 그리고 제2항은 위원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음.

- 즉,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이를 다르게 규정할 수 없음.
- 제9조는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해서 규정할 필요가 없음. 다만, 위원이 아닌 전문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해 줄 필요가 있음.

(다) 제안(제2조 및 제9조 개정)

- 제2조 제1항을 개정하여 협의회를 설치하는 위치를 규정하고, 제2항을 개정하여 상 위법령에 위배 되지 않도록 함.
- 제9조를 위원에 대한 수당 등 지급은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전문가 등에게는 위원회설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함.

현행	개정 의견
제2조(협의회 구성) ①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u>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u> ② <u>협회의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③·④(생략)	제2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라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u>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u> ② <u>협회의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2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시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u> ③·④(현행과 같음)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u>위원 또는 전문가</u> 등에게 「대전광역시 위원회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u>전문가</u> 등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u>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u>	<u>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준하여 수당 등을 지 급할 수 있다.</u>
---	--

6. 대전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등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고용상의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전보·훈련, 승진, 임금, 임금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차별행위”란 고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출산, 가족 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적용 권고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과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시가 지방보조금을 교부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이 조례는 제1조에서 그 목적을 “대전광역시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대전광역시 등에 있어서 등이 무엇을 지칭하는지를 검토해 보면,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은 “시장은 적용 권고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적용 권고기관의 장은 시장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볼 때 “등”에 해당하는 기관은 “적용 권고기관”인 것으로 추정됨.
- 제2조 제3호에서 “적용 권고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과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시가 지방보조금을 교부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전광역시 등“에서 등이란 결국 자치단체 산하의 출자·출연기관과 보조금교부기관이나 단체 즉, 자치단체 산하의 공공기관을 의미하는 것이 됨.
- 생각건대 공공기관이라 표현하지 않고 ”적용 권고기관“ 이라는 그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시와 의회의 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자치단체와는 다른 독립성을 가진 기관과 단체임을 감안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됨.
- 고용과 근로 정책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국가가 법률로 직접 규율하는 국가사무이긴 하나 이 부문은 인권·복지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문으로서 생활권적 사회권인 포괄적 복지권에 속하는 부문이므로 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조례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시민을 규율할 수 있다 할 것임. 따라서 자치단체는 인권이나 근로복지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시민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도 함께 규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그러므로 대전광역시 등에서 등은 책임성을 약화 시키는 표현이므로 이를 직접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 고용과 차별행위는 이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위해 이를 인용해 정리함이 타당 함.

(다) 제안(제1조 및 제2조 개정)

- 제1조 중 그 의미가 모호하고 책임성을 약화 시키는 표현인 ”대전광역시 등“을 ”대전광역시와 공공기관“으로 개정함.
- 제2조 제1호의 고용과 제2호의 차별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인용해 정리함.

o “적용 권고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하고 이를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행	개정 의견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대전광역시 등이</u> 고용에 있어 성별, <u>연령</u>,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전보·훈련, 승진, 임금, 임금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p> <p>2. “차별행위”란 고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출산, 가족 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p> <p>3. “적용 권고 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과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시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대전광역시와 공공기관이</u> 고용에 있어 성별, <u>나이</u>,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고용”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영역과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p> <p>2. “차별행위”란 고용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해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과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시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p>

(2)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차별행위 금지 등) 및 제6조(불리한 처우 금지)

(가) 조문규정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

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용 권고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적용 권고기관의 장은 시장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시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적용 권고기관의 장에게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6조(불리한 처우 금지) 시장 및 적용 권고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3조의 적용 권고기관은 앞에서 이를 공공기관으로 변경했으므로 제3조 이하도 이에 맞추어 정리 할 필요가 있음. 적용 권고기관의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해 시장이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것은 비록 감독기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시장은 직무가 아닌 이상 그 책임을 논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시장의 간섭이 독립기관인 공공기관(적용 권고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의 고용상 차별행위 문제는 그 공공기관이 책임을 지고 시정해야 할 것이며 시장은 이를 감독할 수 있을 뿐임.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일을 조례로 의무를 부여하여 시장에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 따라서 제4조와 제6조도 공공기관의 장에게 직접 의무를 지우는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다) 제안(제3조, 제4조 및 제6조 개정)

-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공공기관의 장을 삽입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노력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 제3조 제1항과 제2항의 개정으로 불필요하게 된 제3항과 제4항을 삭제 함.
- 제4조 제1항과 제6조에 공공기관의 장을 삽입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 하도록 하며,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현행	개정 의견
<p>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u>대전광역시장</u>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u>시장은</u>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p>③ <u>시장은</u> 적용 권고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u>적용 권고기관의 장은</u> 시장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제4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u>시장은</u>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p> <p>② <u>시장은</u> 적용 권고기관의 장에게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를 권고하여야 한다.</p> <p>제6조(불리한 처우 금지) <u>시장 및 적용 권고기관의 장은</u>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u>대전광역시장</u> (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u>공공기관의 장</u>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u>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은</u>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삭 제></p> <p>제4조(차별행위 금지 등) <u>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은</u>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6조(불리한 처우 금지) <u>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은</u>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7.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숙련기술 장려법」 제3조 제2항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2조(정의) 및 제3조(명장 자격요건)

(가) 조문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 명장”이란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써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명장 자격요건) 대전광역시 명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시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2. 해당 직종의 숙련기술 보유 정도가 높은 사람
3. 신청 직종의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사람
4. 같은 공적으로 「숙련기술 장려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 명장 또는 그와 유사한 상을 받은 경력이 없는 사람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2조는 대전시 명장과 숙련기술을 정의하고 있는데 관련 법률을 참고 하거나 인용하여 규정함이 법령의 통일성에 적합하고 조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
- 제3조 제1호는 명장의 자격요건 중 동일업무 종사 경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전시 거주 경력과 관내 사업장 종사 경력을 동일 하게 해석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주 기간 내내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분명히 할 필

요가 있음.

(다) 제안(제2조 및 제3조 개정)

- 제2조 정의 조항을 관련 법을 참고 하거나 인용하여 정리함.
- 대전시 거주기간과 관내 사업장 종사기간을 5년 또는 3년으로 분명하게 명기함.

현행	개정 의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숙련기술”이란 산업현장에서 업무를 <u>잘 수행 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써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u> 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숙련기술”이란 「 <u>숙련기술 장려법</u> 」 제2조 제1호의 기술을 말한다.
제3조(명장 자격요건) 대전광역시 명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일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u>공고일 현재 5년 이상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시 관내 사업장에 종사 하는 사람</u> 2.~4. (생략)	제3조(명장 자격요건) 대전광역시 명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u>공고일 현재 5년 이상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시 관내 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 하는 사람</u> 2.~4. (현행과 같음)

(2) 제6조(예우 및 지원),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및 제10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가) 조문규정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대전광역시 명장 증서와 명패를 수여하고,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 3 백만 원씩 5년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명장으로 선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장려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명장 선정이 취소된 경우 동일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게 된 경우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명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명장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인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숙련기술 장려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3. 숙련기술과 관련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숙련기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명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6조는 명장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 단서 이하의 체계에 혼란이 있음. 즉, 단서에서 명장 선정 후 장려금의 중단과 반환 등을 규정하면서 각 호로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단서에서 이를 직접 기술하고 있음.
- 제9조는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제6조와 같은 혼란이 있음. 즉, 심의사항을 각호로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이를 본문에 바로 나열하고 있음. 그리고 위원회는 명장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필수 기구인데도 그 설치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통합운영은 별론), 그 설치 위치가 누락 되어 있음.
- 제10조의 조 제목은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내용은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즉, 기능은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조 제목과 관계가 없는

위원장의 직무를 여기에 규정하는 등 조 제목과 항의 내용 간에 불일치가 있음.

- 제9조, 제10조의 내용 및 체계상에 혼란이 있으므로 조례 체계를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다) 제안(제6조, 제9조 및 제10조 개정)

- 제6조를 개정하여 장려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경우와 이미 지급된 장려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로 정리함.
- 제9조를 개정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을 각 호로 정리함.
- 제10조 조 제목을 항의 내용에 맞게 수정함.

현행	개정 의견
<p>제6조(예우 및 지원)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 3백만 원씩 5년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명장으로 선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장려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u>명장 선정이 취소된 경우 동일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게 된 경우</u></p> <p><u><각호 신설></u></p>	<p>제6조(예우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 3백만 원씩 5년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명장으로 선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장려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u><후단 삭제></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명장 선정이 취소된 경우</u> 2. <u>동일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u> 3. <u>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게 된 경우</u>
<p>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대전광역시 명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를 둘 수 있다. <u>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명장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u></p>	<p>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대전광역시 명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를 둔다. <u><후단 삭제></u></p>

<p><각호 신설></p> <p>②~④ (생략)</p> <p>제10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③ (생략)</p>	<p>1.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p> <p>2. 대전광역시 명장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p> <p>3. 그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②~④ (현행과 같음)</p> <p>제10조(위원회 운영) ①~③(현행과 같음)</p>
---	--

8.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해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 (1) 제2조의3(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제6조의3(휴게시설 및 상담소 등 설치) 및 제11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가) 조문규정

제2조의3(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체류하고 있는 감정노동자,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및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6조의3(휴게시설 및 상담소 등 설치) 시장은 유관기관의 장에게 감정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휴게시설과 상담소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

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생략)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2조의3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 제목은 ‘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으로 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음.
- 제6조의3은 시장이 유관 기관의 장에게 감정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휴게시설과 상담소 등을 마련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장이 유관 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이를 직접 지시할 수는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음.

(다) 제안(제6조의3 및 제11조 개정)

- 제6조의3은 시장과 유관 기관의 장이 기관 내에 감정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휴게시설과 상담소 등을 마련하게 하도록 규정함.
- 제11조 조 제목을 항 내용에 일치시킴.

현행	개정 의견
제6조의3(휴게시설 및 상담소 등 설치) <u>시장은 유관 기관의 장에게 감정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휴게시설과 상담소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u>	제6조의3(휴게시설 및 상담소 등 설치) <u>시장과 유관 기관의 장은 기관 내에 감정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휴게시설과 상담소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u>
제11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⑤ (현행과 같음)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⑤ (생략)	
--	--

9. 대전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사회참여와 노동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전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사회참여와 노동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전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취업 지원

나.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 안정과 기업의 고용 촉진 지원

2.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등에 따라 일자리 창출 촉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제5조(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매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대책

2. 미취업자 직업능력개발과 취업 지원

3.~7.(생략)

8.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③ · ④(생략)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이 조례는 제명을 「대전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라 규정하고 있고, 제1조(목적)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사회참여와 노동 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라고 규정하여 이 조례의 성격과 적용 범위를 “일자리 창출”로 정하고 있음.
- 그런데 조례 내용에 있어서는 그 성격이 상당히 다른 취업 지원 부분도 포함하고 있음. 즉, 제2조 제1호 가목은 “일자리 창출”을 취업 지원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고 제5조 제2항 나목은 “미취업자 직업능력개발과 취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는 취업 지원 사업을 규정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목과 조례 내용에 불일치가 있음.
- 조례의 제명은 조례의 주요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함. 이 조례의 핵심 내용은 일자리 창출 촉진과 취업 지원이라 할 수 있는데 일자리 창출 촉진은 주로 사업주에 관련된 내용이고 취업 지원은 근로자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그 성격이 상당히 다름. 따라서 일자리 창출이 취업 지원을 당연히 포함한다고는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조례의 제명은 조례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제1조 또한 같음.
- 제2조 제1호의 “일자리 창출”에 취업 지원 행위인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과 기업의 고용 촉진 지원을 함께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임.

(다) 제안(조례의 제명, 제1조, 제2조 및 제5조 개정)

- 제명에 취업 지원 내용을 포함시켜 “대전광역시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촉진 조례”로 제명을 개정함.
- 제1조 목적에 일자리창출과는 그 성격이 다른 취업 지원도 삽입하여 범문을 정리함.
- 제2조는 일자리창출과 취업 지원을 분리하여 정의함.
- 제1조와 제2조에서 취업 지원을 독립적으로 규정했으므로 제5조의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각 호를 이에 맞게 정리함.

현행	개정 의견
대전광역시 일자리 <u>창출</u> 촉진 조례	대전광역시 일자리 <u>창출 및 취업 지원</u> 촉진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사회참여와 노동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전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일자리 창출</u>”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가. <u>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취업 지원</u></p> <p>나. <u>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 안정과 기업의 고용 촉진 지원</u></p> <p>제5조(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u>매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u>일자리 창출 대책</u></p> <p>2. <u>미취업자 직업능력개발과 취업 지원</u></p> <p>3.~7.(생략)</p> <p>8. <u>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u></p> <p>③·④(생략)</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촉진하여 사회참여와 노동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전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일자리 창출</u>”이란 <u>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u></p> <p>2. “<u>취업 지원</u>”이란 <u>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 안정과 기업의 고용 촉진을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u></p> <p>제5조(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u>매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u>일자리 창출 대책</u></p> <p>2. <u>미취업자 직업능력개발과 취업 지원</u></p> <p>3.~7.(현행과 같음)</p> <p>8. <u>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u></p> <p>③·④(현행과 같음)</p>
---	--

(2) 제6조(일자리 창출 위원회) 및 제18조(대전 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

(가) 조문규정

<p>제6조(일자리 창출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일자리 창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p>
--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대전 일자리 지원 센터의 설치)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 일자리 지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6. (생략)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6조는 일자리 창출 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명칭이 조례의 목적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심의사항 중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는 취업 지원 사항이 누락되어 있음. 그리고 계속적인 심의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아니 둘 수도 있는 임의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위원회를 설치하는 위치도 누락되어 있음.
- 제18조는 대전 일자리 지원 센터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설치 위치를 알 수 없음.

(다) 제안(제6조 및 제18조 개정)

- 제6조 "일자리 창출 위원회"를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를 대전광역시에 둠.
- 제18조를 개정하여 대전 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 위치를 명기함.

현행	개정 의견
제6조(일자리 창출 위원회의 설치) <u>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일자리 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u> 1.~3.(생략)	제6조(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위원회) <u>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대전광역시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1.~3.(현행 같음)
제18조(대전 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 <u>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u> 1.~6. (생략)	제18조(대전 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 <u>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 일자리 지원센터를 대전광역시에 둔다.</u> 1.~6. (현행과 같음)

10. 대전광역시 일자리 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고용 촉진 및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등 일자리 창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일자리 창출 범시민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 (1) 제1조(목적), 제2조(기능),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및 제11조(수당 등)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 촉진 및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등 일자리 창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일자리 창출 범시민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일자리 창출 범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정책 및 정책대안의 제시에 관한 사항
- 2~5. (생 략)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협조 요청)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촉위원 또는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협의회 설치는 제1조(목적)의 규정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설치 규정

을 두어야 할 것임.

- 제10조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협조 요청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음.
- 제11조는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촉위원 또는 전문가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위원회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게 되므로 이 조례에서 수당 등 지급을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으나 위원이 아닌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설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보완이 필요함.

(다) 제안(제2조, 제10조 및 제11조 개정)

- 제2조에 제1항을 신설하여 협의회 설치 규정함.
- 제10조에 협조 요청 주체를 명기하고, 제11조는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등을 위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현행	개정 의견
<p><u>제2조(기능) <신설></u></p> <p><u>대전광역시 일자리 창출 범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p><u>1~5. (생략)</u></p> <p><u>제10조(관계 기관 등에 협조 요청) 협의회</u> <u>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p> <p><u>제11조(수당 등)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촉위원 또는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u></p>	<p><u>제2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대전광역시</u> <u>에 대전광역시 일자리 창출 범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u></p> <p><u>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p><u>1~5. (현행과 같음)</u></p> <p><u>제10조(관계 기관 등에 협조 요청) 협의회</u> <u>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p> <p><u>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아닌 전문가 등에게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급할 수 있다.	
----------	--

11.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가. 조례내용

-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2조(정의) 및 제7조(표준계약서 작성 및 권장)

(가) 조문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계약에 따라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3.(생략)

제7조(표준계약서 작성 및 권장) ① 시장은 프리랜서가 계약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리랜서와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적극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프리랜서와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⑤(생략)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이 조례 제2조 제1호는 이 조례의 대상인 프리랜서를 정의함에 있어서 “프리랜서”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계약에 따라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성격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점이 나타나 있지 않음.

- 제7조 제1항은 시장이 프리랜서가 계약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업종별 표준계약서는 그 업종을 소관 하는 법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⁴⁾ 이를 시장이 작성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 사항이 아니며, 각각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시장이 다시 작성한다고 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음.

(다) 제안(제2조 및 제7조 개정)

- 제2항에 프리랜서의 중요한 특징인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자”임을 명기함.
- 시장의 권한 사항이 아닌 제7조 제1항을 삭제함.

현행	개정 의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계약에 따라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u>사람을 말한다.</u> 2. 3.(생략) 제7조(표준계약서 작성 및 권장) ① <u>시장은 프리랜서가 계약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u> ② <u>시장은 프리랜서와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적극 사용하여야 한다.</u> ③ ~⑤(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계약에 따라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u>사람으로서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한다.</u> 2. 3.(현행과 같음) 제7조(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① <삭제> ② <u>시장은 프리랜서와 계약 시 업종별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적극 사용하여야 한다.</u> ③ ~⑤(현행과 같음)

4) 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규정하고 있음.

12.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과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부터 제3조(행정지원)까지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과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대전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제4항에 따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경우에는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 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센터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지원)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과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당 초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제3항⁵⁾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었으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면서 이 규정의 법률 소관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이관되어 제4조의7 제2항에 규정 되었으며 업무도 과

5)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변경 되었음.

- 「과학기술기초법」 제1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이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16524호, 2019. 8. 20.)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 이 법 제4조의7 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 되었음. 따라서 제2조의 “「과학기술기초법」 제16조의4 제4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7 제4항”으로 변경해서 규정해야 함.
- 제1조는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내용으로 볼 때 이를 지정하도록 규정한 근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알 수 없음. 법령을 입안 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이 있는 경우는 이를 명시해 주어야 법령 간에 그 규정의 의미나 성격을 통일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며, 관련 법령 간에 기술에 따른 표현의 차이나 법령의 개·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서도 반드시 상위법령 또는 관계 법령을 인용해서 입안해 줄 필요가 있음.
- 생각건대 이 조례는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 이외에 계속 존치 여부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조례는 제1조 목적 규정 이외에 제2조로 출연금 등의 지원, 제3조로 행정지원, 그리고 제4조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운용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3조의 행정지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3호의 타목이 “중소기업의 육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일이고, 제4조는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교부 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감독기관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임. 그러면 이제 제2조만이 문제가 되는데 출연금 등의 지원은 그 의미가 있어 보이니 이에 대하여는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함.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금지하면서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제1항 제4호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단서는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조례의 제정목적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런 측면에서 조례 제2조는 규정의 존재 의의가 있음.
-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은 예외적으로 출연이나 보조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1호로 함께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출연이나 보조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례에 그 근거가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게 됨. 그리고 또 자치단체의 출연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만 가능함.⁶⁾

-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7(기술창업 활성화 등) 제4항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즉, 법률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임.
- 이를 종합해 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7 제2항에 따라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과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7 제2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 따라서 조례 제2조 또한 존치시킬 필요가 없는 중복된 규정이 되고, 조례 전체 조항은 모두 의미가 없는 내용이 되므로 이 조례는 계속 존치시킬 이유가 없어 보이게 되는 것임.

(다) 제안(제1조 개정 또는 조례 폐지)

- 제1조를 관련되는 상위법령을 인용해서 기술함.
- 이 조례는 반드시 존치시킬 필요는 없음. 따라서 폐지를 건의함.

현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과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7 제2항에 따라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과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 「지방재정법」 제18조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13. 대전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 (1) 제3조(적용대상), 제5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및 제9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관리)

(가) 조문규정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관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①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의 대전광역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가 대행한다.

제9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관리) ①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계약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여성기업 확인증을 갖추어 제1항의 여성기업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 등재하여야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3조의 적용대상이란 법령 입안 기준 상 정식용어가 아님.

- 제5조는 대전광역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기구를 설치하는 위치를 알 수 없음.
- 제9조 제2항의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여성기업 확인증을 갖추어 여성기업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의 여성기업 확인 업무의 주체를 알 수 없음.

(다) 제안(제3조, 제5조 및 제9조 개정)

- 제5조에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두는 위치를 대전광역시로 규정함.
- 제9조 제2항을 개정하여 여성기업인 확인증 발급기관으로 여성 기업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부기함.

현 행	개정 의견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시 관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 관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①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둔다.	제5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①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대전광역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9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관리) ①(생략)	제9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관리) ①(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여성기업 확인증을 갖추어 제1항의 여성기업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 등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여성기업 확인증을 갖추어 제1항의 여성기업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 등재하여야 한다.

14.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2조(정의)부터 제4조(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까지

(가) 조문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략)

②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지역 공공기관 및 100명 이상 사업장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제4조(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 창출을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20 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의무구매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음.
-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에서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지역 공공기관 및 100명 이상 사업장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제2항의 내용 중 “지역 공공기관”이라는 표현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포함하므로 중복되는 표기임.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판로지원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는 공공기관⁷⁾을 정의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모든 공공기관이 다 포함되므로 이를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고 그냥 공공기관이라고 표기하면 될 것임.
- 제4조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제1항은 시장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20 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 조례의 상위법인 판로지원법은 이러한 내용을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규정이 없음.⁸⁾ 따라서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20 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의무구매하여야 한다.”는 제4조 제1항 후단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 되는 것으로 보임.

(다) 제안(제2조부터 제4조까지 개정)

- 제2조는 용어 정의의 폭이 너무 넓어 분명치 않은 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여 판로지원법 제2조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함.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8) 판로지원법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의 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로를 지원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로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로지원법 제3장에서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에 관하여 규율 하면서,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장이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는 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따른 학교 기관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구와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다른 내용은 없음. 그런데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제4조 제1항에서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판로지원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는 다르게 시장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20 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률의 근거 없이 시장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 된다고 할 것임.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은 지방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공공기관"과 중복되므로 전체를 공공기관으로 표기하여 조례를 간결하게 정리함.
- 제4조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 되는 후단을 삭제함.

현행	개정 의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략) ②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지역 공공기관 및 100명 이상 사업장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략) ②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및 100명 이상 사업장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제4조(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 구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20 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의무구매 하여야 한다. ②·③(생략).	제4조(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③(생략)

15.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한 기업이나 기업인·과학기술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2조(지원 등), 제13조(기능) 및 제22조(수당 등)

(가) 조문규정

제12조(지원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이차보전 등의 지원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기능) ①시장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0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5. (생략)

제22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12조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불분명함. 선정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이차보전 등을 지원하고 지급방식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이라면 이에 맞게 먼저 지원을 규정하고, 다음에 지원과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함이 타당함.
- 제13조에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0이 아니라 제54조의29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함. 그리고 중소기업지원기관 협의회는 시장이 설치자이므로 이에 맞추어 문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제22조의 위원에 대한 수당 등 지급은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음. 다만, 전문가 등의 수당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설치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보완이 필요함.

(다) 제안(제12조, 제13조 및 제22조 개정)

- 제12조는 선정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이차보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지급방식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르도록 나누어서 규정함.
- 제13조는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대전광역시에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표기 오류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0을 제54조의29로 바로 잡음.
- 제22조는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에서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아닌 전문가 등에 대해서만 위원회설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현행	개정 의견
제12조(지원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이차보전 등의 지원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이차보전 등) 제5조에 따라 유망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이차보전 지원 등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기능) ①시장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0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중소기업 지원에 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0에 따른 중소기업지원기관과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2.~5. (생략)	제13조(협의회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0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중소기업 지원에 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 29에 따른 중소기업지원기관(이하 “중소기업 지원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2.~5. (현행과 같음)
제22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제22조(수당 등) ①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이 아닌 전문가 등에게는 「대전광역시

<u>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	<u>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
--	---

16.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 (1) 제2조(정의), 제5조(기금 조성), 제7조(기금 지원대상자) 및 제18조(회계관직)
(가) 조문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2.~4.(생략)

제5조(기금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의 출연금
2. 이자 수입금
3.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금 및 출연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7조(기금 지원대상자) ①기금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8. (생략)

②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 제2항의 자금별 성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달리 할 수 있다.

제18조(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일자리경제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업창업지원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이 조례 제2조 제1호는 "중소기업"을 정의하고 있는데, 인용하는 법률 규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는제1항에서 중소기업자를 정의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을, 그리고 제4항에서는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 정의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는 의미상 차이가 있음. 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는 중소기업자는 있어도 중소기업은 없음,
- 제5조 제1항은 기금의 재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1호 중 "자치구의 출연금"은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출연금일 것이라고 추정은 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불분명함. 그리고 제3호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그 명칭이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으로 바뀌었으며(2018.12.31.) 기금의 설치 근거가 누락 되었음.
- 제7조는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를 대전광역시로 특정하지 않아 그 범위가 너무 넓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남.
- 제18조의 회계관직을 담당하는 자의 소속이 불분명함.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추정은 할 수 있으나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다) 제안(제2조, 제5조, 제7조 및 제18조 개정)

- 제2조 제1호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영위하는 기업이나 법인·단체"로 개정함.
- 제5조 제1항 제1호의 자치구를 대전광역시 자치구로 특정화 하고, 제3호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 기금"을 변경된 명칭으로 규정하는 한편, 설치법률을 함께 규정함.
- 제7조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대전광역시 거주자를 부기하여 본문을 재 작성함.
- 제18조를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소속을 규정함.

현	행	개정 의견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u>중소기업을 말한다.</u></p> <p>2.~4.(생략)</p> <p>제5조(기금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대전광역시 및 <u>자치구의 출연금</u></p> <p>2. 이자 수입금</p> <p>3. 4.(생략)</p> <p>② (생략)</p> <p>제7조(기금 지원대상자) ①<u>기금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8. (생략)</p> <p>②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 제2항의 자금별 성격에 따라 지원 대상을 달리 할 수 있다.</p> <p>제18조(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p> <p>1. 기금 운용관 : 일자리경제국장</p> <p>2. 분임기금운용관 : 기업창업지원과장</p> <p>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u>중소기업자가 영위하는 기업이나 법인·단체를 말한다.</u></p> <p>2.~4.(생략)</p> <p>제5조(기금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대전광역시 및 <u>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출연금</u></p> <p>2. 이자 수입금</p> <p>3.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기금 지원대상자) ① <u>기금의 지원 대상자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사업자, 법인·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8. (현행과 같음)</p> <p>②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 제2항의 자금별 성격에 따라 지원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p>제18조(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전광역시 공무원이 담당하는 회계관직을 둔다.</p> <p>1. 기금 운용관 : 일자리경제국장</p> <p>2. 분임기금운용관 : 창업지원과장</p> <p>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p>
---	---

17.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창업자의 활동을 촉진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창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 (1) 제2조(정의), 제6조(창업지원협의회)부터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까지, 제14조(창업 촉진 사업) 및 제15조(창업 지원시설의 설치 운영 등)

(가) 조문규정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창업지원 시설”이란 창업자에게 창업 교육, 전문가 컨설팅 및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경영·기술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창업지원협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창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창업과 관련한 정책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창업기업인의 고충에 대한 의견수렴 사항
4. 그 밖에 창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창업 관련 관계 공무원
2. 창업 유관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기업인
4. 그 밖에 창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창업 촉진 사업)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사업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4.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5.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창업지원 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창업지원 시설 입주자에게 임대료, 관리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창업지원 시설 입주자의 모집방법, 선정방법, 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조례 체계에 있어서 협의회 위원을 협의회 구성 조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어서 위원의 위촉 해제가 위원장보다 앞서서 규정되고 있고, 이 조례의 중요내용인 시장의 창업 촉진 사업과 창업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이 협의회 뒤에서 규정되는 등 그 체계가 법령의 입안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음.
- 제2조의 창업지원 시설 중 창업 공간은 범위가 너무 넓어 그 의미가 불명확함. 그리고 제2항은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제7조는 위원장과 위원을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혼선이 있음.
- 제8조 제1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심신장애 이외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포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다) 제안(조례체계 재구성, 제2조 및 제15조 개정 또는 삭제)

○ 조례 체계를 법령의 입안 원칙에 부합되게 재구성 함.

현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6조(창업지원협의회)	제6조(창업 촉진 사업)
제7조(구성 등)	제7조(창업지원 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창업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
제10조(회의)	제10조(위원)
제11조(간사)	제11조(회의)
제12조(실무협의회)	제12조(간사)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실무협의회)
제14조(창업 촉진 사업)	제14조(운영세칙)
제15조(창업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16조(포상)	

- 제2조 창업지원 시설 중 "창업 공간"을 "창업 추진 공간"으로 명확히 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위하여 창업지원 시설 입주자의 모집방법, 선정방법, 입주절차 등을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함.
- 제6조부터 제13조를 전부 개정하여 조례 체계를 재편성함.
-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심신장애 외에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심신장애 등"으로 수정함.
- 창업 촉진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창업자에게 포상 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하도록 함.

현행	개정 의견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창업 지원시설”이란 창업자에게 창업 교육, 전문가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창업 지원시설”이란 창업자에게 창업 교육, 전문

<p>컨설팅 및 <u>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경영 기술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u></p> <p>② (생 략)</p> <p>제6조(창업지원협의회) <u>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창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창업과 관련한 정책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창업기업인의 고충에 대한 의견수렴 사항 4. 그 밖에 창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7조(구성 등) ① <u>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u>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③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창업 관련 관계 공무원 2. 창업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기업인 4. 그 밖에 창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④ <u>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u></p> <p>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u>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u></p>	<p>컨설팅 및 <u>창업 추진 공간을 제공하고 경영·기술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창업 촉진 사업) ① <u>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사업 2. 창업 추진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4.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5.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하는 사항 <p>② <u>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제7조(창업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u>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u></p> <p>② <u>시장은 창업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③ <u>시장은 창업 지원시설 입주자에게 임대료, 관리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u></p> <p>④ <u>창업 지원시설 입주자의 모집방법, 선정방법, 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8조(창업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u></p>
---	--

<p><u>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u></p> <p><u>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p> <p><u>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p> <p>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협의회 회기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u>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대전광역시 창업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u></p> <p><u>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u></p> <p><u>2. 창업과 관련한 정책적 개선에 관한 사항</u></p> <p><u>3. 창업기업인의 고충에 대한 의견수렴 사항</u></p> <p><u>4. 그 밖에 창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u>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u>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제9조(위원장) ①·②(현행과 같음)</p> <p>제10조(위원)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u>1. 창업 관련 대전광역시 관계 공무원</u></p> <p><u>2. 창업 유관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u></p> <p><u>3. 기업인</u></p> <p><u>4. 그 밖에 창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u>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u></p>
--	--

<p><u>제11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창업 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u></p> <p><u>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무 협의회를 둘 수 있다.</u></p> <p><u>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p><u>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p><u>제14조(창업 촉진 사업)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p> <p><u>1.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사업</u></p> <p><u>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u></p>	<p><u>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u></p> <p><u>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p> <p><u>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u>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p> <p><u>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제12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 한다</u></p> <p><u>제13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무 협의회를 둘 수 있다.</u></p> <p><u>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p><u>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	--

<p>3. <u>제품 홍보·마케팅 지원사업</u></p> <p>4. <u>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u></p> <p>5. <u>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u></p> <p>② <u>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u>제15조(창업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u></p> <p>① <u>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u></p> <p>② <u>시장은 창업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③ <u>시장은 창업 지원시설 입주자에게 임대료, 관리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u></p> <p>④ <u>창업 지원시설 입주자의 모집방법, 선정방법, 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p><u>제16조(포상) 시장은 창업 촉진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창업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u></p>	<p><u>제15조(포상) 시장은 창업 촉진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창업자에게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u></p> <p><u><삭 제></u></p>
--	---

18.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2조(정의), 제8조(위원회 구성)부터 제17조(운영세칙)까지 및 제21조(사무의 위탁)

(가) 조문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기술혁신”이란 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기술혁신 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3.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생략)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창업지원과장이 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조례 체계에 있어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위원을 위원 구성 조에서 함께 규정함으로 인해서 위원의 해촉 등 위원 관련 사항이 위원장보다 앞에서 규정되고 있고, 이 조례의 본칙 내용에 속하는 시장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 사업,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원이 위원회 뒤에서 규정되는 등 그 체계가 법령의 입안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제2조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의 용어 정의와 일치하므로 별도 규정으로 존치 시킬 실익이 크지 않음.
- 제8조 행정부시장의 소속이 누락 되었음.
- 제11조의 해촉 사유 중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심신장애 외에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포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제15조는 간사를 담당하는 기업창업지원과장의 소속을 알 수 없음.
- 제16조의 위원에 대한 수당 등 지급은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음. 다만, 전문가 등의 수당 등에 대해서 규정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보완해 줄 필요가 있음.

(다) 제안(조문 체계 재구성, 제2조·제16조 개정, 제8조·제11조·제15조 내용보완, 제22조 삭제)

○ 조례체계를 법령의 입안 원칙에 부합되게 장으로 구분하여 재편성 함.

현행	개정 의견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계획의 수립)	제2장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계획의 수립)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제7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원)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제10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장)	제12조(위원장)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
제14조(의견 청취 등)	제14조(회의)
제15조(간사)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6조(수당 등)	제16조(의견 청취 등)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간사)
제18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 사업)	제18조(수당 등)
제19조(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19조(운영세칙)
제4장 보칙	제4장 보칙
제20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원)	제20조(사무의 위탁)
제21조(사무의 위탁)	

○ 제2조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의 용어 정의와 동일 하므로 이 법을 따

르도록 규정함.

- 제8조 제2항 행정부지사의 소속을 부기함.
- 제11조 제1호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심신장애 이외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심신장애 등---"으로 수정함
- 제15조 기업창업지원과장의 소속을 대전광역시로 명확히 함
- 제16조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게 되므로 이 조례에서 삭제하고, 위원이 아닌 전문가 등은 위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함.

현행	개정 의견
<p>제1장 총칙</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p> <p>2. “기술혁신”이란 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p> <p>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기술혁신 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능하거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p> <p>제7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제1장 총칙</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 따른다.</p> <p>제2장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p> <p>제7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p> <p>2.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p> <p>3.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 지도</p>

<p><u>1. 촉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p> <p><u>2.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지원에 관한 사항</u></p> <p><u>3.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u></p>	<p><u>4.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u></p> <p><u>5.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 협력 지원사업</u></p> <p><u>6.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u></p> <p><u>7.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지원사업</u></p> <p><u>8.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u></p>
<p><u>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u></p> <p><u>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u>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p><u>1. 대전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u></p> <p><u>2.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사업자단체의 임직원</u></p> <p><u>3.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u>제8조(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시장</u> <u>은 기술혁신 성과 등을 사업화 하는 중소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u></p> <p><u>1. 시험제품 제작·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지원</u></p> <p><u>2. 제품 성능검사를 위한 시험·분석 지원</u></p> <p><u>3.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으로 부터 이전받는 기술의 실용화 지원</u></p> <p><u>4. 그 밖에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u></p>
<p><u>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u>제9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원) ① 시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p> <p><u>② 시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u></p> <p><u>1.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u></p> <p><u>2.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u></p> <p><u>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제3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p>

<p>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생략)</p>	<p>제10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촉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p>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p>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p> <p>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제12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2조(위원장)(현행과 같음))</p>
<p>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제13조(위원)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u>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제14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창업지원과장이 된다.</p>	<p>1. 대전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p> <p>2.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사업자단체의 임직원</p> <p>3.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u>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u>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u>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된다.</p> <p>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p> <p>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p> <p>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p> <p>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p> <p>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p>
---	---

<p><u>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u>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p><u>제18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u></p> <p><u>제19조(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u></p> <p><u>제20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원)</u></p> <p><u>제21조(사무의 위탁)</u></p>	<p><u>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p> <p><u>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u></p> <p><u>제16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p> <p><u>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전광역시 기업창업지원과장이 된다.</u></p> <p><u>제18조(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아닌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위원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u>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칙</p> <p><u>제2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u></p>
--	--

<p>제22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p>	<p>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p> <p>제21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p>
---	---

19.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2조(법인격 등)

(가) 조문규정

제2조(법인격 등)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진흥원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 본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2조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설립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재단법인은 민법에 따라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정리할 필요가 있음.

(다) 제안(제2조 개정)

- 제2조를 개정하여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의 설립을 분명하게 규정함.

현행	개정 의견
제2조(법인격 등)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진흥원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 본다.	제2조(설립 등) 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대전경제통상진흥(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원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 본다.

20.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거점 구축과 국제교류 및 협력 강화 등을 위하여 해외에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3조(기능)

(가) 조문규정

제3조(기능) 해외통상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내 중소기업의 통상활동 지원 및 바이어 발굴·매칭
- 2.~6. (생략)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3조 해외통상사무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매칭이라는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인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가능하면 우리말로 규정해 주는 것이 적절함.

(다) 제안(제3조 개정)

- 제3조제1호의 매칭은 연결, 일치를 의미하는 외국어의 우리말 표기로서 이 조에서의 의미는 연결이 가장 가까운 의미라고 보아 매칭을 연결 대치함.

현행	개정 의견
제3조(기능) 해외통상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내 중소기업의 <u>통상활동 및 바이어 발굴·매칭</u> 2.~6. (생략)	제3조(기능) 해외통상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내 중소기업의 <u>통상활동 및 바이어 발굴·연결 지원</u> 2.~6. (현행과 같음)

21. 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3조(시장의 책무)

(가) 조문규정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 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3조 제1항은 대전광역시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사업 플랫폼⁹⁾이라는 용어는 외국어를 한글로 표기한 것으로 일반인이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음. 가능하면 우리말로 바꾸어 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다) 제안(제3조 개정)

- 이 조례에서 “공동사업 플랫폼”이란 공동사업의 장 또는 무대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도록 규정함.

현 행	개정 의견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u>소상공인들의 협업</u> ,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u>소상공인들의 협업 및 공동사업의 무대</u> 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9) 플랫폼은 한마디로 무언가를 타고 내리는 승강장을 의미한다. 본래 기차를 승·하차하는 공간이나 강사, 음악 지휘자, 선수 등이 사용하는 무대·강단 등을 뜻했으나 그 의미가 확대되어 특정 장치나 시스템 등에서 이를 구성하는 기초가 되는 틀 또는 골격을 지칭하는 용어로, 컴퓨터 시스템·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22. 대전광역시 시장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장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8조 및 제59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정의)부터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가) 조문규정

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장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시장상권의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장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장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전광역시 시장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관련된 상위법 규정은 제58조이고 제59조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인용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에 관한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다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위원장의 직무, 회의와 간사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도 상위법을 인용하여

함께 규정하면 조례의 활용이 한층 용이해질 수 있음.

(다) 제안(제1조부터 제3조까지 개정)

- 제1조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8조와 제59조를 함께 인용하여 규정함.
-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관련 사항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조항을 인용하여 규정함.

현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장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장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시장상권의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장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u><신 설></u>	제2조(시장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상권의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장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선임은 전통시장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u><신 설></u>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 위촉 등) 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임기는 전통시장법 제5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

23. 대전광역시 소비자 기본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 (1) 제1조(목적), 제4조(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제6조(불공정 거래행위의 조사)부터 제8조(위원회 구성 등)까지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및 감독 활동 등으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 ①시장은 사업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비자 및 물가안정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5. (생략)

② (생략)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다.

③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국장,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3. (생략)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이 조례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례의 제정을 직접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법령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이므로 제1조에서 이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음¹⁰⁾.
- 제4조는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을 규정하면서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및 감독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고 그 업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공정거래에 관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는 조례에서 이에 대해 규정할 수 없음.
- 제6조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사항으로써 위임 없이는 조례에서 이를 규정할 수 없음¹¹⁾. 그리고 이 조례는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이들 법령의 소관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법령 소관 주의 원칙에도 위배 됨.
- 제7조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중앙기구임. 지방자치단체도 관할 내의 소비자 권익문제를 심사·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자치단체를 관할 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할 수는 있겠으나¹²⁾ 제7조 제1항 제1호의 “물가안정 시책”은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국가사무¹³⁾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은 지 「지방자치법」에 위배 됨¹⁴⁾.
- 제8조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과 제3항 중 당연직위원의 소속이 누락 되어 누가 위원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10)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 소비자 안전에 관한 시책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 결정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사·권고·공표 등 4. 소비자단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소비자의 조직 활동 지원 5.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운영 등 6.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7. 그 밖에 지역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

11) 비록 행정조사라 할지라도 피조사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함.

12) 「소비자기본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육성

13) 「지방자치법」 제11조 제2호 참조

14)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 제안(제1조, 제7조, 제8조 개정, 제4조 및 제6조 삭제)

- 제1조를 「소비자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함께 인용하여 규정함.
- 제4조 및 제6조는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 되므로 이를 삭제함.
- 제7조 제1항 제1호 중 “물가안정” 시책은 국가 가무에 속하여 조례의 제정범위를 벗어나므로 이를 제1호에서 삭제함.
- 제8조 제2항과 제3항의 관직에는 대전광역시를 소속으로 명기함.

현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감독 활동 등으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 ①시장은 사업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비자 및 물가안정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5. (생략)	제7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대전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비자 권익보호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5. (현행과 같음)

<p>② (생략)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u>행정부시장</u>이 된다.</p> <p>③당연직 위원은 <u>일자리경제국장, 보건복지국장</u>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3. (생략) ④·⑤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u>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u>이 된다.</p> <p>③당연직 위원은 <u>대전광역시의 일자리경제국장, 보건복지국장</u>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p>
--	--

24. 대전광역시 유통 분쟁 조정위원회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유통산업 발전법」 제3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통 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유통산업 발전법」 제36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제7조(간사)

(가) 조문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 발전법」 제36조 제7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1조는 “「유통산업 발전법」 제36조 제7항¹⁵⁾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유통산업 발전법」 제36조 제7항은 유통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근거일 뿐 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한 것은 아님. 그런데 「유통산업 발전법」 제36조 제1항은 “유통에 관한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각각 유통 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설치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별도의 설치 규정이 있어야만 위원회가 존재하게 됨. 따라서 이 조례는 조정위원회의 설치를 별도로 규정해 줄 필요가 있고, 상위법률의 인용도 「유통 산업 발전법」 제36조 제7항 만이 아니라 제36조 전체를 인용해 주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제7조는 간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담당자의 소속이 분명하지 않음.
-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 발전법」 제36조 각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다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위원장의 직무, 회의와 간사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관련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규정의 필수 사항에 속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에 관한 사항도 상위법을 인용하여 함께 규정하면 조례의 활용이 한층 용이해질 수 있음.

(다) 제안(제1조 및 제7조 개정, 제2조 및 제4조 신설)

- 제1조를 「유통 산업 발전법」 제36조 전체를 인용하여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
- 제2조로 유통 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인용하여 신설·규정함.
- 위원 위촉 등을 「유통 산업 발전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을 인용하여 제4조로 신설·규정함.
- 제7조를 개정하여 간사 소속을 대전광역시로 명기하고, 이 조를 제9조로 함.

현 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 산업 발전법」 제36조 제7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통 분쟁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1조(목적)이 조례는 「유통 산업 발전법」 제3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통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

15)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p><u>사항을</u>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신 설></u></p> <p>제2조(위원장의 직무) (생략)</p> <p><u><신 설></u></p> <p>제3조(회의) (생략)</p> <p>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생략)</p> <p>제5조(위원의 해촉) (생략)</p> <p>제6조(의견 청취) (생략)</p> <p>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u>소상공인과장이 된다.</u></p> <p>② 간사는 <u>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u></p>	<p><u>요한 사항을</u>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유통 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유통에 관한 「유통 산업 발전법」 제3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대전광역시 유통 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선임은 「유통 산업 발전법」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p> <p>제3조(위원장의 직무) (현행 제2조와 같음)</p> <p>제4조(위원 위촉 등) 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임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p> <p>제5조(회의) (현행 제3조 같음)</p> <p>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현행 제4조와 같음)</p> <p>제7조(위원의 해촉) (현행 제5조와 같음)</p> <p>제8조(의견 청취)(현행 제6조와 같음)</p> <p>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u>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과장이 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	--

25.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관련 상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기본법」 등)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2조(정의)

(가) 조문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에 인력·자금·구매·관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2조는 “상생협력”을 정의하고 있는데 용어의 의미를 직접 기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관련 상위법이 개정되면 조례도 개정해야 하는 등 법적안정성이 문제될 수 있음.

(다) 제안(제2조 개정)

- 제2조의 상생협력을 관련 상위법을 인용해서 정의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제고 함.

현행	개정 의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생협력”이란 <u>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에 인력·자금·구매·관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생협력”이란 <u>용어의 뜻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다.</u>

26.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 (1) 제2조(정의) 및 제3조(지원계획수립),
(가) 조문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대전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의 지원계획 수립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표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너무 넓어 그 의미가 불분명해 질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규정하는 방안이 적절함.
- 제3조는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의 지원계획 수립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표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시장이 수립하는 계획은 특별법 제6조에 있는 기본계획이 아니라 제6조에 따라서 세워지는 기본계획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의미에 맞추어 정리할 필요가 있음.

(다) 제안(제2조 및 제3조 개정)

- 제2조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로 특정함.
- 제3조의 “제6조의 지원 계획”을 그 의미에 맞추어 “제6조에 따른 지원 계획”으로 규

정함. ”제6조의 지원계획“은 제6조에 있는 지원계획이라는 의미(이미 지원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고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은 제6조에 따라 세워지는 지원 계획이라는 의미임.

현행	개정 의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u>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u>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u>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u> 」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의 지원계획 수립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표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표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7. 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 방지 및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관련 상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 (1) 제2조(정의) 및 제7조(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지원협의회 설치)

(가) 조문규정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관련 기관”이란 대전지방경찰청, 대전 준법 지원센터, 금융감독원 대전 충남지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지원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6. (생 략)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일자리경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6. (생 략)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7조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협의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원회 등 기구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는 “---에 ---을 둔다” 또는 “---에 ---을 설치한다”라고 표기하고, 주체의 설치 또는 설립행위를 필요로 할 경우는 “○○○는---에 ---을 설치한다”로 규정(“둔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하며, 설립은 법인격이 있는 경우, 그 외의 경우는 설치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령 입안 방식이므로 이에 따르는 것이 적절함. 제1항에는 협의회의 설치위치가 누락 되었고, 제2항 및 제3항의 관직에는 소속을 명기하여 대상을 명확히 할 것이 필요함.

(다) 제안(제2조 및 제7조 개정)

- 법령의 입안 원칙에 맞추어 제1항은 주체의 설치행위가 필요하므로 “설치 할 수 있다”로, 제2항 및 제3항의 관직에는 소속을 명기하여 대상을 명확히 함.

현 행	개정 의견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p>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u>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u>」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7조(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지원 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1.~6. (생략)</p> <p>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u>위원장은 행정부시장</u>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u>일자리경제국장은</u>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1.~6. (생략)</p>	<p>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u>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u>」제2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7조(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 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대전광역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1.~6. (현행과 같음)</p> <p>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u>위원장은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u>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u>대전광역시 일자리경제국장은</u>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1.~6. (현행과 같음)</p>
--	---

28.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소득향상 등 지역경제 발전과 대전광역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7조(재정지원)

(가) 조문규정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센티브 지급 보전금
2. 자치구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
3. 판매·환전 및 위탁운영 수수료
- 4.~6.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방지와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소요 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7조 제1항은 시장이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고 있는데 어법상 무엇을 지원하는지 즉, 지원의 목적물이 생략되었음.

(다) 제안(제7조 개정)

- 제7조 제1항을 각호 사업에 소요 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리함.

현행	개정 의견
<p>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센티브 지급 보전금 2. 자치구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 3. 판매·환전 및 위탁운영 수수료 4.~6. (생략) <p>② (생략)</p>	<p>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센티브 지급 보전금 2. 자치구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 3. 판매·환전 및 위탁운영 수수료 4.~6. (생략) <p>② (현행과 같음)</p>

29.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2조(정의)

(가) 조문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제외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점가를 말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2조 제2호는 골목상권을 정의하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제외하고 있는데 상점가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상점가로 정의하고 있어서 결국 같은 내용이 되는데 이를 복잡하게 2개의 법률을 인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상권¹⁶⁾을 정의하면서 상점가를 정의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

(다) 제안(제2조 개정)

- 제2조 제2호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만을 인용하여 단순화하고 상가가 아닌 상권을 정의하는 표현으로 바로 잡음.

16)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화와 용역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

현행	개정 의견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p> <p>2. “골목상권”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제외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점가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p> <p>2. “골목상권”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제외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점가의 범위를 말한다.</p>

30, 대전광역시 외국인 투자 지원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국인 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근거법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3조(고용보조금 지원)

(가) 조문규정

제3조(고용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③(생략)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3조 제1항은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14조 제4항이 규정하는 것은 단순한 고용보조금이 아니라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보조금¹⁷⁾을 ②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는 이를 정확하게 규정해야 함. “제14조 제4항에 따라”라는 표현은 고용보조금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한다고 할 경우에 적합한 표현으로 ① 포함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다) 제안(제3조 개정)

- 제3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 제4항이 규정하는 고용보조금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규정함.

31.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관련법률: 「물환경보전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2조(정의) 및 제9조(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가) 조문 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설치 부담금”이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17)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보조금 등”이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말한다.

5. “사용료”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 관로를 포함한다)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운영관리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 및 시설개선충당금

나. 「물환경 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7에 따라 부과되는 오염총량 초과 과징금

다. 법 제41조에 따라 부과되는 배출 부과금

제9조(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

2. 제31조에 따라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

② 배수 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수·폐수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수·폐수량의 산정은 별표 3에 따른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2조 제4호는 설치부담금을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이 조례의 관련 상위법이 되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규정 영역에 해당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이 법과 이 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상위법령이 존재하고 그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자치단체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는 있음. 그러나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서 다시 규정할 필요는 없고, 더욱이 다르게 규정할 수는 없음¹⁸⁾.

이런 견지에서 살펴보면 제2조 제4호의 설치부담금은 법 제48조의2 제1항이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규정함이 타당함.

- 제2조 제5호의 사용료의 경우도 법 제48조의3 제1항이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18) 다르게 규정할 경우 위법한 조례가 됨

규정함이 타당함. 그리고 조례 제2조 제5호는 상위법령과는 다르게 법 제4조의7에 따라 부과되는 오염총량 초과 과징금까지도 사용료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부 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 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할당 오염부하량 등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서 수익자로서 부담하는 사용료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사용료에 포함 시키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우려가 있음.

- 제9조(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제2항은 조 제목과는 다르게 배수 설비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사용료부과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사용료 규정 조항에서 함께 규정함이 적절함.

(다) 제안(제2조 및 제9 조 개정)

- 제2조의 설치부담금과 사용료를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정의함으로써 법령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범위의 오류를 제거함.
- 조례의 내용 중 시설개선충당금도 사용료 산출에 포함되는 항목인데도 별도로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고,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유지관리비만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성격이 다른 오염총량 초과 과징금 및 배출 부과금이 유지관리비와 함께 규정되어 있는 등 상위법령과는 다르게 혼선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한 내용만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현 행	개정 의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생 략) 4. “설치부담금”이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u>비용을 말한다.</u> 5. “사용료”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가 <u>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현행과 같음) 4. “설치부담금”이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u>비용으로서 「물 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 2에 따른 부담금을 말한다.</u> 5. “사용료”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가 <u>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법 제48조의3에 따른 사용료를 말한다.</u>

<p>가. <u>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 관로를 포함한다)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운영관리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 및 시설개선충당금</u></p> <p>나. 「<u>물 환경 보전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7에 따라 부과되는 <u>오염총량 초과 과징금</u></p> <p>다. 제4조의7에 따라 부과되는 <u>오염총량 초과 과징금</u></p> <p>②·③(생략)</p> <p>제9조(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하 각호 생략)</p> <p>② <u>배수 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수·폐수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수·폐수량의 산정은 별표 3에 따른다.</u></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②·③(현행과 같음)</p> <p>제9조(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하 각호는 현행과 같음)</p> <p><u>(사용료 조에서 함께 규정 필요)</u></p>
---	--

32.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2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제4조(운영)부터 제6조(임기)까지, 제11조(수당 등) 및 제13조(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결정 시 이윤율)

(가) 조문규정

제2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대전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경제국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운영) 지원센터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 제6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한다

제5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임기) ①(생략)

②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관계 위원회에서 해촉된 경우 본 위원회에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장은 즉시 변경 추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결정 시 이윤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적정이윤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 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에서 국토교통부고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 제6항 각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이 조례는 내용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명확성의 원칙과 약칭에 의한 간략화 등 경미한 미비점이 있고, 불필요하게 수당 등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음.

(다) 제안 (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3조 개정, 제11조 삭제)

- 약칭에 의한 간략화, 명확성의 원칙 등 경미한 미비점은 대비표를 참고하기 바람.

○ 제11조(수당 등)은 이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함.

현행	개정 의견
제2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대전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일자리경제국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u>	제2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대전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대전광역시 일자리경제국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u>
제4조(운영) 지원센터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u>특례법</u> 」 제5조 제6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한다	제4조(운영) 지원센터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u>특례법</u> 」(이하 " <u>특례법</u> ")이라 한다) 제5조 제6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한다
제5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 「 <u>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u> 」 제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 <u>특례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제6조(임기) ①(생략) ②「 <u>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u> 」 제6조 제2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관계위원회에서 해촉된 경우 본 위원회에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장은 즉시 변경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①(현행과 같음) ② <u>특례법 제6조 제2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관계위원회에서 해촉된 경우 본 위원회에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장은 즉시 위원을 변경해서 추천하여야 한다.</u>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u><삭 제></u>
제13조(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결정 시 이윤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제13조(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결정 시 이윤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p>를 시행령」(이하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적정이윤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 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에서 국토교통부고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 제6항 각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4로 한다.</p>	<p>를」(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적정이윤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 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에서 국토교통부고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 제6항 각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4로 한다.</p>
---	--

33.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 촉진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 (1) 제3조(국고지원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원 특례), 제4조(기업유치 의무) 및 제23조(위원회 설치)

(가) 조문규정

제3조(국고지원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원 특례) 이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 대상 이전 및 신설·증설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산, 사후관리, 환수 등 제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기업유치 의무)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유망

한 기업의 유치, 투자 및 고용 촉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유치와 관련한 지원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한 보조금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회 설치) ①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6.(생략)

② (생략)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3조는 국고지원 대상 이전 및 신설·증설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산, 사후관리, 환수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처럼 다른 법령의 적용·적용배제·우선적용 및 해당 법령의 우선적용과 같이 그 법령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어느 법령이 적용되는지를 규정하는 경우의 그 조 제목에 대한 “법령의 입안 원칙”은 “특례”가 아닌 “다른 법령과의 관계”라고 규정함.
- 제4조 제2항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한 보조금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고 시장의 예산편성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산편성권은 시장의 전속적 권한이고 의회는 예산안에 대해 심사의결권과 결산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특정 사항의 예산편성을 강요하는 규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임.¹⁹⁾
- 제23조는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직접 설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의 입법례는 “---를 둔다”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다) 제안 (제3조, 제4조 및 제23조 개정)

- 제3조는 “법령의 입안 원칙”에 맞추어 “다른 법령과의 관계”로 표현함.
- 시장의 예산편성 전속권을 사전적으로 침해하는 제4조 제2항을 삭제함.

19) 지방자치법상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의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확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사후에 감시·통제할 수 있으나,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안 편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그 권한 행사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 또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권한 행사를 견제·제한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하위법규인 조례로써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내용의 규정을 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이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추87 판결례 등 참조)

- 제23조는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직접 설치하려는 의도이므로 이에 맞게 “-----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를 둔다.”로 표현함.

현행	개정 의견
<p>제3조(국고지원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원 특례) 이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 대상 이전 및 신설·증설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산, 사후관리, 환수 등 제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우선 적용한다.</p> <p>제4조(기업유치 의무)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유망한 기업의 유치, 투자 및 고용 촉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기업유치와 관련한 지원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한 보조금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p> <p>제23조(위원회 설치) ①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1.~6. (생략)</p> <p>②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 대상 이전 및 신설·증설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산, 사후관리, 환수 등 제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우선 적용한다.</p> <p>제4조(기업유치 의무) ①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제23조(위원회 설치) ①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34.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위치 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2조(위탁사무) 및 제3조(감독)

(가) 조문규정

제2조(위탁사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대전광역시장은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인데 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의 관리 권한을 가지는 관리권자는 시·도지사이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음.
- 이 조례 제2조는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상세히 규정을 두고 있음. 즉, 법 제32조 제1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단지의 관리에 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지침²⁰⁾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

20) 법 시행령 제41조(관리지침의 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기준 2. 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의 개발 및 처분 등에 관한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통령령(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관리지침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된 내용을 시행령 제5조21)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조례 제2조의 별표에 규정된 내용은 바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어서 조례에서 이를 다시 규정할 실익이 없음.

- 제3조는 산업단지 관리권자인 대전광역시장의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기관의 인·허가권자로서 그리고 산업단지 관리사무의 위탁자로서 당연히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이 경우 감독권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다) 제안(제2조 및 제3조 개정)

- 제2조는 별도로 존치시킬 실익은 크지 않으나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조례」로서의 지위상 이 규정을 둔다고 한다면 법령의 개폐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상위법령을 인용해 규정함이 적절함.
- 대전광역시장의 감독권 행사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이 조례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으나 이를 조례에 규정한다고 한다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함을 명기하여 규정함.

현행	개정 의견
제2조(위탁사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2조(위탁사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는 법 시행령 제5조의 “산업단지 관리업무”와 같다.
제3조(감독) 대전광역시장은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제3조(감독) 대전광역시장은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의

- 21) 법 시행령 제5조(산업단지의 관리업무) ① 법 제2조 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2.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4.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와 관련한 업무 5.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6.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7.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8.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9.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10. 산업단지 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

<u>중지시킬 수 있다.</u>	<u>규정에 따라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u>
-------------------	-----------------------------------

35.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및 제5조(관리 및 운용)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관리 및 운용) ①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농촌지도자육성 및 명품특화사업육성 분야로 구분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기금의 집행은 해당연도 이자 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이 기금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기금의 설치 조문이 없음. 기구나 기관, 기금 등의 설치는 목적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 내용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별도의 설치 규정을 두어야 함.
- 기금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그 것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를 설치법령에서 규정해야 하는데 이 조례에서는 이를 누락 하였음.

(다) 제안(제5조 개정, 제2조의2 신설)

- 제2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 설치를 규정함.
- 제5조에 기금의 관리 운영자를 대전광역시장으로 규정함.

현행	개정 의견
<u><신 설></u>	제2조의2(기금 설치)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대전광역시 농업발전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제5조(관리 및 운용) <u><신 설></u>	제5조(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대전광역시장이 관리·운용한다.
①~③ (생략)	②~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36.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4조(스마트농업육성계획 수립)

(가) 조문규정

제4조(스마트농업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 마다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

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 3.~7. 생략)
- ③·④ (생략)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4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법 제14조 제1항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제3항에서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도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법 제14조에는 기본계획과 시·도 계획이 함께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가 지칭하는 계획이 어느 계획인지를 특정할 필요가 있음.

(다) 제안(제4조 개정)

- 제4조의 계획을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라고 규정 함

현행	개정 의견
제4조(스마트농업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 마다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제4조(스마트농업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 마다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p>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p> <p>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p> <p>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p> <p>3.~7. 생략)</p> <p>③·④ (생략)</p>	<p>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p> <p>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p> <p>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p> <p>3.~7.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	--

37.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4조(동물복지계획), 제5조(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및 제7조(맹견의 관리)

(가) 조문규정

<p>제4조(동물복지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1. 동물보호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p> <p>2. 동물보호정책의 중점 추진과제와 세부 사업에 관한 사항</p> <p>3.~5. (생략)</p> <p>제5조(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①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을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7조(맹견의 관리) ① 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맹견을 격리 조치하는 경우 보호</p>
--

조치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절한 보호조치가 가능한 동물병원
2. 시장이 맹견의 보호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장소
- ② 법 제13조의3 제4호에 따라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4. (생 략)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4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동물복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하 "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 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조례에서는 위임근거를 밝혀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제5조는 제1항은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등록 대상 동물을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업무 대행은 법 제1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용 조문을 정확하게 표기할 필요가 있음.
- 제7조는 법 제13조의3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맹견에 대해 소유자의 동의 없이 격리 조치 할 수 있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위법령에서는 격리조치 시에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으로 규정하고 있는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도 이를 인용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다) 제안(제4조, 제5조 및 제7조 개정)

- 제4조의 동물복지계획을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대전광역시 동물복지계획"이라고 정확히 규정함.
- 제5조 제1항을 등록 대행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12조 제4항을 함께 인용함.
- 제7조를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별표 3에 따른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을 포함 하여 규정함.

현행	개정 의견
제4조(동물복지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	제4조(동물복지계획) 시장은 법 제4조제2

<p><u>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보호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 전략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정책의 중점 추진과제와 세부 사업에 관한 사항 3.~5. (생략) <p>제5조(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①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u>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u> 등록대상 동물을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7조(맹견의 관리) ① <u>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u> 맹견을 격리 조치하는 경우 <u>보호조치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절한 보호조치가 가능한 동물병원 2. 시장이 맹견의 보호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장소 <p>② (생략)</p>	<p><u>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동물복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보호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 전략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정책의 중점 추진과제와 세부 사업에 관한 사항 3.~5. (현행과 같음) <p>제5조(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①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u>법 제12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u> 등록대상 동물을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맹견의 관리) ① <u>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u> 맹견을 격리 조치하는 경우에는 <u>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별표3에 따른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보호조치장소에 격리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절한 보호조치가 가능한 동물병원 2. 시장이 맹견의 보호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장소 <p>② (현행과 같음)</p>
---	---

38. 대전광역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식생활 교육 지원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 (1) 제3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제5조(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및 제7조(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가) 조문규정

제3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대전광역시의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학교급식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5조(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식생활 교육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5. (생략)

제7조(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6.(생략)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3조 제1항 제3호는 학생들에 대한 식생활 교육의 방향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체 문맥의 앞뒤가 잘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음. 즉,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과 중·고등학교는 조화되지 않으므로 문맥이 자연스럽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제5조는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 제목과는 다르게 조 본문에는 설치내용이 없음. 그런데 「식생활 교육 지원법」 제20조에서는 “시·도계획 및 시·군·구 계획의 심의,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하여 시·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와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에서 별도 조문으로 이를 설치해 주어야 위원회가 존재하게 됨.
- 제7조는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위법 규정인 「식생활 교육 지원법」 법 제25조의2 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를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규정할 필요가 있음.

(다) 제안(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7조 개정)

- 제3조 제1항의 대상을 “어린이 등”으로 표현하여 전체 학생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함.
- 제5조 제1항을 설치를 포함하여 규정함.
- 제7조를 상위법과 조화될 수 있도록 규정함.

현행	개정 의견
제3조(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 ①대전광역시 역시의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생략) 3. 식생활 교육은 <u>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u> 보육시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학교급식과 연계하여 <u>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u>	제3조(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 ①대전광역시 역시의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현행과 같음) 3. 식생활 교육은 <u>어린이 등 학생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u> 보육시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학교급식과 연계하여 <u>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u>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식생활 교육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대전광역시 식생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식생활 교육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대전광역시 식생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식생활 교육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5. (생략)	제5조(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식생활 교육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대전광역시 식생활 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대전광역시에 둔다. 1.~5. (현행과 같음)
제7조(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의2에 따라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다.

1.~6. (생략)	1.~6. (현행과 같음)
------------	----------------

39. 대전광역시 가축 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가축 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2조(구성)

(가) 조문규정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가축 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일자리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3. (생략)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2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설치된 “대전광역시 가축 방역심의회”의 구성을 제4조 제6항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조항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음.

(다) 제안(제2조 개정)

- 제2조를 관련 법률조항을 포함하여 규정함.

현행	개정 의견
----	-------

<p>제2조(구성) ① <u>대전광역시 가축 방역심의 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위원장은 일자리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3. (생략)</p>	<p>제2조(구성) ① 「<u>가축전염병 예방법</u>」(이하 “<u>예방법</u>”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가축 방역심의회(이하 “<u>심의회</u>”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	---

40.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관련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 (1) 제2조(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 제5조(도매시장 공판장의 업무조례 적용) 및 제7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가) 조문규정

제2조(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장소 및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도매시장 공판장의 업무조례 적용) 법 제46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와 관련하여 도매시장 내의 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의 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 유통인 및

경매사도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평가 결과 지정기간 동안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 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평가 결과 재무 건전성 부문 평가점수가 지정기간 동안 3회 이상 업체 평균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2조는 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전광역시에 두는 여러 개의 도매시장을 하나의 도매시장인 것처럼 고유명사(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로 규정하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제5조의 의미는 도매시장 공판장의 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 유통인 및 경매사에 대하여 이를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고 도매시장 관련 규정인 이 조례 제3장 중도매인, 제4장 매매참가인, 제5장 산지 유통인 및 출하자 등의 도매시장 규정을 적용하려는 의도로 보임.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함) 제46조가 도매시장 공판장에 대하여 도매시장의 관련 법률을 준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이 공판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에 관하여 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제16조 제1항 및 제17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도 이를 같은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제7조는 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 제23조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제1항),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의 경합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 금지(제2항), 도매시장 법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요건(제3항),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의 대통령령위임(제6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법 제82조 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제1항이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사유²²⁾로 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일정 수준의 부정 평가를 받을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 유

22) 1. 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 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재무 건전성 평가점수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평균 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효기간이 경과 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생각건대, 법이 재지정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을 허용하지 않음을 의도한 것은 아니고 재지정의 경우도 처음 지정할 때와 같은 요건과 절차 등을 거쳐서 지정할 것을 의도한 결과인 것으로 보임.
- 이렇게 볼 경우 법 제82조 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제1항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 사유는 지정기간 내에서의 조치사항일 뿐이지 이를 재지정 시에 까지 적용할 의도는 아닌 것으로 해석됨.²³⁾이렇게 볼 경우 제7조 제2항은 상위법령을 위배될 우려가 있음.

(다) 제안(제2조, 제5조 및 제7조 개정)

- 제2조의 대전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고유명사로 보일 수 있으므로 일반명사로 해석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5조는 도매시장 공판장의 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 유통인 및 경매사에 대하여도 이 조례 제3장 중도매인, 제4장 매매참가인, 제5장 산지 유통인 및 출하자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규정함.
- 상위법령에 위배가 우려되는 제7조 제2항을 삭제함.

현 행	개정 의견
제2조(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 <u>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u> (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장소 및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 <u>대전광역시에 두는 농수산물도매시장</u> (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장소 및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도매시장 공판장의 업무조례 적용) <u>법 제46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u>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와 관련하여 <u>도매시장 내의 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의 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 유통인 및 경매사도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u>	제5조(도매시장 공판장의 업무) <u>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u>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와 관련하여 <u>도매시장 내의 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의 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 유통인 및 경매사에 대하여도 이 조례 제3장(중도매인) 내지 제6장(매매 및 대금결제 방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u>
제7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	제7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

23) 지정이 취소된 법인 일지라도 지정취소 후에 평가항목 충족이 보완 될 수도 있으므로 재 기회를 준다는 측면임.

<p>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1. 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평가 결과 지정기간 동안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 평가를 받은 경우</p> <p>2. 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평가 결과 재무 건전성 부문 평가점수가 지정기간 동안 3회 이상 업체 평균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p>	<p>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삭 제></p>
--	--

제2절 과학산업국(제9편)

1.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대전광역시의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함으로써 과학의 대중화와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 벤처기업의 육성·지원 등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관련법: 「과학기술기본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5조(기능)

(가) 조문규정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6. (생략)

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심의사항
8.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 선정
9. 10. (생략)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5조의 위원회 기능 중 제7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심의사항”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못함.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2항은 각 기금별로 설치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정 기금에 관한 규정이 아님. 제7호의 규정은 모든 기금의 심의사항을 이 조례의 과학기술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리고 제8호의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 선정”은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제36조 제2항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함께 규정해 줄 필요가 있음.

(다) 제안(제5조 개정)

- 제5조의 제7호는 이 조례의 과학기술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은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심의사항이 아니라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인 것임. 그리고 제8호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규정함.

현행	개정 의견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6. (생략) 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심의사항 8. <u>이달의</u> 과학기술인상 수상자 선정 9. 10. (생략)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6. (현행과 같음) 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8. 「 <u>대전광역시 포상 조례</u> 」 제36조 제2항에 따른 <u>이달의</u> 과학기술인상 수상자 선정 9. 10. (현행과 같음)

(2) 제15조(기금설치), 제18조(기금의 운용·관리) 및 제22조(세계과학도시연합지원)

(가) 조문규정

제15조(기금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

법」에 따라 과학기술혁신 및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과 과학기술 연구개발, 중소기업창업 활성화 지원, 벤처기업의 육성·지원, 산학연 협력을 통한 신기술 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과학기술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②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과학산업국장이,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시장은 기금 조성 목표액에 미달한 경우라도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세계과학도시연합지원) ①시장은 세계과학도시연합(WTA)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세계과학도시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세계과학도시연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유재산을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무상대부
3. 세계과학도시연합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시 소속 공무원의 파견 대행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15조의 대전광역시과학기술육성기금 설치에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설치 안 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제18조는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제22조 제1항 제2호는 의미가 통할 수 있으나 자연스럽지 못한 표현으로 보임.

(다) 제안(제15조, 제18조 및 제22조 개정)

- 제15조의 대전광역시과학기술육성기금 설치를 조례가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
- 제18조에 누락 된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를 항으로 신설함.
-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수정함.

현행	개정 의견
제15조(기금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혁신 및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과 과학기술 연구개발, 중소기업	제15조(기금설치)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혁신 및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과 과학기술 연구개발, 중소기업

<p>발, 중소기업창업 활성화 지원, 벤처기업의 육성·지원, 산학연 협력을 통한 신기술 개발사업 등을 <u>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과학기술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u></p> <p>제18조(기금의 운용·관리) <u><신 설></u></p> <p>① ~ ③ (생략)</p> <p>제22조(세계과학도시연합지원) ①시장은 세계과학도시연합(WTA)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계과학도시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u>세계과학도시연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유재산을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무상대부</u> 3. 세계과학도시연합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시 소속 공무원의 <u>파견 대행한다.</u> 	<p>창업 활성화 지원, 벤처기업의 육성·지원, 산학연 협력을 통한 신기술 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u>대전광역시과학기술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u></p> <p>제1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대전광역시장이 관리·운용한다.</p> <p>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p> <p>제22조(세계과학도시연합지원) ①시장은 세계과학도시연합(WTA)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계과학도시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u>시유재산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사용·수익 또는 무상대부</u> 3. 세계과학도시연합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시 소속 공무원의 <u>파견</u>
---	---

2.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을 기획·평가하고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및 제2조(법인격)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을 기획·평가하고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법인이나 기관·기금 등의 설립·설치를 목적 규정에 두고 있음. 그런데 목적 규정만으로 법인 등이 설립·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그 조례에서 법인이나 기관 등을 설립·설치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임.
- 목적 규정은 그 조례의 실체적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 등의 설치근거 규정이 필요함.

(다) 제안(제1조 및 제2조 개정)

- 제2조에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설립과 법인격을 함께 규정함.

현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을 기획·평가하고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신 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전과학산업진흥원) 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을 기획·평가하고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진흥원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

3.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테크노파크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명,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및 제10조(재산출연)

(가) 조문규정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테크노파크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대전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는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10조(재산출연) 시장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테크노파크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자금의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조례 제목은 조례의 내용을 함축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조례 내용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음. 제목 중 재단법인은 본문 제2조와 중복되고 또 법인격은 본문에서 규

정함이 타당함. 다만, 본문에서 법인의 명칭을 “재단법인 ○○○”라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이 조례는 목적 규정의 내용으로 대전테크노파크가 설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처럼 이해되나 목적 규정은 실체 규정이 아니어서 별도로 법인의 설립 규정을 두어야만 설립이 완성됨. 다만, 법인의 설립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재단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는데 조례에서 설립을 규정하는 의미는 법인격을 부여할 기관의 설립을 규정하는 것임.
- 제10조는 시장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라 대전테크노파크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자금의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출연 등의 근거로 열거된 법률을 살펴보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는 제1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열거 근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출연 등의 대상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사업시행자”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인데 대전테크노파크의 지위는 그 정관으로 볼 때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 사업시행자 또는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는 자 등으로는 보이지 않고 사업시행자 또는 대전광역시장을 지원하는 자로 판단됨. 따라서 열거된 법률은 대전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출연의 근거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²⁴⁾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음. 그리고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설치 근거가 조례에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전테크노파크에 대하여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례로는 출연만을 규정할 수 있고, 그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이 되는 것으로 보임.

(다) 제안(제명, 제1조, 제2조 및 제10조 개정)

24) 제2항 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

- 조례의 제목에서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단법인을 삭제함.
- 제2조에서 대전테크노파크의 설립과 법인격을 함께 규정함.
- 대전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 근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2항으로 바로 잡음.

현행	개정 의견
<p><u>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테크노파크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법인격) 대전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는 재단법인으로 한다.</p> <p>제10조(재산출연) 시장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테크노파크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자금의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p>	<p><u>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테크노파크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대전테크노파크) 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테크노파크(이하“테크노파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테크노파크는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p> <p>제10조(출연 또는 보조)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2항에 따라 테크노파크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자금의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p>

4.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등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고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정보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및 제3조(법인격)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등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고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정보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인격)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법인이나 기관·기금 등의 설립·설치는 이를 의도 하는 조례의 목적 규정만으로 설립·설치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령에서 법인이나 기관 등을 설립·설치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임.
- 목적 규정은 그 조례의 실체적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법인을 설치하는 근거규정을 두어야 할 것임.

(다) 제안(제1조 및 제2조 개정)

- 제2조에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설립과 법인격을 함께 규정함.

현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등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고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정보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u>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법인격) <신 설></u></p> <p><u>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u></p>	<p><u>제2조(대전과학산업진흥원) ①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등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고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정보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u></p> <p><u>② 진흥원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u></p>
--	---

5.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5조(실태조사)

(가) 조문규정

<p>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무인항공기 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무인항공기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문서열람·시료 채취 등을 행하는 행정조사의 일종인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러므로 조사대상자의 자발

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조사가 아닌 이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따라서 무인항공기 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포괄 위임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 될 가능성이 있음.

(다) 제안(제5조 개정)

- 무인항공기 산업 관련된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포괄 위임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 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행정조사기본법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한다.

현 행	개정 의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무인항공기 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무인항공기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무인항공기 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무인항공기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6. 대전광역시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초연결·초지능을 기반으로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1조(수당 등)

(가) 조문규정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실무위원회의 위원, 추진단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11조는 위원회의 위원, 실무위원회의 위원, 추진단 및 관계 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 참석수당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위원회운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고, 실제 지급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므로 개별조례에서는 이를 중복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음, 다만, 위원이 아닌 추진단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운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완이 필요함.

(다) 제안(제11조 개정)

- 제11조의 수당 등에 관하여 위원회운영조례에서 추진단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에서 지급을 규정해 줄 필요가 있음.

현 행	개정 의견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실무위원회의 위원, 추진단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회 위원이 아닌 실무위원회 위원, 추진단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7.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이념과 대전광역시·사업자·대전광역시민 등의 책무를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관련법: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29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

(가) 조문규정

제29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②~③ (생략)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29조 제1항은 시장이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는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항의 경우²⁵⁾에만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아무런 제한 없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 될 수 있음.

2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③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5. 법 제24조 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6. 사용·수익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를 사용·수익허가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이하 생략)

(다) 제안(제29조 개정)

- 제29조 제1항의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6조의2 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제한함.

현행	개정 의견
29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u>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분 할 수 있다.</u> ②~③ (생략)	29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u>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6조의2 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분 할 수 있다.</u> ②~③ (현행과 같음)

8. 대전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대전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및 제2조(설립)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 디자인 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대전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대전디자인 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법인이나 기관·기금 등의 설립·설치는 이를 의도 하는 법령의 목적 규정만으로 설립·설치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조례에서 법인이나 기관 등을 설립·설치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임.
- 목적 규정은 그 조례의 실체적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 설치에 대한 근거 조문을 따로 두어야 할 것임.

(다) 제안(제1조 및 제2조 개정)

- 제2조에서 대전디자인진흥원의 설립과 법인격을 함께 규정함.

현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 디자인 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대전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디자인진흥원의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대전 디자인 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2조(대전디자인진흥원) ① 「산업 디자인 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역 디자인 특화사업·진흥사업·기반구축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대전디자인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 한다. ② 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지역디자인센터로 본다.

제3절 문화체육관광국(제12편)

1.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 (1)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제7조(기금의 관리)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문화예술진흥 도모를 위하여 대전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대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전 문화재단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2조는 재단의 법인격을 규정하면서 재단의 설립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제1조 목적에서 설립을 규정했으므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목적 규정은 해당 조례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으로서 제정목적과 입법 취지를 담고 있어 개별조문의 구체적 의미를 명확히 하는 해석지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함.
- 그러나 목적 규정은 실제 규정과는 다르게 조문이 의도하는 조례효과를 발생시키지

는 못하며, 실제의 조례효과를 창설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정하는 실체 규정이 있어야 함. 그래야만 비로소 법인격 부여를 위한 기관이 존재하게 되는 것임.

- 다만,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 법인이나 재단 법인은 조례의 설립 규정으로 법인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고 「민법」이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행위를 하고 설립등기를 하게 되면 비로소 「민법」 제33조에 따라 재단이 성립 즉, 법인격을 취득하게 됨. 따라서 조례에서 설립을 규정하는 것은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한 기관을 설립한다는 의미임.
- 제6조는 조 제목은 “기본재산 조성”이라고 명명했으나 실제 내용은 “대전 문화재단 기금”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어서 조 제목과 내용 간에 괴리가 있어 보임. 그리고 이 기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설치하는 것이므로 관리·운용의 주체는 대전광역시장이 됨. 또한 기금은 조례로 직접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 행위자 없이 “---둔다.” 또는 “---를 설치 한다”로 규정 할 수 있음.
- 제7조의 조 제목은 “기금의 관리”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기금의 계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그리고 세부 운영 규정은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다) 제안(제2조, 제6조 및 제7조 개정)

- 제2조를 개정해서 법령의 일반적인 입안례에 따라 재단의 설립행위의 주체와 재단의 설립 근거를 함께 직접 규정하여 기관설립을 완성하고, 법인격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제2항에서 재단은 법인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과 「민법」 제32조를 함께 인용하여 별도 항으로 규정함.
- 제6조의 조 제목을 “기금의 설치” 변경하고,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제2항²⁶⁾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 주체를 대전광역시장으로 규정하며, 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제7조 기금의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 즉, 운영 규정은 그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현 행	개정 의견
제2조(법인격) 대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2조(대전문화재단)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대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제

26)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②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관리한다.

<p>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전 문화재단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2항에 따라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한다.</p>
<p>제7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p>	<p>제6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대전 문화재단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 기금은 대전광역시장이 운용·관리한다.</p> <p>③ 제2항의 운용·관리는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7조(기금의 계정)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p> <p>② 기금의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2.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내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2조(정의) 및 제9조(실태조사)

(가) 조문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노동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2조 “예술인”을 정의하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를 인용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너무 넓음.
- 제9조는 예술인 노동실태 실태조사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음. 그런데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문서열람·시료 채취 등을 행하는 행정조사의 일종인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조사가 아닌 이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²⁷⁾
- 따라서 예술인 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포괄 위임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 될 소지가 있음.

(다) 제안(제2조 및 제9조 개정)

- 제2조의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로 인용 조문을 명확히 표기 함.
- 제9조의 실태조사는 그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포괄 위임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 될 소지가 있으므로 「행정조사기본법」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

현 행	개정 의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u>제2조에 따른 자</u> 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u>제2조 제2호에 따른 자</u> 를 말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노동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노동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7)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및 제5조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	---

3. 대전 고암 미술문화재단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미술 문화의 진흥과 고암 이응노 작품의 전시 등에 관한 전문기관 역할 수행을 위한 대전 고암 미술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 (1) 제1조(정의), 제2조(법인격),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제7조(기금의 관리)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미술 문화의 진흥과 고암 이응노의 작품전시 등에 대한 전문기관 역할 수행을 위하여 대전 고암 미술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대전 고암 미술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전 고암 미술문화재단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2조는 재단의 법인격을 규정하면서 재단의 설립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아마도 제1조 목적에서 설립을 규정했으므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목적 규정은 해당 법령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간

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으로서 제정목적과 입법 취지를 담고 있어 개별조문의 구체적 의미를 명확히 하는 해석지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함. 그러나 목적 규정은 실체 규정과는 다르게 조문이 의도하는 법령효과를 발생시키지는 못하며, 실제의 법령효과를 창설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정하는 실체 규정이 있어야만 함. 그래야만 비로소 법인격 부여를 위한 기관이 존재하게 되는 것임.

- 다만,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 법인이나 재단 법인은 조례의 설립 규정으로 법인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고 「민법」이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행위를 하고 설립등기를 하게 되면 비로소 「민법」 제33조에 따라 재단이 성립 즉, 법인격을 취득하게 됨. 따라서 조례에서 설립을 규정하는 것은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한 기관을 설립한다는 의미임.
- 제6조는 조 제목은 “기본재산 조성”이라고 명명했으나 실제 내용은 “대전 문화재단 기금”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어서 조 제목과 내용 간에 괴리가 있어 보임. 그리고 이 기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설치하는 것이므로 관리·운용의 주체는 대전광역시장이 됨. 또한 기금은 조례로 직접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 행위자 없이 “---둔다.” 또는 “---를 설치 한다”로 규정 할 수 있음.
- 제7조의 조 제목은 “기금의 관리”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기금의 계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그리고 세부 운영 규정은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다) 제안(제2조, 제6조 및 제7조 개정)

- 제2조를 개정해서 법령의 일반적인 입안례에 따라 재단의 설립행위의 주체와 재단의 설립 근거를 함께 직접 규정하여 기관설립을 완성하고, 법인격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제2항에서 재단은 법인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과 「민법」 제32조를 함께 인용하여 별도 항으로 규정함.
- 제6조의 조 제목을 “기금의 설치” 변경하고,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제2항²⁸⁾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 주체를 대전광역시장으로 규정하며, 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제7조 기금의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 즉, 운영 규정은 그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현 행	개정 의견
제2조(법인격) 대전 고암 미술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제2조(대전문화재단)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대전 고암 미술

28)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②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관리한다.

<p><u>로 한다.</u></p> <p><u>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전 고암 미술문화재단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p> <p><u>제7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u></p>	<p><u>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u></p> <p><u>② 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한다.</u></p> <p><u>제6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대전 고암 미술문화재단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p> <p><u>② 기금은 대전광역시장의 운용·관리한다.</u></p> <p><u>③ 제2항의 운용·관리는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u></p> <p><u>제7조(기금의 계정)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u></p> <p><u>② 기금의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	--

4.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와 시민의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관련 법: 「국어기본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3조의2(시행계획) 및 제4조의2(국어진흥위원회의 설치)

(가) 조문규정

제3조의2(시행계획) ① 시장은 「국어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4조의2(국어진흥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3조의2 제1항의 「국어기본법」 상의 “국어 발전 기본계획”은 제5조가 아니라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제4조의2의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위원회는 그 설치 주체를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를 설치 한다”로 표기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움.

(다) 제안(제3조의2 및 제4조의2 개정)

- 제3의2 제1항의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인용 조문을 「국어기본법」 제6조로 수정함.
- 제4조의2를 설치 주체가 있음을 감안하여 “---를 설치 한다”로 표기함.

현행	개정 의견
제3조의2(시행계획) ① 시장은 「 <u>국어기본법</u> 」 제5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3조의2(시행계획) ① 시장은 「 <u>국어기본법</u> 」 제6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4조의2(국어진흥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u>를 둔다.</u>	제4조의2(국어진흥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u>를 설치 한다.</u>

5. 대전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관련 법: 「장애인복지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2조(정의)

(가) 조문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3. (생략)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2조 제1항의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이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법령 체계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관련 법률의 관계 규정을 인용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다) 제안(제2조 개정)

- 상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예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규정함.

현행	개정 의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3.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다. 2. 3. (현행과 같음)

6.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199번 길 37-1에 둔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1조는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이하“센터”라 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는 설치를 규정하는 실체적 근거 규정이 없음. 기구나 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목적 규정의 설치내용만으로 기구 등이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설치를 의도하는 실체 규정이 있어야 비로소 기구 등의 설치가 완성되므로 제2조에서 이를 보완 할 필요가 있음.

(다) 제안(제2조 개정)

- 제2조 제1항에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를 조례로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 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

현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대전광역시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위치)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	제2조(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①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테미에

로 199번 길 37-1에 둔다.	술창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199번 길 37-1에 둔다.
--------------------	--

7. 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2조(정의)

(가) 조문규정

제2조(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협의회) ①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8조²⁹⁾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른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2조는 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구성·운영 사항 중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8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 즉, 위원임기(제1항), 협의회의 회의(제2항), 간

29) 제8조(지역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지역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각호 생략) ③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에서 “시·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시·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⑤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각호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사(제3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8조 제1항은 지역 국제문화교류협회의 설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협의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실체 규정으로 협의회 설치 규정을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누락하고 있음.

(다) 제안(제2조 개정)

- 제2조 제1항으로 대전광역시장이 「국제 문화교류 진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협회를 설치함을 규정함.

현행	개정 의견
제2조(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협회) <u><신 설></u> ①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른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협회) ① <u>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국제 문화교류 진흥법」 제 8조 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치한다.</u> ②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른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8.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대전광역시립 예술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및 제2조(구성)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대전광역시립예술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대전광역시장이 된다.
②~④ (생략)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o 제1항은 대전광역시립예술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이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예술단의 설치를 규정하는 실체 규정이 없음.

(다) 제안(제1조 및 제2조 개정)

- o 제2조를 개정하여 제1항으로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 규정을 신설함.

현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대전광역시립예술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립예술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대전광역시장이 된다. ②~④ (생략)	제2조(대전광역시립예술단) ① 대전광역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대전광역시립예술단(이하“예술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예술단의 단장은 대전광역시장이 된다. ③~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9.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대전예술가의 집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제2조(위치) 및 제6조(운영위원회)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대전예술가의 집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대전예술가의 집(이하 “예술가의 집”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32(문화동)에 둔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예술가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술가의 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⑤ (생략)

⑥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대전예술가의 집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인데 대전예술가의 집을 설치하는 규정이 없음. 단순한 건물이 아닌 어떤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조직과 시설의 집합체인 대전예술가의 집은 이를 조례로 설치해 주어야 비로소 이 조례상 그 실체가 존재하게 됨.

(다) 제안(제1조 및 제2조 개정)

- 제1조와 제2조에 “대전예술가의 집” 설치를 규정함.

현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u>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대전예술가의 집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u>이 조례는 대전예술가의 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위치) <신설> <u>대전예술가의 집(이하 “예술가의 집”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32(문화동)에</u>	제2조(대전예술가의 집) ① 대전광역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대전예술가의 집(이하 “예술가의 집”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② 예술가의 집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32(문화동)에 둔다.

10.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4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제21조(권한의 위임)

(가) 조문규정

제14조(미술작품의 설치절차) ①시장은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 설치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1.~2. (생략)
3. 영 제13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 4.~6. (생략)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14조는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설치 의무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근거를 인용해 줄 필요가 있음.
- 제21조는 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의 내용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적절함.

(다) 제안(제14조, 제21조 개정)

- 제14조에서 「문화예술진흥법」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
- 제21조에서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함.

현행	개정 의견
제14조(미술작품의 설치절차) ①시장은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u>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 설치 의무가</u>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14조(미술작품의 설치절차) ①시장은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u>건축주에게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의무가</u>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2. (생략) 3. <u>영 제13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u> 4.~6. (생략)	제2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2. (현행과 같음) 3. <u>영 제13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u> 4.~6. (현행과 같음)

11. 대전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문학진흥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8조(설치)

(가) 조문규정

제18조(설치) 시장은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문학관 지역등록심의회(이하 “지역등록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항
2. 3. (생략)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18조 제1호는 문학관 지역등록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두 가지 내용 즉, 국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서면으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것을 심의하는 지를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 제안(제18조 개정)

- 문학관 지역등록심의회는 지역 문학관의 등록신청 받을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한 기구이므로 이에 맞추어 제18조 제1호를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문학관 등록기준 충족 여부”로 분명하게 규정함.

현행	개정 의견
제18조(설치) 시장은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18조(설치) 시장은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p>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문학관 지역등록심의회(이하 “지역등록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1.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항</p> <p>2. 3. (생략)</p>	<p>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문학관 지역등록심의회(이하 “지역등록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1.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문학관 등록기준 충족 여부</p> <p>2. 3. (현행과 같음)</p>
--	--

12.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테미오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3조(위치)

(가) 조문규정

제3조(위치) 테미오래는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05번 길 13(대흥동) 일원에 둔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테미오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인데 테미오래를 설치하는 실체 규정이 없음.

(다) 제안(제3조 개정)

- 제3조에 테미오래의 설치 규정을 함께 둠.

현행	개정 의견
제3조(위치) 테미오래는 대전광역시 중구	제3조(테미오래) ①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역

<u>보문로 205번 길 13(대흥동) 일원에 둔다.</u>	<u>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대</u> <u>전광역시 테미오래를 설치한다.</u> <u>② 테미오래는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u> <u>205번 길 13(대흥동) 일원에 둔다.</u>
-----------------------------------	--

13. 대전광역시 서예 진흥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2조(정의) 및 제3조(위치)

(가) 조문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실태조사)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예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서예 창작 환경과 서예 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생략)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 하면서 「서예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너무 넓어 어느 것을 지칭하는지 확인할 수가 없음.
- 제3조 제3항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뢰라는 용어가 명확하지 않음.

(다) 제안(제2조 및 제3조 개정)

- 제2조의 용어 정의를 「서예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함.
- 제3조 제3항 중 의뢰를 법률용어인 위탁으로 규정함.

현행	개정 의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u>선</u>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실태조사)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예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서예 창작 환경과 서예 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실태조사)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예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서예 창작 환경과 서예 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생략)	②(생략)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u>단체에 의뢰</u>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u>단체에 위탁</u> 할 수 있다.

14.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8조(사용·수익의 조건)

(가) 조문규정

제8조(사용·수익의 조건) 영 제15조 제1항 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할 것
2.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8조 제2호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재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시장이 정하는 것의 형식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함.

(다) 제안(제8조 개정)

- 제8조 제2호의 시장이 정하는 형식을 그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현 행	개정 의견
제8조(사용·수익의 조건) 영 제15조 제1항 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할 것 2.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u>시장</u> 이 정하는 사항	제8조(사용·수익의 조건) 영 제15조 제1항 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할 것 2.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u>규칙</u> 으로 정하는 사항

15.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근거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9조(기금의 관리·운용) 및 제24조의2(운동경기부의 설치)

(가) 조문규정

제1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통합관리기금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제24조의2(운동경기부의 설치)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시에 운동경기부를 둔다. ②·③(생략)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19조는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의 관리·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금의 운용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음.
- 제24조의2는 시장으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시에 운동경기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관계 조항은 제10조 제4항이므로 이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함.

(다) 제안(제19조 및 제24조의2 개정)

- 제19조는 기금의 운용·관리 주체를 시장으로 명기하고, 제24조의2는 제10조 제4항으로 정확하게 표기함.

16.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대전광역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 (1) 제11조(사용료의 징수), 제12조(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제22조(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가) 조문규정

제11조(사용료의 징수)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상행위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으로 구분하여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와 같이 정한다.

②~④(생략)

⑤이용자가 소정 시간을 계속하여 연장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1시간마다 소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추가 징수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은 이를 1시간으로 본다.

⑥덕암 축구센터 선수 숙소의 사용료는 「스포츠산업 진흥법」과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12조(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③(생략)

④전용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단체 입장자에게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⑤시장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2항의 프로경기 및 일반행사 사용료 징수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제22조(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11조의 조 제목은 사용료의 징수인데 가항의 내용은 사용료 뿐만 아니라 이용료의 징수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 제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제6항은 덕암 축구센터 선수 숙소의 사용료를 「스포츠산업 진흥법」과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4조에서 공유재산인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에서는 제6조에서 “사용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둘 법령의 개별조문을 각각 정확하게 적시하여 규정하는 것이 법령의 명확성 원칙에 보다 부합된다고 할 것임.
- 제12조는 제4항 및 제5항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리고 “체육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사용료를 할인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것은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시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하여 경감 사유와 구체적인 경감 비율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제22조는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필요사항을 규정 하던지, 아니면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 제4조의 스포츠산업진흥위원회와 같이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다) 제안(제11조, 제12조 및 제22조 개정)

- 제11조의 조 제목을 각 항에 이용료 등도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 하여 “사용료 등”으로 표기 함. 그리고 제6항은 덕암 축구센터 선수 숙소의 사용료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 제4항 및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징수 하도록 함.
- 제12조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하여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 제22조의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가 대행 하도록 규정함.

현 행	개정 의견
제11조(사용료의 징수)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상행위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으로 구분하여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와 같이 정한다. ②~④(생략) ⑤이용자가 소정 시간을 계속하여 연장 사용하는 경우에는 --- (이하 생략) ⑥덕암 축구센터 선수 숙소의 사용료는 「스포츠산업 진흥법」과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11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상행위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으로 구분하여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와 같이 정한다. ②~④(현행과 같음) ⑤(현행과 같음). ⑥덕암 축구센터 선수 숙소의 사용료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 제4항 및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징수한다.
제12조(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 ③(생략) ④전용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단체 입장	제12조(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 ③(현행과 같음) ④전용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

<p>자에게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p> <p>⑤ 시장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2항의 프로경기 및 일반행사 사용료 징수 금액에 대하여 <u>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u></p> <p>제22조(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u>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u></p>	<p>체 입장자에게 100분의 30 범위에서 할인하여 징수 할 수 있다.</p> <p>⑤ 시장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2항의 프로경기 및 일반행사 사용료 징수 금액에 대하여 <u>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30 범위에서 할인하여 징수 할 수 있다.</u></p> <p>제22조(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①<u>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의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가 <u>대행한다.</u></p>
--	---

17. 대전광역시 체육인 스포츠 인권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 인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2조(정의) 및 제9조(실태조사)

(가) 조문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스포츠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스포츠 활동에서 누려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스포츠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스포츠 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2조 제2호의 “스포츠 인권” 정의 중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라는 표기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할 것임.
- 실태조사는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피조사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해야만 함. 따라서 제9조 제2항의 자료제출요청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됨을 부기할 필요가 있음.

(다) 제안(제2조 및 제9조 개정)

- 제2조 제2호의 스포츠 인권을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인권을 참고하여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표기함.
- 제9조 제2항의 자료제출 요청을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수정함.

현 행	개정 의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스포츠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u>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u> 스포츠 활동에서 누려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스포츠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u>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u> 스포츠 활동에서 누려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스포츠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스포츠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

<p>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스포츠 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u>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p>	<p>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스포츠 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u>「행정조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p>
--	---

18.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전을 위한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및 제2조(명칭 및 위치)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전을 위한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1조는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전을 위한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밝히고 있으나 제2조 이하에서 설치를 의도하는 실체 조항이 없음. 조례에서 어떤 기구나 시설에 일정한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을 부여받는 조례상 실체가 존재해야 함. 목적 규정은 실체 규정이

아님.

(다) 제안(제2조 개정)

- 제2조에 전수 시설의 설치를 함께 규정함.

현행	개정 의견
제2조(명칭 및 위치) <신 설>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제2조(전수 시설) ①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현행과 같음)

19. 대전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문화재보호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 (1) 제1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및 적정성 검토), 제16조(지정의 고시 및 지정서 교부) 및 제21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가) 조문규정

제1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및 적정성 검토) ① 시장은 법 제27조 및 제74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2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2. 적정성 검토 시기가 도래한 시지정문화재나 그 보호물·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③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지정의 고시 및 지정서 교부) 시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지정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제21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①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생략)

1. 국가지정문화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이하 생략)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15조는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체계를 살펴보면, 「문화재보호법」(이하“법”) 제27조 제1항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및 국보), 사적·명승·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 등을 지정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을, 제3항은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 검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제4항 이하는 생략). 그리고 법 제74조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와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에도 적용하기 위한 준용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등록 및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대하여는 법 제74조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법 제70조와 제70조의2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조례 제15조 제1항의 “법 제27조 및 제74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라는 내용은 잘못된 표기임.
- 또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내용은 법 제70조의2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법 제70조의2 제4항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제1항),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제2항), 그리고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 검토”(제3항)와 관련하여 법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에 대하여는 법 제70조의2

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고 이외에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적용이 되는 것임.

- 그러나 조례 제15조 제2항은 새로운 내용을 조례에 규정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 규정(대통령령 포함)을 그대로 반복해서 규정한 것으로서 비록 그 내용이 현재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법이 개정되게 되면 이에 따라 조례도 개정되어야 하는데,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령 입안의 원칙상 권고되지 않는 입안 방식임. 따라서 조례 제15조 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입법 경제상의 원칙에 부합됨.
- 제21조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여러 차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데 조례의 간결성 제고를 위해 약칭 필요.

(다) 제안(제15조, 제16조 및 제21조 개정)

- 제15조 제1항은 법 제27조 및 제74조가 아닌 법 제70조의2를 인용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정확한 표기임. 그리고 제2항은 조례로 위임한 내용이 아니고, 또 상위법과 중복된 규정으로서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함.
- 제21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처음 등장하는 제1호 가목에 “국토계획법”으로 약칭함.

현행	개정 시안
제1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및 적정성 검토) ① 시장은 <u>법 제27조 및 제74조에 따라</u>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u>법 제2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u> 2. <u>적정성 검토 시기가 도래한 시 지정 문화재나 그 보호물·보호구역과 관</u>	제1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및 적정성 검토) ① 시장은 <u>법 제70조의2에 따라 지정된</u>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u><삭 제></u>

<p><u>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u></p> <p>③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1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① 법 제 13조 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단서 생략)</p> <p>1. 국가지정문화재</p> <p>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 경계부터 500 미터까지(이하 생략)</p>	<p>③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1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① 법 제 13조 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현행과 같음)</p> <p>1. 국가지정문화재</p> <p>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 36조 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500 미터까지(이하 생략)</p>
--	---

20.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 공연장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대전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및 제2조(위치)

(가) 조문규정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치) 대전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무빙쉘터 레일 내 광장을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69에 둔다.</p>
--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대전 엑스포시민광장의 공연장도 공공시설이므로 공연장의 법령상 존치를 위해 설치 근거규정이 필요함.

(다) 제안(제1조 및 제2조 개정)

- 제2조에 공연장의 설치를 규정함.

현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 공연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 공연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대전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무빙쉘터 레일 내 광장을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69에 둔다.	제2조(대전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 ① 대전광역시민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 공연장(무빙쉘터 레일 내 광장을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② 공연장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69에 둔다.

21.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 (1) 제3조(관광객 유치 지원) 및 제8조의3(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가) 조문규정

제3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시장은 관내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내를 방문하는 단체대표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의3(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대전광역시 관광협의회를 설립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3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관내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내를 방문하는 단체대표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로 정한다”는 것의 의미가 애매함.
- 제8조의3은 어문이 자연스럽지 못한 측면이 있음.

(다) 제안(제3조 및 제8조의3 개정)

- 제3조 제2항을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현행	개정 의견
제3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u>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	제3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u>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제5조의2(범시민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대전방문의 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범시민추진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의2(범시민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대전방문의 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u>대전광역시에 대전광역시 범시민추진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한다.
1.~5. (생략)	1.~5. (현행과 같음)

22. 대전 스카이라드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관광진흥과 디지털 문화예술 창출을 위한 대전 스카이라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o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관광진흥과 디지털 문화예술 창출을 위한 대전 스카이라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전 스카이라드”란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64번 길(은행동)에 설치한 디스플레이 시설물을 말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제1조와 제2조는 스카이라드 시설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스카이라드는 대전광역시의 공공시설이므로 이에 대한 설치근거를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다) 제안(제1조 및 제2조 개정)

o 제2조를 디스플레이 시설물인 스카이라드를 설치하는 조문으로 변경함.

현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u>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관광진흥과 디지털 문화예술 창출을 위한 대전 스카이라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u>이 조례는 대전 스카이라드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정의) <u>이 조례에서 “대전 스카이라드”란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64번 길(은행동)에 설치한 디스플레이 시설물을 말한다.</u>	제2조(스카이라드) <u>대전광역시의 관광진흥과 디지털 문화예술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64번 길(은행동)에 디스플레이 시설물인 스카이라드를 설치한다.</u>

제4절 보건복지국(제13편)

1.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9조(보훈예우수당)

(가) 조문규정

제9조(보훈예우수당) ① 시장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호,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② 제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조례 제9조제2항에서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입안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조

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하는 법령의 취지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 함.

- 조례에서 모든 사항을 직접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도 중요사항은 조례에서 정하고 규칙에 위임해야 함. 규칙에 위임하는 방법도 규칙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거나 위임범위를 한정하여 위임해야 함. 이 경우에도 규칙에 정할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그 범위의 대강을 조례에서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해야 함.
- 그런데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임.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해서도 아니 되며, 더군다나 시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경우 국가유공자들은 보훈예우수당에 대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음.

(다) 제안(제9조제2항 수정)

-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직접 조례에서 규정하거나,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조례에서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2. 대전광역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3호에 의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생활인 인권보장 및 복지 수준 향상과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개인운영시설의 지원함.

나.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3호³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30) 제20조(보조금 등)법 제4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1) 제4조(지원 대상)

(가) 조문규정

제4조(지원 대상)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운영 시설로 신고된 시설에 한하여 지원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조례 제4조에서 지원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3호³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 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운영하는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없음.

(다) 제안(제4조 개정)

- 지원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³²⁾에 따라 개인운영시설로 신고된 시설 뿐만 아니라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함.

현 행	개정 의견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운영시설로 신고된 시설에 한하여 지원한다. <단서 신설>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운영시설로 신고된 시설에 한하여 지원한다. <u>다만, 본문의 시설에는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에서 해당 시설에 대하여 기능 보강비용, 운영비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지원하지 아</u>

31) 제20조(보조금 등) 법 제4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32)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u>니하는 시설을 포함다.</u>
--	---------------------

(2) 제0조(지도·감독)

(가) 조문규정

o 없음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o 사회복지시설의 회계(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계약(공사, 구매), 자산관리(부동산, 장비 등)등 취약업무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별도 전산시스템의 회계, 후원, 시·군·구 보고 등 활용도를 점검하고, 시설장·직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등 개인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업무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다) 제안(지도·감독 규정 신설)

o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업무를 보고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현행	개정 의견
<u><신 설></u>	<u>제0조(지도·감독)</u>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을 받는 <u>노숙인시설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숙인시설에 출입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u>

3.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o 나눔과 섬김의 상부상조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복지만두레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법규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5조(예산지원)

(가) 조문규정

제15조(예산지원) 시장은 복지만두레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15조에서 시장은 복지만두레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³³⁾을 위반하고 있음.

(다) 제안(제15조 개정)

- 복지만두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수정함.

현행	개정 의견
제15조(예산지원) 시장은 복지만두레 <u>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u> 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지원) 시장은 복지만두레 <u>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u>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가. 조례내용

-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3)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나. 근거법령

-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9조³⁴⁾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가) 조문규정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조례 제4조에서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³⁵⁾에 해당하는 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1항³⁶⁾에 해당하는 사항,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2항³⁷⁾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해구호기금의 성격과 상이함.

(다) 제안(제4조 개정)

-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함.

현행	개정 의견
----	-------

34) 제9조(재해구호기금의 운영·관리)①시·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재해구호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35) 제40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① 시·도지사는 시·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p>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p> <p>②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u>사회보장위원회</u>가 대행한다.</p>	<p>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p> <p>②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u>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u>가 대행한다.</p>
--	--

5.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5조(인정신청 등)

(가) 조문규정

<p>제5조(인정신청 등)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 확인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다) 제안(제5조 개정)

-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되,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 의견
<p>제5조(인정신청 등)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제5조(인정신청 등)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u>다만,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p>

6. 대전복지재단 조례

가. 조례내용

- 시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전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9조(재정지원)

(가) 조문규정

<p>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 설립비용 및 운영과 사업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조례 제9조에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 설립비용 및 운영과 사업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³⁸⁾을 위반하고 있음.
- 예컨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³⁹⁾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⁴⁰⁾에서와 같이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란” 제2조⁴¹⁾에서 정하고 있는 27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4개 법률⁴²⁾에 따른 시설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함.
- 대전복지재단과 같이 「민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음.

(다) 제안(제9조 개정)

-
- 38)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 39)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40) 제20조(보조금 등) 법 제4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 41)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42)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 설립비용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수 정함.

현행	개정 의견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 <u>설립비용 및 운영과 사업에 관한</u>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 <u>설립비용 및 사업에 필요한</u>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7.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가. 조례내용

-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

나.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5조(실태조사)

(가) 조문규정

<p>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조례 제5조제3항에서 시장은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5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실태조사는 민간위탁 대상사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제안(제5조 개정)

- 조례 제5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현행	개정 의견
<p>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u><삭 제></u></p>

(2) 제10조(처우개선)

(가) 조문규정

<p>제10조(처우개선) ① 사회복지사 등은 보수 및 지위 등에 있어 사회복지 분야 및 유형 등에 관계없이 동등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p> <p>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성 향상 및 근무내용에 따라 자격수당, 위험수당 및 종사자 특별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입안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하는 법령의 취지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 함.
- 조례에서 모든 사항을 직접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도 중요사항은 조례에서 정하고 규칙에 위임해야 함. 규칙에 위임하는 방법도 규칙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거나 위임범위를 한정하여 위임해야 함. 이 경우에도 규칙에 정할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그 범위의 대강을 조례에서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또한, 조례 제10조제3항에서 자격수당, 위험수당, 종사자 특별수당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해서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사 등은 이를 알 수가 없음.

(다) 제안

-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자격수당, 위험수당, 종사자 특별수당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해서 조례로 직접 규정하거나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조례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8. 대전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

가. 조례내용

-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이용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4조(기부식품제공사업 지정)

(가) 조문규정

제4조(기부식품제공사업 지정) ① 시장은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기부식품제공사업 또는 사업자를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시장은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기부식품제공사업 또는 사업자를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식품제공사업 또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비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지정대상이 누구이며, 방법 절차 등이 조례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따로 정할 경우 식품기부사업의 주민들은 알 수가 없음.

(다) 제안(제4조 개정)

- 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식품제공사업 또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비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지정대상이 누구이며,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조례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2) 제6조(기부식품의 제공)

(가) 조문규정

제6조(기부식품의 제공) 지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기부식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기부하는 식품은 무상제공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경비를 받을 수 있다.
2.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할 것
3. 기부식품을 종교적·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 것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2017. 2. 4.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되었음.⁴³⁾

43) 제6조(직접 경비의 범위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접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식품의 차량적재와 운반에 소요된 비용
2. 기부식품의 포장비용

(다) 제안(제6조 개정)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삭제함.

현행	개정 의견
<p>제6조(기부식품의 제공) 지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기부식품을 제공하여야 한다.</p> <p>1. 이용자에게 기부하는 식품은 무상제공을 원칙으로 할 것. <u>다만,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경비를 받을 수 있다.</u></p> <p>2.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할 것</p> <p>3. 기부식품을 종교적·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 것</p>	<p>제6조(기부식품의 제공) 지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기부식품을 제공하여야 한다.</p> <p>1. 이용자에게 기부하는 식품은 무상제공을 원칙으로 할 것. <u><단서 삭제></u></p> <p>2.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할 것</p> <p>3. 기부식품을 종교적·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 것</p>

9.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가. 조례내용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가. 조문규정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설치근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5항이 아니라 제40조제6항이므로 잘못 인용하고 있음.⁴⁴⁾

(다) 제안(제1조 개정)

- 제1조 중 잘못 인용된 제40조제5항을 제40조제6항으로 수정함.

현 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6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부터 제5조(의견청취)까지, 제8조(수당과 여비)

(가) 조문규정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생략)
제4조(위원의 해촉) (생략)
제5조(의견청취) (생략)
제8조(수당과 여비) (생략)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입법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분야의 내용이나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기본조례가 있음.
- 기본조례는 다른 조례나 규칙의 입법에 관한 준용규정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이러한 기본조례로 「대구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음.

44) ⑥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공통된 사항에 관하여 이 기본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면, 누락된 부분이 없게 되어 조례의 완결성이 높아지고 조문이 간결하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다) 제안(위원회 관련 공통규정을 포함한 기본조례 준용 필요)

-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4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 제5조(의견청취), 제8조(수당과 여비)의 내용은 「대구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제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를 신설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준용규정을 두는 것이 입법체계상 적절할 것임.

(3) 제9조(운영세칙)

가. 조문규정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5항⁴⁵⁾에서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 제9조에서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입안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하는 법령의 취지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 함.
- 조례에서 모든 사항을 직접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도 중요사항은 조례에서 정하고 규칙에 위임해야 함. 규칙에 위임하는 방법도 규칙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거나 위임범위를 한정하여 위임해야 함. 이 경우에도 규칙에 정할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그 범위의 대강을 조례에서 정한 후

45) 제40조 ⑥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다) 제안

-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거나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조례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10.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가. 조례내용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2조(지원대상)

(가) 조문규정

제2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광역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1. 만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세대주인 세대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6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거주하는 세대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5. 조손세대
6. 소년·소녀가정세대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조례 제2조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광역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 최저보험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금액을 정할 경우 최저보험료에 맞추기 위해서는 조례를 매년 개정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가 1만원보다 낮은 경우 그만큼 지원혜택을 줄 수가 없게 될 것임.

(다) 제안(제2조 개정)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광역시 지역가입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미만인 자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현행	개정 의견
<p>제2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광역시 지역가입자로서 <u>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인</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p> <p>1.~6(생략)</p>	<p>제2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광역시 지역가입자로서 <u>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미만인</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p> <p>1.~6(현행과 같음)</p>

(2) 제5조(환수)

가. 조문규정

<p>제5조(환수) ① 시장은 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보험료를 반환기한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p>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상위법령에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규정이 없음.
- 그런데 조례 제5조(환수)에서는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음.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담 등에 대해 규정하려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 위임이 필요함.

(다) 제안(제5조 개정)

- 상위법령에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수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지방채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 의견
<p>제5조(환수) ① 시장은 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보험료를 반환기한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p>	<p>제5조(환수) ① 시장은 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p> <p><u><삭 제></u></p>

11.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

가. 조례내용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의 책무와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2조(운영세칙)

(가) 조문규정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조례에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또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원칙임.
- 그런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경우 의료원 설립에 관한 운영절차 등을 주민이 알 수가 없게 됨.

(다) 제안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거나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조례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12.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함.

나. 근거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⁴⁶⁾

46)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4조(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가) 조문규정

제4조(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노숙인 복지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노숙인 분야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사항
2.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노숙인 복지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3. 노숙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자
4. 노숙인 정책에 관한 풍부한 학식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르면, 담당부서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위원회가 통합 설치·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고 가능한 위원회 설치를 자제하는 것이 필요함.

(다) 제안(제4조 개정)

-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함.

현행	개정 의견
<p>제4조(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④ (생략)</p> <p>⑤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u><신 설></u></p>	<p>제4조(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④ (현행과 같음)</p> <p>⑤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p>

(2)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가) 조문규정

<p>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p> <p>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p> <p>④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조례에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또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원칙임.
- 그런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경우 의료원 설립에 관한 운영절차 등을 주민이 알 수가 없게 됨.

(다) 제안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거나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조례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3) 제9조(보수교육)

(가) 조문규정

제9조(보수교육) 시장은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조례 제9조(보수교육)에서 시장은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9조에서는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받을 의무를 지우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
-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가능한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교육제도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함.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47)에서는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만을 의무지우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48)에서는 그 교육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시간은 매년 4시간 이상이므로 대전광역시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과 내용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47) 제20조(인권교육) ①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48) 제23조(인권교육의 실시)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노숙인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국가인권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숙인등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
2. 노숙인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구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3.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노숙인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매년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노숙인시설의 장은 종사자들이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여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시기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제안

- 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대전광역시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임.
- 제9조의 규정으로 보수교육이 중복 시행될 우려가 있으면, 제9조를 삭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3.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가. 조례내용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지원함.

나. 근거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4조(참전명예수당)제2항

(가) 조문규정

<p>제4조(참전명예수당) ①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p> <p>② <u>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참전유공자 월 7만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월 3만원으로 한다.</u></p> <p>③ 대전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대전지방보훈청장 등과 협조하여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p> <p>④ 그 밖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p>
--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

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하여야 함.
- 참전유공자의 나이가 90세 이상임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충분한 예우를 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전유공자 월 7만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 월 3만원을 지급하는 데 그치고 있음.

(다) 제안

- 참전유공자 월 10만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 월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제4조(참전명예수당)제4항

(가) 조문규정

제4조(참전명예수당) ①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참전유공자 월 7만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월 3만원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대전지방보훈청장 등과 협조하여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에 따로 정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4조제4항에서 그 밖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에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입안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하는 법령의 취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것이 적절함.
- 조례에서 모든 사항을 직접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도 중요사항은 조례에서 정하고 규칙에 위임해야 함. 규칙에 위임하는 방법도 규칙으로 정할 사항

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거나 위임범위를 한정하여 위임해야 함. 이 경우에도 규칙에 정할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그 범위의 대강을 조례에서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함.

- 조례에서 5개 조문만 조례에 규정하고,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절차와 방법을 조례에서 규정하거나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고 시장에게 위임할 경우, 수당의 지급절차와 방법을 주민은 알 수가 없으며, 규칙으로 위임할 경우에도 1~2개 조문을 위해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것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다) 제안(신설)

- 참전명예수당 등의 지급절차와 방법을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

현행	개정 의견
<신 설>	<p>제9조(참전명예수당 등의 신청) ① 참전명예수당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주민등록지 읍면동장)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을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p> <p>②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매 월 말일(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 그 전일)에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지급한다.</p>

14.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조례

가. 조례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8조(대전광역시 인증 자활기업)

(가) 조문규정

제8조(대전광역시 인증 자활기업) ① 시장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대전광역시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자활기업은 “대전광역시 인증 자활기업”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대전광역시 인증 자활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8조제3항에서 대전광역시 인증 자활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입안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하는 법령의 취지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 함.
- 조례에서 모든 사항을 직접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도 중요사항은 조례에서 정하고 규칙에 위임해야 함. 규칙에 위임하는 방법도 규칙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거나 위임범위를 한정하여 위임해야 함. 이 경우에도 규칙에 정할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그 범위의 대강을 조례에서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함.
- 조례에서 인증 자활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조례에서 규정하거나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고 시장에게 위임할 경우, 인증 자활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을 주민은 알 수가 없음.

(다) 제안

- 조례에서 인증 자활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규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현행	개정 의견
<신 설>	제00조(시행규칙) 대전광역시 인증 자활 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5. 대전광역시 경로당지원조례

가. 조례내용

-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지원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3조(적용범위)

(가) 조문규정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신고필증이 교부된 경로당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조례 제3조에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신고필증이 교부된 경로당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신고필증이 교부된 경로당에 한하여 적용할 경우, 경로당 등록을 위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소외당하는 미신고경로당이 현존하고 있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져 온 마을회관 등에 설치된 경로당이 지원대상에서 누락되고 있음.

(다) 제안(제3조 개정)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신고 경로당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함.

현행	개정 의견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신고필증이 교부된 경로당에 한하여 적용한다. <u><신 설></u>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신고필증이 교부된 경로당에 한하여 적용한다. <u>다만,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아니 한 경로당에도 적용한다.</u>

(2) 결연사업 및 안전점검 추가

- 2019년 12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8,026,915명으로 전체 인구의 15.48%이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나라님도 어른은 공경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노인들이 축복을 받으면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해 나가실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및 지원의 확충이 필요함.
-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결연사업,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 제0조 다음에 다음의 조례를 신설함.

현행	개정 의견
<u><신 설></u>	제0조(결연사업)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u>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
<u><신 설></u>	제0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6.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

가. 조례내용

-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장례비용 절감, 선진 장례문화 조성 및 녹색도시 구현을 위하여 수목장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5조(평가)

(가) 조문규정

제5조(평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수목장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목장 장려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조례 제5조제1항에서 시장은 수목장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방법과 절차 등을 시행규칙 등으로 정하여야 하는 데 그러한 규정이 없음.
-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시장은 수목장 장려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예산을 지원하면서 누구에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지원대상이 불분명함.

(다) 제안

- 수목장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방법과 절차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수목장 기본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할 대상을 조례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할 필요가 있음.

(2) 제7조(추모목 지원)

(가) 조문규정

제7조(추모목 지원) 시장은 수목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추모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조례 제7조에서 시장은 수목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추모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추모목 지원대상이 누구인지가 불분명함.

(다) 제안

- 추모목 지원 대상을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할 필요가 있음.

(3) 제9조(홍보요원)

(가) 조문규정

제9조(홍보요원) ① 시장은 수목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홍보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수목장을 한 유가족
2. 수목장 관련 기관·단체의 회원
3. 그 밖에 수목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조례 제9조제1항에서 시장은 수목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홍보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홍보요원을 위촉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위촉 또는 해촉하는지 알 수가 없음.

(다) 제안

- 홍보요원의 위촉·해촉과 방법 및 절차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에서 위임할 필요가 있음.

17. 대전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가. 조례내용

-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4조(실태조사)

(가) 조문규정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4조제2항에서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입안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하는 법령의 취지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 할 것임.
- 조례에서 모든 사항을 직접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도 중요사항은 조례에서 정하고 규칙에 위임해야 함. 규칙에 위임하는 방법도 규칙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거나 위임범위를 한정하여 위임해야 함. 이 경우에도 규칙에 정할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그 범위의 대강을 조례에서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함.

- 조례에서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에서 규정하거나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고 시장에게 위임할 경우,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을 주민은 알 수가 없음.

(다) 제안(제4조 개정)

- 조례에서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에 관하여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고, 세부적 절차에 대해서는 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현행	개정 의견
<신 설>	<p>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18.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

가. 조례내용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한국효문화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7조(운영규정)

(가) 조문규정

제7조(운영규정) 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대표이사가 정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조례에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또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임.
- 그런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경우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주민이 알 수가 없게 됨.

(다) 제안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거나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조례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19.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가. 조례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9조(운영의 위탁)

(가) 조문규정

제9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시장은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

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의 선정 등의 절차가 거쳐야 할 것임.

(다) 제9조(제9조 개정)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현행	개정 의견
<p>제9조(운영의 위탁) <u>시장은</u>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u><신 설></u></p>	<p>제9조(운영의 위탁) ① <u>시장은</u>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u>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u></p>

20.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가. 조례내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20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 구성)

(가) 조문규정

<p>제20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 구성) ①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p> <p>②대전광역시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에서</p>
--

대행한다.

(다)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조례 제20조제2항에서 대전광역시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하면서 대행위원회가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어떤 기능을 대행하는지를 알 수가 없음.

(다) 제안(제20조 개정)

- 조례에서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 의견
제20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u>보존묘지심사위원회</u> 를 구성·운영한다. <u><신설></u> ②대전광역시 <u>보존묘지심사위원회</u> 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20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u>보존묘지심사위원회</u>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u>국가보존묘지 또는 국가보존분묘의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u> 2. <u>시 보존묘지 또는 시 보존분묘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u> 3. <u>시보존묘지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u> 4. <u>그 밖에 시보존묘지등의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u> ② <u>심사위원회</u> 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에서 대행한다.

21.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조례

가. 조례내용

○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가) 조문규정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자치입법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분야의 내용이나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하 “기본조례”라 함)가 있음. 기본조례는 다른 조례나 규칙의 입법에 준용규정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이러한 기본조례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음.
- 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공통된 사

항에 관하여 이 기본조례에서 정하면 누락된 부분이 없게 되어 조례의 완결성이 높아지고 조문이 간결하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다) 제안(제13조 삭제)

- o 제13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조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설치 조례」에서 규정하고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설치 조례」를 따르도록 함.

현행	개정 의견
<p>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p> <p>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p> <p>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p> <p>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p> <p>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p> <p>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p>	<p>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설치 조례」를 따른다.</p>

<p>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p> <p>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 촉할 수 있다.</p>	
--	--

22.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가. 조례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2조(운영규정)

(가) 조문규정

제12조(운영규정)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조례에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또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임.
- 그런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경우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주민이 알 수가 없게 됨.

(다) 제안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거나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23.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및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가. 조례내용

-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6조(임신·출산·양육 지원) 및 제5조(지원사업)

(가) 조문규정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p>제6조(임신·출산·양육 지원)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2. 출산지원 사업 3. 양육지원 사업 4.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실태조사 사업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지원 사업 4.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및 상담지원 사업 5. 장애인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제공 사업

	<u>6.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및 모범사례 발굴지원 사업</u> <u>7. 장애아동 계절학기 운영 사업</u> <u>8. 성인장애인가정 가족여행 사업</u> <u>9. 장애인 부모역량강화 및 행복한 장애인가정 만들기 사업</u> <u>10.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	--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두 조례는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과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조례로 유사한 내용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가족 현황 및 실태조사를 통해서 파악된 장애인가정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서로 분리될 경우 효율적인 지원사업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음.

(다) 제안

-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와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를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하되, 장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24.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

(가) 조문규정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수화통역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이용자의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대전광역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이용자 또는 시설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2.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3. 관계공무원
4.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촉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조례에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또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임.
- 그런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경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주민이 알 수가 없게 됨.

(다) 제안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거나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25.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가. 조례내용

-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6조(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가) 조문규정

<p>제6조(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인권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p>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p> <p>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 장애인복지 분야의 대학 교수

3. 장애인복지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4. 시민단체 대표

5. 법조인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에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⑦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⁴⁹⁾에 따라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음.
-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되어 있음.
- 조례 제6조제2항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위원과 지방장애인복지위원의 자격요건이 유사하므로 중복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성이 적어 보임.

(다) 제안(제6조 개정)

- 49)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조례 제6조제2항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현행	개정 의견
<p>제6조(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인권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p>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p> <p>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전광역시의회의 의원 2. 장애인복지 분야의 대학 교수 3. 장애인복지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4. 시민단체 대표 5. 법조인 	<p>제6조(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인권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p>②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p> <p><삭 제></p> <p><삭 제></p>

<p><u>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관한</u> <u>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u>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u> <u>보궐 위원</u>의 임기는 <u>전임위원의 남은</u> <u>기간으로 한다.</u></p> <p><u>⑥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월에 개최</u> <u>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u> <u>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u> <u>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u></p> <p><u>⑦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u> <u>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u> <u>의결한다.</u></p> <p><u>⑧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u> <u>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u> <u>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u> <u>수 있다.</u></p> <p><u>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u> <u>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u> <u>위원장이 정한다.</u></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	--

26.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조례

가. 조례내용

-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0조

(가) 조문규정

○ 없음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보조기구센터의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금액, 위탁할 경우에 민간위탁자 선정방법, 수리업체 지정 여부, 수리비용 지원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다) 제안

○ 보조기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에서 위임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임.

27.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조례

가. 조례내용

○ 대전광역시의 의료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4조(교육기관 지원), 제5조(선도의료기관 선정·지원) 및 제7조(의료관광 홍보대사)

(가) 조문규정

<p>제4조(교육기관 지원) ①시장은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제5조(선도의료기관 선정·지원) ①시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서 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중심적 역할을 하는 선도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선도의료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의료관광 홍보대사) ①시장은 의료관광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촉대상, 방법 등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입안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하는 법령의 취지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 함.
- 조례에서 모든 사항을 직접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도 중요사항은 조례에서 정하고 규칙에 위임해야 함. 규칙에 위임하는 방법도 규칙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거나 위임범위를 한정하여 위임해야 함. 이 경우에도 규칙에 정할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그 범위의 대강을 조례에서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런데 교육기관 지원, 선도의료기관의 선정, 의료관광 홍보대사의 위촉대상, 방법 등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각각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의 입장에서는 교육기관 지원 등에 대하여 알 수가 없음.

(다) 제안

- 교육기관 지원, 선도의료기관의 선정, 의료관광 홍보대사의 위촉대상, 방법 등 위촉에 대하여 조례에서 규정하거나,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28.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가. 조례내용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함.

나.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6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가) 조문규정

제6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시장은 필요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를 준용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조례 제6조에서 “시장은 필요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금연구역의 지정이 변경 및 해제될 경우 흡연구역의 설치 등에 관한 주민의 권리·의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음. 단순히 시장이 필요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및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사유가 매우 불명확하여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초래하여 주민과 행정청 간에 불필요한 마찰이 우려됨.

(다) 제안(제6조 개정)

-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의 사유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현행	개정 의견
<p>제6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시장은 필요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를 준용한다.</p> <p><u><신 설></u></p>	<p>제6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를 준용한다</p> <p>1. _____</p> <p>2. _____</p> <p>3. _____</p> <p>(각 호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p>

(2) 제7조(금연구역 표시)

(가) 조문규정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취지, 경계,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문구, 제재 등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문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입안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하는 법령의 취지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 함.
- 조례에서 모든 사항을 직접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도 중요사항은 조례에서 정하고 규칙에 위임해야 함. 규칙에 위임하는 방법도 규칙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거나 위임범위를 한정하여 위임해야 함. 이 경우에도 규칙에 정할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그 범위의 대강을 조례에서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런데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문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제안

-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문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에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29.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가. 조례내용

-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2조(정의)

(가) 조문규정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기등”이란 신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 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인체조직
--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정의규정은 해석상 논란을 예방하고 적용상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음. 또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미리 설명함으로써 복잡한 조문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음. 정의할 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 “항”을 설치하지 않고 “호”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임.

(다) 제안(제2조 개정)

- 제2조 제1호 및 제2호를 명확하게 정의함.

현 행	개정 의견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장기등</u>”이란 신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u>」 제4조 제1호에 따른 장기등 2. 「<u>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u>」 제3조제1호에 따른 인체조직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사용하는 용어</u>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장기등</u>”이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 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u>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u>」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을 말한다. 2. “<u>인체조직</u>”이란 「<u>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u>」 제3조제1호에 따른 인체조직을 말한다.

(2) 제5조(장기등 기증 등록신청 접수창구 설치)

(가) 조문규정

제5조(장기등 기증 등록신청 접수창구 설치) ① 시장은 장기등 기증을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장기등 기증 등록신청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구청장에게 장기등 기증 등록신청 접수창구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장기등 기증을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기증 등록신청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거나 자치구청장에게 장기등 기증 등록신청 접수창구 설치·운영을 권장하려면 등록기관과 접수창구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함.

(다) 제안(제5조 개정)

- 장기등 등록신청 접수창구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현행	개정 의견
<p>제5조(장기등 기증 등록신청 접수창구 설치) ① 시장은 장기등 기증을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장기등 기증 등록신청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u><신 설></u></p> <p>② 시장은 자치구청장에게 장기등 기증 등록신청 접수창구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p>	<p>제5조(장기등 기증 등록신청 접수창구 설치) ① 시장은 장기등 기증을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장기등 기증 등록신청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접수창구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③ 시장은 자치구청장에게 장기등 기증 등록신청 접수창구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p>

30.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

가. 조례내용

- 난임부부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3조(지원사업)

(가) 조문규정

제3조(지원사업)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사업
2. 한방난임치료 상담·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입안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하는 법령의 취지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 함.
- 조례에서 모든 사항을 직접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도 중요사항은 조례에서 정하고 규칙에 위임해야 함. 규칙에 위임하는 방법도 규칙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거나 위임범위를 한정하여 위임해야 함. 이 경우에도 규칙에 정할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그 범위의 대강을 조례에서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함.
- 그런데 한방난임치료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의 입장에서는 지원대상 등에 대하여 알 수가 없음.

(다) 제안

- 한방난임치료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거나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조례에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31.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가. 조례내용

- 치매의 예방·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

나. 근거법령

- 「치매관리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6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및 업무)

(가) 조문규정

제6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및 업무)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
3.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보급
4. 치매관련 실태조사 및 관련기관 간 연계시스템 구축
5. 전문가양성 및 교육·훈련
6.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위탁자 선정, 계약의 갱신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입안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하는 법령의 취지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 함.

- 조례에서 모든 사항을 직접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도 중요사항은 조례에서 정하고 규칙에 위임해야 함. 규칙에 위임하는 방법도 규칙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거나 위임범위를 한정하여 위임해야 함. 이 경우에도 규칙에 정할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그 범위의 대강을 조례에서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런데 위탁자 선정, 계약의 갱신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의 입장에서 위탁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알 수가 없음.

(다) 제안

- 위탁자 선정, 계약의 갱신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거나 시행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32. 대전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회 운영))

(가) 조문규정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자치입법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분야의 내용이나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하 “기본조례”라 함)가 있음. 기본조례는 다른 조례나 규칙의 입법에 준용규정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이러한 기본조례로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설치 조례」가 있음.
- 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공통된 사항에 관하여 이 기본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면, 누락된 부분이 없게 되어 조례의 완결성이 높아지고 조문이 간결하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다) 제안(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삭제)

-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11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3조(수당 등)의 내용은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설치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삭제함.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설치 조례」를 따르도록

준용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33.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

가. 조례내용

- 음식문화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광상품화와 시민 소득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고유의 향토음식을 발굴하여 육성 및 지원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7조(향토음식의 선정)부터 제9조(향토음식점 선정 등)까지

(가) 조문규정

제7조(향토음식의 선정) ①시장은 우수한 향토음식을 육성 및 지원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향토음식을 선정할 수 있다. ②향토음식의 선정대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향토음식명인 선정 등) ①시장은 향토음식명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향토음식명인으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향토음식명인의 선정대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향토음식점 선정 등) ①시장은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과 관광상품화를 위하여 향토음식점을 선정할 수 있다. ②향토음식점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향토음식점의 선정대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조례 제7조제2항에서 향토음식의 선정대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 제8조제3항에서 향토음식명인의 선정대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

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 제9조제3항에서 향토음식점의 선정대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입안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하는 법령의 취지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 함.
- 조례에서 모든 사항을 직접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도 중요사항은 조례에서 정하고 규칙에 위임해야 함. 규칙에 위임하는 방법도 규칙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거나 위임범위를 한정하여 위임해야 함. 이 경우에도 규칙에 정할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그 범위의 대강을 조례에서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함,
- 그런데 향토음식의 선정대상, 향토음식명인의 선정대상, 향토음식점의 선정대상은 향토음식, 향토음식명인, 향토음식점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항이며, 주민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향토음식명인 등의 대상이 되는지 예측이 가능하여야 함.
- 시행규칙으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어떠한 절차로 향토음식 등을 선정하는 지를 알 수가 없음.

(다) 제안(제7조부터 제9조까지 개정)

- 향토음식의 선정대상, 향토음식명인의 선정대상, 향토음식점의 선정대상은 조례로 정하고, 그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34. 대전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

가. 조례내용

-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

(가) 조문규정

제4조(근무약사의 의무) 공공심야약국 근무약사는 약사윤리기준, 약사윤리강령 및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함. 법률의 위임 없이 공공심야약국 근무약사는 약사윤리기준, 약사윤리강령 및 운영시간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다) 제안(제4조 개정)

- 공공심야약국 근무약사는 약사윤리기준, 약사윤리강령 및 운영시간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수정함.

현행	개정 의견
제4조(근무약사의 의무) 공공심야약국 근무약사는 약사윤리기준, 약사윤리강령 및 운영시간을 <u>준수하여야 한다</u> .	제4조(근무약사의 의무) 공공심야약국 근무약사는 약사윤리기준, 약사윤리강령 및 운영시간을 <u>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

35. 대전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가. 조례내용

-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약사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가) 조문규정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조례 제5조에서는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비영리법인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 제안(제5조 개정)

- 비영리법인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함.

현행	개정 의견
<p>제5조(재정지원) <u>시장은</u>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u><신 설></u></p>	<p>제5조(재정지원) ① <u>시장은</u>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p>

36.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가. 조례내용

-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 축조심사 및 문제점

(1) 제5조(협력체계 구축)

(가) 조문규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조례에서 관련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반드시 협력체계가 구축될 경우에만 정책이나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음.
- 임의규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하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정책이나 사업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강제규정화 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협력체계의 구축은 관련 단체 등과의 상호협력 관계를 통하여 구축할 수 있는 사항이지 강제규정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 각종 조례에서 협력체계 구축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함.

라. 제안

- 외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개정을 검토할 유사 조례

1. 대전광역시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2.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례
3. 대전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4. 대전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5. 대전광역시 보건위생기본 조례
6.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7.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5절 환경녹지국(제15편)

1.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전광역시 의제21 실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부터 제5조(감독)까지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전광역시 의제21 실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비의 지원) 대전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대전광역시 의제 21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3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협의회에 대한 대전광역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또는 월별 신청에 따라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협의회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에 대하여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의 위탁) ①시장은 대전광역시의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사무위탁에 따른 경비는 협약으로 정한다.

제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 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의제21 실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지원대상이 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립 근거도 없고, 그 기능이나 구성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와 같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립근거나 기능·성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 참고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관련해서 현행법에서는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에 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에서 위탁받은 협의회가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⁵⁰⁾

(다) 제안(전부개정)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할 필요가 있음.

50)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교육·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참고할 만한 입법례로는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라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이 있음.

2.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등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가) 조문규정

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① 대전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정 요청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협의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의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 의원
2. 대전광역시 소속 4급 이상의 관계 부서 공무원
3. 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후환경정책과장이 된다.
-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관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⑨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⑩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⑪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3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규정하면서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제3조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고,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나 해촉 등과 같이 중요한 사항도 누락되어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이나 “간사” 등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
- 참고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⁵¹⁾에 따르면, 위원회 설치

51)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과 조례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대전광역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항, 분쟁 조정 및 지방 보조금 지급 등

조례안에는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다) 제안(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 신설)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해촉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해 미비된 규정을 추가하기 위하여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를 각각 신설함.⁵²⁾

(라)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규정 등에 관한 검토

- 각 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규정 등을 각각 규정해야 함. 이러한 반복적인 규정을 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규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각 위원회 조례에서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문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임.
- 따라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보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현 행	개정 의견
<신 설>	<p>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p> <p>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p> <p>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p>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위원회의 소속

나.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다.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업무 대행자

라.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심의·의결의 기한, 이의신청 절차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생 략)

- 5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나 위원의 해촉 등의 규정은 대전광역시의 실정이나 위원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임.

3. 대전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및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및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장은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4의 기본계획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쾌적한 실내공기질 조성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 유해물질 사전저감을 위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운행중인 대중교통차량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4. 신축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건축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에 관한 사항
6.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7. 실내공기질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및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제2조에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는 실태파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 제안(전부개정)

- 현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여 이 조례를 전부개정할 필요가 있음.
- 전부개정안 시안은 아래와 같음.

현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및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통한 시민의 건강 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u>대전광역시</u> 장은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4의 기본계획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u>대전광역시</u>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4의 기본계획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쾌적한 실내공기질 조성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 쾌적한 실내공기질 조성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 유해물질 사전저감을 위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사항	2. 유해물질 사전저감을 위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운행중인 대중교통차량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3. 운행중인 대중교통차량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4. 신축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건축자	4. 신축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건축자

<p>재 관리에 관한 사항</p> <p>5.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에 관한 사항</p> <p>6.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p> <p>7. 실내공기질 홍보에 관한 사항</p> <p>8.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u><신 설></u></p> <p>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p> <p><u><신 설></u></p> <p><u><신 설></u></p>	<p>재 관리에 관한 사항</p> <p>5.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에 관한 사항</p> <p>6.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p> <p>7. 실내공기질 홍보에 관한 사항</p> <p>8.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제3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p> <p>제4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p> <p>제5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공개)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구청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대전광역시 공보 또는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p> <p>제6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p> <p>① 시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구청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측정</p>
---	---

<p><u><신 설></u></p> <p><u><신 설></u></p> <p><u>제4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u> 대전광역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u>실내공기질 관리법</u>」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p>	<p><u>결과를 바탕으로 법 제13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p> <p><u>제7조(실내라돈조사의 실시)</u> 시장은 라돈의 실내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u>제8조(지원사업)</u> 시장은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홍보 및 정보제공</u> <u>2. 그 밖에 실내공기질 개선 등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p><u>제9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u>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u>별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u></p>
---	--

4.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2조(온실가스 배출 감축 지원 등) 및 제18조(기후환경센터의 설립 운영)

(가) 조문규정

제12조(온실가스 배출 감축 지원 등) ① 시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는 설비 등에 투자하는 때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특정사업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기후환경센터의 설립·운영) 시장은 다양한 기후환경 이슈에 대한 국내·외 및 지역간 정보공유와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기후변화대응 정책 연구개발과 시민의 녹색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환경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12조제1항에서 특정사업자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는 설비 등에 투자하는 때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제3항에서 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의 지원 대상·기준 등과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자의 권리보장에 중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포괄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임.
- 제18조에서 시장은 다양한 기후환경 이슈에 대한 국내·외 및 지역간 정보공유와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기후변화대응 정책 연구개발과 시민의 녹색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환경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후환경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 제안(제12조 및 제18조 개정)

- 제12조를 개정하여 특정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준용규정을 둠.
- 제18조에 기후환경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둠.

현행	개정 의견
<p>제12조(온실가스 배출 감축 지원 등) ① 시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는 설비 등에 투자하는 때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특정사업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시장이 따로 정한다.</u></p> <p>제18조(기후환경센터의 설립·운영) 시장은 다양한 기후환경 이슈에 대한 국내·외 및 지역간 정보공유와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기후변화대응 정책 연구개발과 시민의 녹색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환경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p> <p><u><신 설></u></p>	<p>제12조(온실가스 배출 감축 지원 등) ① 시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는 설비 등에 투자하는 때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특정사업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p> <p>제18조(기후환경센터의 설립·운영) ① 시장은 다양한 기후환경 이슈에 대한 국내·외 및 지역간 정보공유와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기후변화대응 정책 연구개발과 시민의 녹색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환경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후환경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p>

5.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9조(설치 및 운영)

(가) 조문규정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시장은 제4조를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는 법 제94조 제5항제5호에 따라 위반시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에서는 공회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공회전을 한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제9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근거규정으로 인용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5항제5호”은 “제94조제4항제5호”의 잘못된 규정임.

(다) 제안(제9조 개정)

-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에서 잘못된 인용된 근거법규를 정비함.

현행	개정 의견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시장은 제4조를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제5항제5호에 따라 위반시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시장은 제4조를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제4항제5호에 따라 위반시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6. 대전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사용 자동차의 저공해자동차로 전환·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3조(저공해조치의 명령) 및 제5조(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가) 조문규정

제3조(저공해조치의 명령)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이행명령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 이내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1년의 범위 안에서(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①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하지 않을 수 있다.

1. 천연가스충전시설의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전환대상자동차에 해당되는 저공해자동차가 제작되지 아니하여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중 통근·통학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2. 제5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분뇨정화조청소 등 청소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3. 공공기관 및 비영리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위한 특수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3조에서는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저공해조치 이행명령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저공해조치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저공해조치 명령대상 자동차를 모든 경유사용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저공해조치 명령과 저공해조치 기간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문장이 복잡함.
- 제5조에서는 시장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법률에 근거 없는 것으로 위임범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 제안(제3조 및 제5조 개정, 제3조의2 신설)

- 제3조를 개정하여 저공해조치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저공해조치 기간에 관한 사항은 분리하여 제3조의2로 신설함.
- 제5조에서 법률에 근거 없이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재정지원에 관한 부분만 존치하는 것이 적절함.

현행	개정 의견
<p>제3조(저공해조치의 명령)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이행명령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p> <p>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결과</p>	<p>제3조(저공해조치의 명령)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p> <p>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p> <p>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p>

<p><u>매연농도가 10% 이내인 경우</u></p> <p><u>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u></p> <p><u>③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1년의 범위 안에서(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u>제5조(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①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하여야 한다.</u></p> <p><u>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u></p> <p><u>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u></p>	<p><u>제3조의2(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u></p> <p><u>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 이내인 경우</u></p> <p><u>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u></p> <p><u>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1년의 범위 안에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p> <p><u>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예산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u></p> <p><u>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중 통근·통학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u></p> <p><u>2. 제5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분뇨정화조청소 등 청소업무수행을 목적으로</u></p>
--	--

<p>3.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p> <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하지 않을 수 있다.</p> <p>1. 천연가스충전시설의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p> <p>2. 전환대상자동차에 해당되는 저공해자동차가 제작되지 아니하여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p> <p>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중 통근·통학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p> <p>2. 제5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분뇨정화조청소 등 청소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p> <p>3. 공공기관 및 비영리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위한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p>	<p><u>사용하는 자동차</u></p> <p>3. 공공기관 및 비영리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위한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p>
--	--

7.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4조의2(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가) 조문규정

제4조의2(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생략)

③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4조의2제1항에서는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에게 시설물 건축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에게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 제안(제4조의2 개정)

- 법률에 근거 없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제4조의2제2항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함.

현행	개정 의견
제4조의2(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	제4조의2(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u>설물 건축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u> <u>도록 하여야 한다.</u> <u>1. 필요한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u> <u>2. 「주차장법」 제6조 또는 「주택건설</u> <u>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u> <u>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여부</u> <u>3.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u> <u>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

8.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근거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4조(예산의 지원) 및 제5조(주민제안)

(가) 조문규정

제4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취약계층의 보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주민제안)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위해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4조에서는 시장이 취약계층의 보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지원 대상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의 지원 대상·기준 등과 같이 보조금 신청자의 권리보장에 중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포괄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대전광역시에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지방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면 될 것임.
- 또한, 제5조에서는 시장이 미세먼지로 인한 위해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제안의 공모방법·절차 등과 포상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음.

(다) 제안(제4조 및 제5조 개정)

- 제4조를 개정하여 취약계층의 보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의 대상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
- 제5조를 개정하여 주민제안 공모와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함.

현행	개정 의견
제4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취약계층의 보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취약계층의 보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주민제안)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위해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주민제안)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위해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p> <p><u><신 설></u></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와 제2항에 따른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p>
--	---

9.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악취방지법」 제16조의7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1조에서는 이 조례가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그런데 제1조에서 근거규정으로 인용하고 있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은 2018년 6월 12일 같은 법의 개정에 따라 “제16조의7”로 이동하였으나,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리하지 않고 있음.

(다) 제안(제1조 개정)

-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규정을 법률의 개정에 맞추어 정비함.

현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0.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 사업을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5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 및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 사업을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1조에서는 하수도 사업을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하수도 사업의 세부조직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또한, 제7조에서는 시장이 ①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② 공공하수처리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③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통합하여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그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과 회계연도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다) 제안(제4조의2, 제6조 및 제7조 개정, 제7조의2 신설)

- 이 조례 목적규정에 맞게 하수도 사업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4조의2(조직)를 신설함.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제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신설하고,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를 규정하기 위해 제7조의2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 의견
<p><u><신설></u></p> <p>제6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개정하려면 <u>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p> <p>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p>	<p>제4조의2(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u>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p> <p>제6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개정하려면 <u>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p> <p>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p>

<p>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p> <p>③ 수입은 하수도사용료, 부담금 , 점용료, 타회계 전입금 및 기타의 수입과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로 한다.</p> <p>④ 지출은 하수도·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며,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는 「지방세법」 141조에서 정한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이어야 한다.</p> <p>제7조의2(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p>
---	--

11.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5조(재정지원)

(가) 조문규정

제5조(재정지원) ①시장은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건당 2,000만원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정산검사, 취소 등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그 밖에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5조에서 시장은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조금의 교부, 정산검사, 취소 등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고, 그 밖에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이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의 지원 대상·기준 등과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자의 권리보장에 중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포괄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대전광역시에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지방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면 될 것임. 따라서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시장에게 위임할 필요는 없을 것임.

(다) 제안(제5조 개정)

- 제5조를 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

현 행	개정 의견
제5조(재정지원) ①시장은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건당 2,000만원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정산검사, 취소 등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그 밖에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재정지원) ①시장은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건당 2,000만원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2) 제6조(물재이용관리위원회)부터 제12조(운영세칙)까지

(가) 조문규정

제6조(물재이용관리위원회)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물재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물 재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제8조(위원장)

제9조(회의)

제10조(간사)

제11조(수당 등)

제12조(운영세칙)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6조에서는 물재이용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나 해촉 등과 같이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 제안(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해촉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해 미비된 규정을 추가하기 위하여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신설⁵³⁾하여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조문 개정 의견은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의 개정 의견을 참조함.
- 제척·기피·회피와 해촉 등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두고 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조례(「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5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나 위원의 해촉 등의 공통적인 규정은 대전광역시의 실정이나 위원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임.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12.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자연재해대책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 (1) 제21조(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및 제24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가) 조문규정

제21조(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지원 대상, 지원금액 등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시장은 물순환 시설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영향개발기법의 시범적용, 효과분석 및 보급 촉진 사업
2. 물순환에 관한 교육·홍보자료의 발간·보급 및 관련 정책 개발
3. 그 밖에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21조에서 시장은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지원 대상, 지원금액 등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의 지원 대상·기준 등과 같이 보조금 신청자의 권리보장에 중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포괄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음.
- 제24조에서는 시장이 물순환 시설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호에서 나열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비용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다) 제안(제21조 및 제24조 개정)

- 제21조를 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
- 제24조를 개정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 의견
제21조(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u>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지원 대상, 지원금액 등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	제21조(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u>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u>
제24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시장은 물순환 시설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영향개발기법의 시범적용, 효과분석 및 보급 촉진 사업 2. 물순환에 관한 교육·홍보자료의 발간·보급 및 관련 정책 개발 3. 그 밖에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시장	제24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시장은 물순환 시설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영향개발기법의 시범적용, 효과분석 및 보급 촉진 사업 2. 물순환에 관한 교육·홍보자료의 발간·보급 및 관련 정책 개발 3. 그 밖에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시장

이 정하는 사업	이 정하는 사업
----------	----------

13.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하수도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1조(사용료) 및 제22조(사용료 등 감면)

(가) 조문규정

제11조(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하수처리구역 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②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등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이 경우 월 10세제곱미터 이내의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로 한정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이 경우 점용료,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도 감면할 수 있다.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불출수 등의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경우에 해당 사용료
 6.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신고한 차이량에 대한 사용료
 7. 무허가건물 철거지역의 사용료
 8. 전기·통신관, 가스관 등 지하매설물의 긴급보수 및 정기점검을 위하여 시설물내 지하수를 공공하수도에 그대로 배출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②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하고,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하고,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 ③제1항에 해당하여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 ④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가 상수도요금의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⑤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료 등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 면제 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해제된 때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11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하수처리구역 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하도록 함. 이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하수관로 사용지역에서도 동일하게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내야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됨.
- 공공하수도 배출구역 중에 합류식 하수관로구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와 매년 청소를 하는 부담을 하고 있음. 그러나 분류식 하수관로지역과 하수사용료를 동일하게 납부하고 있음.
- 제22조에서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에서는 합류식 하수관로지역의 하수도사용료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 제안(제11조 및 제22조 개정)

- 제11조제1항을 개정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하수관로 사용지역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내지 않고,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따른 사용료만 내도록 함.

- 제22조에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에 합류식하수관로 지역의 사용료를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 의견
제11조(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u>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하수처리구역 내</u>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단서 신설> ②·③ (생략) <신설>	제11조(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u>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u> 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u>다만, 하수관로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하수관로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한다.</u> <u>②·③ (현행과 같음)</u> <u>④ 제1항 단서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따른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u>
제22조(사용료 등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 8. (생략) <신설> 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하고,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하고,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③ ~ ⑤ (생략)	제22조(사용료 등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 8. (현행과 같음) <u>8의2.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의 사용료</u> 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하고,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하고,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14.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23조(연구지원)부터 제25조(녹지의 실명관리)까지

(가) 조문규정

제23조(연구지원) 시장은 도시녹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녹화조경 발전지원
2. 도시녹지경관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3. 도시숲 조성 및 보전에 관한 연구·교육·홍보

제24조(나무은행·병원 운영 등) ①녹지관리청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목 및 기증수목의 재활용은 이식이 가능하고 수형이 우수한 수목을 선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목의 재활용을 위해 수목을 보관할 수 있는 나무은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해 수목의 생육상태, 병해충 등을 진단하여 관리할 수 있는 나무병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녹지관리청은 개인, 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수목에 대한 진단의뢰시 지원할 수 있다.

④녹지관리청은 개발사업 협의 시 계획구역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25조(녹지의 실명관리) ①녹지관리청은 녹지대 등의 수목에 대하여 개인, 회사, 단체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 가꾸기 위한 녹지관리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녹지 등을 실명으로 관리하려는 자는 미리 녹지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녹지관리청은 위촉장을 수여하여 실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녹지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23조에서 시장이 도시녹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녹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명확하지 않음.
- 제24조에서는 녹지관리청은 나무은행과 나무병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나무은행과 나무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제25조에서는 녹지관리청이 녹지의 녹지관리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명관리자의 지정 등 녹지관리실명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 제안(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개정)

- 제23조를 개정하여 도시녹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을 “도시녹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로 명확하게 규정함.
- 제24조를 개정하여 나무은행과 나무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제25조를 개정하여 에서는 녹지관리청이 녹지의 녹지관리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명관리자의 지정 등 녹지관리실명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현행	개정 의견
제23조(연구지원) 시장은 도시녹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을 하는 <u>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u>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23조(연구지원) 시장은 도시녹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을 하는 <u>민간단체에게</u>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제24조(나무은행·병원 운영 등) ①녹지관리청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	제24조(나무은행·병원 운영 등) ①녹지관리청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

<p>목 및 기증수목의 재활용은 이식이 가능하고 수형이 우수한 수목을 선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목의 재활용을 위해 수목을 보관할 수 있는 나무은행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p> <p>②~ ④ (생략)</p> <p><u><신 설></u></p> <p>제25조(녹지의 실명관리) ①녹지관리청은 녹지대 등의 수목에 대하여 개인, 회사, 단체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 가꾸기 위한 녹지관리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녹지 등을 실명으로 관리하려는 자는 미리 녹지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p> <p>③녹지관리청은 위촉장을 수여하여 실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p> <p>④녹지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u><신 설></u></p>	<p>목 및 기증수목의 재활용은 이식이 가능하고 수형이 우수한 수목을 선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목의 재활용을 위해 수목을 보관할 수 있는 나무은행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p> <p>②~ ④ (현행과 같음)</p> <p><u>⑤ 제1항에 따른 나무은행과 제2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25조(녹지의 실명관리) ①녹지관리청은 녹지대 등의 수목에 대하여 개인, 회사, 단체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 가꾸기 위한 녹지관리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녹지 등을 실명으로 관리하려는 자는 미리 녹지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p> <p>③녹지관리청은 위촉장을 수여하여 실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p> <p>④녹지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u>⑤ 제2항에 따른 신청과 제3항에 따른 실명관리자의 지정 등 녹지실명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	--

(2) 제30조(위원회 운영)

(가) 조문규정

<p>제30조(위원회 운영) ①도시녹화 및 경관조성 등에 관한 자문과 심의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행한다.</p> <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도시녹화와 관련하여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③자문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

④그 밖에 자문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30조제1항에서 도시녹화 및 경관조성 등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대전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시장은 도시녹화와 관련하여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자문단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문단의 설치가 우선되어야 하고, 자문단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규정은 두지 않으며, 자문단의 기능을 대행할 위원회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음.
- 그리고 자문단을 다른 위원회에게 대행하도록 규정하였다면, 그 구성·운영 및 수당과 여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할 필요가 없을 것임에도 다시 시장으로 하여금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모두 시장에게 포괄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임.

(다) 제안(제30조 개정)

- 제30조를 개정하여 도시녹화자문단⁵⁴⁾의 설치 및 기능을 명확하게 하고, 자문단의 기능을 대행할 위원회를 명확하게 규정함.

현 행	개정 의견
제30조(위원회 운영) ①도시녹화 및 경관 조성 등에 관한 자문과 심의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도시녹화와 관련하여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자문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도시녹화자문단) ① 시장은 도시녹화 및 경관조성 등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시녹화자문단(이하 “도시녹화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의 도시녹화자문단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제17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가 대행한다.

54) 자문단의 명칭과 기능은 조례의 특성을 반영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임.

④그 밖에 자문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

15.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3조(주제공원의 세분) 및 제4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가) 조문규정

제3조(주제공원의 세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조례가 정하는 공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공원 : 가로변 경관보호 및 완충기능 유지와 시민쉼터 제공에 기여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도시생태공원 : 도시자연생태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생태적으로 복원 및 보존을 통해 자연학습 및 여가활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3. 과학공원 : 과학적 이론을 체험·놀이·전시시설 등을 통해 익힐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4. 효공원 : 효를 바탕으로 자신의 뿌리를 알게 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설치하는 가족친화공원 또는 노인·장애인 등의 이용편익에 중점을 두어 설치하는 공원
5. 반려동물공원 :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유자등이 반려동물과 함께 운동 및 여가 활동이 가능하며, 반려동물 보호·교육·훈련 등의 다목적 활동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제4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전체 규모가 1,500제곱미터 미만의 조성계획 변경
2. 어린이공원·소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의 변경
3.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를 변경하지 않은 범위에서 그 용도를 유사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원의 면적이 감소되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감소된 부분만 해당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3조에서 법률의 위임근거 규정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제3호사목”을 인용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법률의 개정으로 “제15조제1항아목”으로 이동하였으나 정비되지 않고 있음.
- 제4조제1호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공원전체 규모가 1,500제곱미터 미만의 조성계획 변경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 조례의 근거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⁵⁵⁾에서 조례로 위임하면서 “2.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이동 또는 설치가 쉬운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를 예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1. 공원전체 규모가 1,500제곱미터 미만의 조성계획 변경”는 그 범위가 넓은 측면이 있음.

(다) 제안(제3조 및 제4조 개정)

- 제3조를 개정하여 법률 인용규정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함.
- 제4조제1호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범위를 “공원전체 규모가 1,500제곱미터

5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2010. 6. 29.>
2.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이동 또는 설치가 쉬운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3.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
4.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터 미만”보다 축소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현행	개정 의견
제3조(주제공원의 세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조례가 정하는 공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제3조(주제공원의 세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조례가 정하는 공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2) 제20조(회의) 및 제20조의2(소위원회)

(가) 조문규정

제2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의2(소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1. 하나의 사업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도시녹화사업계획 2. 하나의 사업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공원녹지관련 경관·디자인사업계획 3.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위원회는 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20조에서는 위원회 의결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이해관계의 범위가 명확하지 못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또한, 이미 선임된 위원을 해촉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적용할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
- 제20조의2제5항에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에 근거 없이 본 위원회의 기능을 형해화 시킬 우려가 있음.

(다) 제안(제20조 및 제20조의 개정)

- 법률에 근거 없이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 심의로 간주하도록 하는 제20조의2제5항을 삭제함.
- 제2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누락된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20조의3과 제20조의4를 각각 신설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 의견
제2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삭 제></u>
제20조의2(소위원회) ① ~ ④ (생략) ⑤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의2(소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u><삭 제></u>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촉규정이 필요함.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 예시는 「대구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의견을 참조함.

16.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도심 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 (1) 제1조(목적),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도심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대전광역시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목적규정(제1조)에서 그 전제가 되는 녹지기금의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음.
- 제6조제2항에서는 녹지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전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⁵⁶⁾에 따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

5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

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이 이에 맞게 구성되었는지 의문이 있음.

- 제6조의2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음.

(다) 제안(제1조 및 제6조 개정, 제6조의2 삭제)

- 목적규정(제1조)에서 그 전제가 되는 녹지기금의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을 둠.
- 제6조제2항에서는 녹지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기금운용에 전문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의 대행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제6조의2를 삭제함.

현 행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도심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u>녹지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도심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u>녹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조성·관리 및 운용에</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u>대전광역시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u>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u>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u>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삭 제>

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p><u>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u></p> <p><u>②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u></p> <p><u>③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u></p>	
---	--

17.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22조의3(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가) 조문규정

제22조의3(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22조의3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이 조례의 위임근거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제3항57)에서는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법에서 지정하는 선임방법과 달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

(다) 제안(제22조의3 개정 및 제22조의6 신설)

- 제22조의3를 개정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방법을 법률의 위임에 맞추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개정함.
- 위원회 위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현 행	개정 의견
제22조의3(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2조의3(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생략) <신설>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의6(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①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의6(운영세칙) (생략)	4. 제22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22조의7(운영세칙) (현행 제22조의6과 같음)
-------------------	---

18.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4조(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가) 조문규정

제4조(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① 순환골재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2. 신설·확장 및 보수하는 경우의 공사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도로공사
3. 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고 건축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4. 되메우기 또는 뒷채움용 골재(모래를 포함한다) 사용 추정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관로공사

② 대전광역시장은 순환골재등이 법 제35조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거나 법 제36조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조제15호의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등의 사용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4조에서는 순환골재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② 신설·확장 및 보수하는 경우의 공사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도로공사, ③ 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고 건축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및 ④ 되메우기 또는 뒷채움용 골재(모래를 포함한다) 사용 추정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관로공사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순환골재의 재활용 촉진과 국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사에 하수도공사, 주차장공사까지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제안(제4조 개정)

- 순환골재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하수도공사 주차장공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 입안 시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촉진 조례」 제4조58)와 「경상북도 순환

58)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

제4조(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①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설 또는 확장 공사
 - 가. 공사구간이 1킬로미터 이상
 - 나. 포장면적이 9,000제곱미터 이상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3.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5.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개정 2018.7.13.>
 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8.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 ②·③ (생략)

골재 등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⁵⁹⁾ 참고

19.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하천수 사용료,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3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및 제6조(점용료등의 감면)

(가) 조문규정

제3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점용료등(“점용료등”이란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하천수 사용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허가연도의 경우는 허가를 하는 때
2.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연도개시 후 3개월 이내

59)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①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설 또는 확장 공사
 - 가. 공사구간이 1킬로미터 이상
 - 나.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 이상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3.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공사,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8.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 ②·③ (생략)

제6조(점용료등의 감면) 영 제4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점용 목적을 80퍼센트 이상 상실한 경우 : 전액 면제
2. 하천점용 목적을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상실한 경우 : 100분의 80 감경
3. 하천점용 목적을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상실한 경우 : 100분의 50 감경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3조에서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를 규정하면서 “점용료등”의 정의를 함께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점용료등의 용어는 제2조부터 사용될 수 있고, 이 조례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는바, 별도의 정의규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제6조에서는 점용료등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감면비율을 하천점용 목적의 상실 수준과 연관시켜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점용료등은 토지의 점용료뿐만 아니라 하천 등의 사용료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이 부분을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다) 제안(제1조의2 신설, 제3조 및 제6조 개정)

- 제3조에서 “점용료등”의 정의 부분은 제1조의2를 신설하여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함.
- 제6조를 개정하여 점용료등의 감면비율을 하천점용뿐만 아니라 사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현 행	개정 의견
<p><u><신 설></u></p> <p>제3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u>점용료등(“점용료등”이란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하천수 사용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허가연도의 경우는 허가를 하는 때 2.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p><u>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점용료등”이란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하천수 사용료를 말한다.</u></p> <p>제3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u>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허가연도의 경우는 허가를 하는 때 2.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제6조(점용료등의 감면) 영 제44조제3항제 3호에 따른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하천점용</u> 목적을 80퍼센트 이상 상실한 경우 : 전액 면제 2. <u>하천점용</u> 목적을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상실한 경우 : 100분의 80 감경 3. <u>하천점용</u> 목적을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상실한 경우 : 100분의 50 감경	제6조(점용료등의 감면) 영 제44조제3항제 3호에 따른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u> 목적을 80퍼센트 이상 상실한 경우 : 전액 면제 2. <u>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u> 목적을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상실한 경우 : 100분의 80 감경 3. <u>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u> 목적을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상실한 경우 : 100분의 50 감경
---	---

20. 대전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3조(지원기준) 및 제5조(운영세칙)

(가) 조문규정

제3조(지원 기준)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u>민간단체의 지원 기준</u>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u>대전광역시장</u> 이 따로 정한다. 1.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의 확보 2.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경력 및 추진 실적 3.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계획 4. 그 밖에 물환경 보전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세칙) 그 밖에 민간단체의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물환경보전법」 제6조⁶⁰⁾에서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 기준 및 대상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 조례 제3조에서 민간단체의 지원 기준에 고려할 사항을 예시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제5조에서는 그 밖에 민간단체의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그러나 지원할 민간단체의 대상과 기준 등을 정하는 것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이를 포괄적으로 시장에게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임.
-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선정기준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들이 알기 쉽게 규칙으로 위임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다) 제안(제3조 및 제5조 개정)

- 제3조 및 제5조를 개정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민간단체 지원기준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

현 행	개정 의견
제3조(지원 기준) 「물환경보전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u>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u> 1.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의 확보	제3조(지원 기준) ①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u>규칙으로 정한다.</u> 1.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의 확보

60) 「물환경보전법」

제6조(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p>2.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경력 및 추진 실적</p> <p>3.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계획</p> <p>4. 그 밖에 물환경 보전활동에 필요한 사항</p> <p>제5조(운영세칙) 그 밖에 민간단체의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u>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u></p>	<p>2.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경력 및 추진 실적</p> <p>3.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계획</p> <p>4. 그 밖에 물환경 보전활동에 필요한 사항</p> <p>제5조(운영세칙) 그 밖에 민간단체의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u>규칙으로 정한다.</u></p>
--	--

제6절 도시재생주택본부(제18편)

1.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조(목적)부터 제4조(세출)까지

(가) 조문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대전광역시 귀속분
2. 국가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에 관한 계획의 수립·집행

4. 기반시설부담금의 대전광역시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이 조례는 2008년 3월 28일 폐지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을 주요 세입원으로 하고 있고, 그 주요내용인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 및 세입 등도 모두 폐지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이처럼 폐지된 법률에 따른 부담금을 주요 세입으로 하는 특별회계는 “국가 및 대전광역시의 출연·보조·융자금”이나 “일반회계의 전입금” 등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음. 이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임.⁶¹⁾

(다) 제안(폐지)

- 특별회계의 설치근거가 없어진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해야 할 것임. 다만,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유지가 필요하다면 설치목적에 맞게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⁶²⁾에서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61)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③ (생략)

2.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垔)인 토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확보와 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가) 조문규정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전광역시장의 따로 정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5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정하고 있으며, 그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전광역시장의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 규정의 위임근거 규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⁶³⁾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이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시장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포괄적 재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법이 정한 규정의 제정 주체를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 제안(제5조 개정)

6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③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제5조를 개정하여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이율을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일정한 제한범위를 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2조(공동이용시설) 및 제10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영)

(가) 조문규정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그 밖에 시민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10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영)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2조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거규정으로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의 규정이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었으나 정리되지 않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⁶⁴⁾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

64) 「지방재정법」

회계를 제외하고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10조에서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에도 이의 존속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참고로, 이 조례에서 설치하고 있는 도시재생특별회계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이지만, 설치가 의무화된 특별회계는 아님.⁶⁵⁾

(다) 제안(제2조 개정, 제10조의2 신설)

- 제2조를 개정하여 법령개정에 따라 달라진 인용조문을 정리함.
-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 의견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3. (현행과 같음) <u>제10조의2(존속기간)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은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u>

4.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추진을 위한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추진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9조(사업협회의 구성·운영), 제16조(특별회계의 용자조건) 및 제18조(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가) 조문규정

제9조(사업협회의 구성·운영) ① 삭제 <2015.10.8.>

②사업협회의 위원장은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삭제<2012.6.15>

⑤협회의 회의는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사업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시재정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⑦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그 밖에 사업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특별회계의 용자조건) ①용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용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자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용자금은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5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한다..

④용자는 시장과 용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약정에 의한다.

제18조(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영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지를 매각하는 경우 분할납부 기간은 20년 이내로 하고, 매각대금은 당해토지의 조성원가에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이자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재정비촉진사업별 지역주민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음.⁶⁶⁾
- 그런데 이 조례 제9조(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에서는 사업협의회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사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사업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나 해촉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제16조(특별회계의 용자조건)에 따른 용자금 회수 이자율과 제18조(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따른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아무런 제한 없이 시장이 정하도록 포괄위임하고 있음.

(다) 제안(제9조, 제16조 및 제18조 개정)

- 제9조에 사업협의회 설치근거를 신설하고, 사업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나 해촉에 관하여는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제16조 및 제18조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이자율과 관련하여 범위를 한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현 행	개정 의견
제9조(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신 설> ② ~ ⑦ (생 략) <신 설>	제9조(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협의회를 둔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사업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66)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사업협의회의 구성) 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③ (생 략)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p>⑧그 밖에 사업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6조(특별회계의 용자금) ①용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용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u>이자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p>③용자금은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5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한다..</p> <p>④용자는 시장과 용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약정에 의한다.</p> <p>제18조(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p> <p>②영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지를 매각하는 경우 분할납부 기간은 20년 이내로 하고, 매각대금은 당해토지의 조성원가에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u>이자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p><u>해촉에 관하여는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⑨ 그 밖에 사업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6조(특별회계의 용자금) ①용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용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u>이자율은 시중은행의 시중은행의 일반대출금 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u></p> <p>③용자금은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5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한다..</p> <p>④용자는 시장과 용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약정에 의한다.</p> <p>제18조(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p> <p>②영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지를 매각하는 경우 분할납부 기간은 20년 이내로 하고, 매각대금은 당해토지의 조성원가에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u>이자율은 시중은행의 일반대출금 연체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한다.</u></p>
--	---

5. 대전광역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2조(정의)

(가) 조문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동전기요금”이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승강기 및 계단 등, 지하저수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이 조례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영구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정의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대상이 되는 “영구임대주택”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될 수 있음.

(다) 제안(제2조 개정)

- 제2조를 개정하여 “영구임대주택”에 관한 정의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 의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동전기요금”이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승강기 및 계단 등, 지하저수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을 말한다.

<u>요금</u> 을 말한다.	2. “ <u>공동전기요금</u> ”이란 옥외에 설치된 <u>보안등(단지 안 가로등을 포함한다), 옥내에 설치된 승강기 및 계단 등, 지하저수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u> 을 말한다.
------------------	---

6.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건축기본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4조(건축정책위원회)

(가) 조문규정

<p>제4조(건축정책위원회) ① 「건축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기본법」 제19조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위원장은 총괄건축가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건축·도시·문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⑧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건축기본법」 제18조에서는 지역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건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조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⁶⁷⁾
- 그런데 「건축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조례에서는 대전광역시 건축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해촉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다) 제안(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67) 「건축기본법」

제18조(지역건축위원회) ① 지역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광역건축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건축정책위원회(이하 "기초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광역건축위원회 및 기초건축위원회(이하 "지역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조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지역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의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해촉에 관한 규정을 각각 신설할 필요가 있음. 조문 규정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의견을 참조함.

7.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 (1) 제3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비 지원), 제4조(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및 제7조(감사반의 편성·운영 등)

(가) 조문규정

제3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비 지원) ① 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재난·재해 복구 및 안전진단 등 주민 안전을 위한 긴급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부터 20년이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가 50퍼센트 이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국민주택규모가 50퍼센트 미만이라도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승인일부터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 내 도로, 보도, 하수도 등 부대시설의 보수
2.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 복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자전거보관대·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보수
4.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5. 경비원 및 청소원 등 공동주택단지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의 보수

② 시장은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4. 법 제8조에 따라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를 결정하는 경우 등 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감사반의 편성·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효율적인 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합동감사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3조제5항에 따른 자문,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합동감사반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반원이나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감사반·합동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3조에서는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비를, 제4조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예산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예산의 지원범위와 지원방법 등은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도록 포괄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제7조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반·합동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반 등의 편성에 관한 사항도 시장의 재량에 맡기기보다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다) 제안(제3조, 제4조 및 제7조 개정)

- 제3조 및 제4조를 개정하여 예산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제7조를 개정하여 감사반·합동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현행	개정 의견
제3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비 지원)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u>시장</u> 이 따로 정한다.	제3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비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u>규칙</u> 으로 정한다.
제4조(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u>시장</u> 이 따로 정한다.	제4조(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u>규칙</u> 으로 정한다.
제7조(감사반의 편성·운영 등) ① ~ ③ (생략) ④ 그 밖에 감사반·합동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시장</u> 이 따로 정한다.	제7조(감사반의 편성·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감사반·합동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규칙</u> 으로 정한다.

(2) 제14조(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가) 조문규정

제14조(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민원의 접수 및 조사
2. 관리비 적정여부 조사
3. 장기수선계획 기술지원
4. 공동주택관리 관련 정책수립 및 교육·홍보
5.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및 자치구 감사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상담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14조에서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센터의 업무와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상담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 제안(제14조 개정)

- 제14조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상담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 의견
제14조(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4조(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및 상담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u>

8. 대전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및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가) 조문규정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법 제24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3.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운영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
3.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
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사업의 시행 및 지원
6.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
7.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5조에서는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열거한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재정지원을 받을 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제6조에서는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담조직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다) 제안(제5조 및 제6조 개정)

- 제5조를 개정하여 재정지원을 할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함.
- 제6조를 개정하여 전담조직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현행	개정 의견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u>사업에 대하여</u>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u>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u>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7. (생략) <u><신설></u>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7.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9.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 (1)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부터 제25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까지 및 제2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가) 조문규정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4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공공부문에 대한 경관계획수립·시행 포함)
3.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
4. 단계별, 연차별 사업계획 관련 도서
5. 사업비 산출근거
6. 사업비 조달계획
7. 유지관리계획
8.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계획

②제1항제4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5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공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으로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위원회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이 된다.
5.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6.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23조에서는 시장이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포괄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나 융자는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사항으로 그 대상자 선정이나 규모 등은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제24조에서는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5조에서

는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을, 제27조에서는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사항은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별다른 제한 없이 시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임.

(다) 제안(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 개정)

- 제23조를 개정하여 보조나 용자의 대상자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를 개정하여 각 조에서 시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각종 절차, 방법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현행	개정 의견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생략) ②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u>시장</u> 이 정한다.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조나 용자의 대상자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u>규칙</u> 으로 정한다.
제24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생략) ②제1항제4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u>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u>시장</u> 이 정한다.	제24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4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u>등에</u> <u>필요한</u> 사항은 <u>규칙</u> 으로 정한다.
제25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② (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u>평가</u>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u>시장</u> 이 정한다.	제25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u>평가</u> 시기, 절차, 방법 등에 <u>필요한</u> 사항은 <u>규칙</u> 으로 정한다.
제2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생략) ③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u>필요한</u> 사항은 <u>시장</u> 이 정한다.	제2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u>필요한</u> 사항은 <u>규칙</u> 으로 정한다.

(2) 제30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가) 조문규정

제30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및 심의제외대상 건축물은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기존건축물의 내부 리모델링공사
2.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으로 사업비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설계변경. 이 경우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3.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30조제1항에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음.⁶⁸⁾
- 별표 1의 내용을 살펴보면, “심의대상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대상범위를 공사의 종류별로 ① 조명공사 : 10억원 이상, ② 교량·도로·육교·하천 등 토목공사 : 100억원 이상, ③ 공원 및 조성공사 :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공사의 종류별 공사금액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다) 제안(별표 1의 개정)

- 보다 나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대상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대상범위 공사별 공사금액을 낮추어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8)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별표 1]

심의대상 사회기반시설 사업(제30조제1항 관련)

대상범위
1. 총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인 조명공사
2. 총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교량·도로·육교·하천 등 토목공사
3. 총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인 공원 및 조성공사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10.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3조(건립신청), 제10조(관리) 및 제11조(공공조형물의 활용)

(가) 조문규정

제3조(건립신청) ① 건립주체는 관리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립주체가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 등을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건립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제10조(관리) ① 관리기관장은 공공조형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갖추둔다.
2. 공공조형물과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의 관리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관할 공공시설 내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에 대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장은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을 옮기거나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조형물의 활용)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3조에서는 건립주체가 대전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설립된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이 기부채납된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규정을 두지 않게 되면 당연히 대전시장이 관리해야 하나, 제10조제3항에서 건립주체가 공공조형물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규정을 두고 있음. 따라서 건립주체가 공공조형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11조에서는 시장이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 제안(제3조 및 제11조 개정)

- 제3조를 개정하여 건립주체가 공공조형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제11조를 개정하여 공공조형물과 관련한 예산 지원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함.

현 행	개정 의견
제3조(건립신청) ①·② (생략) <신설>	제3조(건립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공공조형물의 관리는 협의에 따라 관리주체가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조형물의 활용) 시장은 공공조	제11조(공공조형물의 활용) 시장은 공공조

<p>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u>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u>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p>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u>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u>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

11.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근거법령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8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가) 조문규정

제8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추진사업의 협의 및 조정

- | |
|--|
| 2.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사후관리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협의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⁶⁹⁾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조례에서는 대전광역시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해촉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다) 제안(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 대전광역시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 위원회 위원이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은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의견을 참조함.

12.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6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① 시·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시행계획의 수립,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등에 참여하여 시행계획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등)부터 제17조(운영세칙)까지

(가) 조문규정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시설물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사회복지·도시계획·건축·공공디자인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경관과장이 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14조 본문에서는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에 관하여 모두 규정하면서 필요에 따라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동일한 사항을 다른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을 해당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이 사례의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게 하려면, 위원회 대행과 관련한 제14조 단서를 삭제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해촉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려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규정과 대행에 관한 규정만 두고 나머지는 삭제할 필요가 있음.

(다) 제안(제14조 및 제17조 개정 및 제15조 및 제16조 삭제)

- 제11조를 개정하여 제1항에 규정된 위원회 대행 관련 사항을 별도의 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하되, 위원회 대행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함.
- 위원회의 대행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현행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함.

현행	개정 의견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진흥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p>1.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p> <p>2. 공공시설물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p> <p>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p> <p>4.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1. 대전광역시의회의원</p> <p>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p> <p>3. 사회복지·도시계획·건축·공공디자인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p> <p>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p>	<p>1.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p> <p>2. 공공시설물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p> <p>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p> <p>4.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p> <p>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	--

<p><u>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u>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경관과장이 된다.</u></p> <p><u>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u>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p><u><삭 제></u></p> <p><u>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	--

제7절 사업소(제21편)

1.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5조(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및 제6조(부담금의 산정기준)

(가) 조문규정

제5조(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대규모 개발사업 등 물수요를 발생시키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공사 또는 증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2. 급수구역 외 지역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공사 또는 증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3. 급수구역 내에 급수설비의 신설공사 또는 개조공사 등 급수공사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기존의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②제2조제1호나목, 다목에 따른 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누수 등으로 인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수도 시설의 개조·이설에 따른 손괴예방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원상복구 및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결빙방지 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기타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 ①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시장이 수도 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③제5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적용한다.

1. 원상복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구성에 따른다.
 2. 누수 또는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양에 대한 비용 산정은 「대전광역시 상수도 급수조례」 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에 따른다.
 3. 급수 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출동의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감리원과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감리비와 차량경비는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며, 직원경비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드는 모든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④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5조제1항에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를 “1. 대규모 개발사업 등

물수요를 발생시키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 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공사 또는 증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 “2. 급수구역 외 지역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공사 또는 증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 “3. 급수구역 내에 급수설비의 신설공사 또는 개조공사 등 급수공사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기존의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제6조에서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규정하면서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시장이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부담금 산정과 관련하여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두지 않고 부담금을 부담할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담금의 액수가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음. 따라서 부담금을 부담할 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5조제3호와 같이 산정기준을 두어야 할 것임.

(다) 제안(제6조 개정)

- 제6조를 개정하여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의 경우에도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현 행	개정 의견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 ①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시장이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 ①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담금의 산	②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담금의 산

<p>정기준은 <u>별표</u>와 같으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p> <p>③·④ (생략)</p> <p>제7조(부담금의 감면) <u>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부담금을 감면해 줄 수 있으며, 감면범위 및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정기준은 <u>별표 2</u>와 같으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부담금의 감면) ① <u>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감면범위 및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신설></p>	<p>[별표 1]</p> <p>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6조제1항 관련)</p> <p>1.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원인자부담금 =</p> </div> <p>(1) 순자산=</p> <p>(2)</p> <p>1.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원인자부담금 =</p> </div> <p>(1) 순자산=</p> <p>(2)</p>
<p>[별표]</p> <p>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6조제2항 관련)</p> <p>1. 제5조제1항제3호의 경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원인자부담금 = $\frac{\text{순자산}}{\text{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p> </div> <p>(1) 순자산=(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 자산-기부금 누계액)-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p> <p>*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함</p> <p>(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연도의 1인1일최대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p>	<p>[별표 2]</p> <p>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6조제2항 관련)</p> <p>1. 제5조제1항제3호의 경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원인자부담금 = $\frac{\text{순자산}}{\text{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p> </div> <p>(1) 순자산=(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 자산-기부금 누계액)-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p> <p>*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함</p> <p>(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연도의 1인1일최대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p>

양으로 한다.	양으로 한다.
---------	---------

2.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수도법」 제30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2조의2(위원의 위촉 및 해촉)

(가) 조문규정

제2조의2(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의 위촉한다.

② 대전광역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2조의2에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을 규정하면서 그 근거법령으로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항을 인용하고 있음.
- 그러나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항은 2020년 9월 29일 개정되어 제49조의3제2항으로 개정되었으나 정리되지 않았음.

(다) 제안(제2조의2 개정)

○ 제2조의2를 개정하여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리함.

현행	개정 의견
제2조의2(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 ② (생략)	제2조의2(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 ② (현행과 같음)

3.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상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급수공사비의 부담 구분, 그 밖에 상수도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수도법」 제38조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27조(업종의 구분)

(가) 조문규정

제27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4에 따른 업종구분표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수용가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설비를 설치한 후 업

종을 정할 수 있다.

[별표 4]

업종구분표(제27조제1항 관련)

업종구분	업태
1. 가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인장업, 행정사업, 수예점, 만화가 게 등으로서 16㎡ 이하의 소규모가게 및 이와 유사한 업소 ○비영리법인의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단체(다만, 사업체 제외) ○비영리법인이 아닌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가정 보육시설 ○경로당(노인회관) ○신문보급소, 장애인이 운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2. 일반용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업태
3. 목욕용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 (목욕탕겸용 이발소 포함)
4. 전용공업용	○별도의 배·급수관에 의하여 공업용으로 공급 되는 것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27조에서는 상수도요금의 효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을 별표 4에 따른 업종구분표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별표 4에서는 업종구분을 가정용으로 하는 업태를 규정하면서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인장업, 행정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등으로서 16㎡ 이하의 소규모가게 및 이와 유사한 업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16㎡의 기준은 현실적으로 그 범위가 너무 좁은 측면이 있음.
- 또한, 별표 4에서 업종구분을 가정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태로 현재 나열되고 있는 시설과 유사하게 학생들이 주거로 이용하는 기숙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다) 제안(별표 4 개정)

-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표 4를 개정하여 상수도요금 효율적용에서 가정용으로 구분되는 업태 중 소규모가게의 규모를 확대하고, 학생이용 기숙사를 가정용 업태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 의견				
<p>[별표 4]</p> <p>업종구분표(제27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tr> <th>업종구분</th><th>업태</th></tr> </table>	업종구분	업태	<p>[별표 4]</p> <p>업종구분표(제27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tr> <th>업종구분</th><th>업태</th></tr> </table>	업종구분	업태
업종구분	업태				
업종구분	업태				

1. 가정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인장업, 행정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등으로서 16㎡ 이하의 소규모가게 및 이와 유사한 업소 ○비영리법인의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단체(다만, 사업체 제외) ○비영리법인이 아닌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가정 보육시설 ○경로당(노인회관) <u><신 설></u> ○신문보급소, 장애인이 운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1. 가정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인장업, 행정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등으로서 20㎡ 이하의 소규모가게 및 이와 유사한 업소 ○비영리법인의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단체(다만, 사업체 제외) ○비영리법인이 아닌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가정 보육시설 ○경로당(노인회관) <u>○학생이용 기숙사</u> ○신문보급소, 장애인이 운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2. 일 반 용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업태	2. 일 반 용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업태
3. 목 욕 용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 (목욕탕겸용 이발소 포함)	3. 목 욕 용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 (목욕탕겸용 이발소 포함)
4. 전 용 공 업 용	○별도의 배급수관에 의하여 공업용으로 공급 되는 것	4. 전 용 공 업 용	○별도의 배급수관에 의하여 공업용으로 공급 되는 것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4.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제14조(목적)

(가) 조문규정

제14조(운영위원회) ①관장은 「도서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 ③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1. 도서, 사서 또는 교육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⑦ ~ ⑫ (생략)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14조(운영위원회)에서는 ①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②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④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및 ⑤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나 해촉 등과 같이 중요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위원회 설치 조례 안에는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다) 제안(제15조 및 제16조 신설)

-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해촉 규정은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의견을 참조함.

제8절 기타

1.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조례내용

-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 자치조례

다. 조문별 축조심사 및 제안

(1) 위원회 조례의 현황 및 문제점

-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에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가 42개나 되고, 그 밖의 개별 조례에서도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합의제 자문기관 이 위원회, 심의위원회, 협의회 등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음.
-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 다수가 참여하여 합의 또는 표결의 방법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형태로서, 행정의 민주성·공정성 확보, 전문지식의 도입, 이해관계의 조정 또는 관계 행정기관 간 의사조합·합의·협의·조정 등을 위해 설치됨.
- 위원회를 규정할 때에는 먼저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정수·자격 등의 규정, 회의의 운영 방법, 간사 또는 사무기구 등의 순서로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소위원회·실무위원회의 규정,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규정, 공청회 등의 개최규정, 수당규정, 운영세칙규정 등을 두어야 할 것임.

그 밖에 합의제 자문기관인 위원회, 분쟁조정기관 또는 의결기관인 위원회는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위원의 결격사유,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비밀엄수의 의무,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함.⁷⁰⁾

- 이와 같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마다 모두 규정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를 복잡하게 하여 수범자간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입법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70)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2019), p.290-291. 참조

- 이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통된 부분은 개별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 없이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도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에 모두 적용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관한 기본조례 역할을 하고 있음.⁷¹⁾
- 따라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자세하게 규정함으로써 개별 조례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러나 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위원의 선임이나 임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개별 조례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규정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원회 설치·운영에 공통되는 사항이 보완된다면, 개별 조례에서 관련 규정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법체계를 간결하게 하여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임.

(2) 제2조(정의)부터 제4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까지

(가) 조문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대전광역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로서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과단위 부서(과가 없는 경우는 해당기관)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71)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3. 특정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례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3. 특정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과 조례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대전광역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항, 분쟁 조정 및 지방 보조금 지급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위원회의 소속

나.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다.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업무 대행자

라.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심의·의결의 기한, 이의신청 절차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설치일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필요예산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조례에서 정의규정은 그 조례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의 의미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조례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둔. 그런데 제2조에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에 대한 용어 정의를 두고 있지 않음.

-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위원회의 설치계획과 조례안에는 명시할 사항으로,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을 제시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 사항은 모든 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인데 조례안에 필수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개별 조례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때마다 “제척·기피·회피나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을 반복해서 규정해야 하는 번잡성이 있음.

(다) 제안(제2조부터 제4조까지 개정)

- 제2조에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에 대한 용어정의를 추가함.
- 제4조를 개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에서 명시할 공통적인 규정은 삭제하고, 해당 조례에서 특별히 달리 규정할 사항은 이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입법체제상 적절할 것임.

현 행	개정 의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u><신 설></u> <u><신 설></u> 2.·3.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 <u>당연직 위원</u> ”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 <u>위촉직 위원</u> ”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u>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u> 4.·5.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3. 특정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u>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u> ②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3. 특정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u>시장이 일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u> ②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p>는 이 <u>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4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과 조례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4. <u>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대선광역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항, 분쟁 조정 및 지방 보조금 지급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u></p> <p>5. <u>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다음 각 목의 사항</u></p> <p>가. <u>위원회의 소속</u></p> <p>나. <u>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u></p> <p>다. <u>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업무대행자</u></p> <p>라. <u>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u></p> <p>마. <u>그 밖에 심의·의결의 기한, 이의신청 절차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p> <p>③ (생략)</p>	<p>는 이 <u>조례에서</u>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4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과 조례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u></p> <p><삭 제></p> <p>③ (현행과 같음)</p>
---	--

(3) 제6조(위원회의 구성)

(가) 조문규정

<p>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u>3년을</u>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정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과도하게 상위 직급의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일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의 임기, 위촉방법이나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방법 등과 같이 각종 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또한,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과 해촉에 관한 규정도 누락되어 있음.

(다) 제안(제5조의2 신설 및 제6조 개정)

- 제6조 중 위원의 임기 부분을 분리·보완하여 제5조의2를 신설함.
- 제6조에는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과 위촉직 위원의 선정기준 및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
- 제6조의2와 제6조의3을 신설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현행	개정 의견
<신설>	제5조의2(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p>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u>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u></p> <p>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미리 선정인원·기준, 자격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 공개모집에 의한 참여자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	---

<신 설>

<신 설>

1. 위원의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p><u>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u></p> <p><u>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u></p> <p><u>3.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u></p> <p><u>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u></p> <p><u>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u></p> <p><u>6.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p>
--	---

(4) 제7조(위원회의 운영) 및 제9조(회의록 작성)

(가) 조문규정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민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작성) 담당부서의 장 또는 간사는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축조심사 및 문제점

-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의소집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등의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회의의 방식과 사무처리를 위한 기구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보관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와 비공개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음.

(다) 제안(제7조 및 제9조 개정)

- 제7조를 개정하여 위원회 회의운영방식과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기구 등을 둘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제9조를 개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록의 공개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 의견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② (생략) <u><신설></u> <u><신설></u>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u>
제9조(회의록 작성) 담당부서의 장 또는 간사는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u><신설></u> <u><신설></u>	제9조(회의록) ① 담당부서의 장 또는 간사는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u>② 시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자의 발언내용은 발언요지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u> <u>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1. 해당 법령과 조례에 의해 정해진 회</u>

	<u>의록 공개 절차에 따르는 경우</u> <u>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u> <u>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u> <u>3. 위원회가 회의록 일부에 대하여 명확</u> <u>한 사유를 명시하여 온라인 공개 여부</u> <u>를 의결하여 정하는 경우</u>
--	--

(5)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의 효과

-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안 의견과 같이 개정하면, 이 연구의 조례분석 검토내용이나 향후 위원회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해촉을 공통적으로 규정할 조문은 각각 규정할 필요 없이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기존의 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과 공통된 규정은 삭제하고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정비할 수 있을 것임.
- 나아가 앞으로 개별 조례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 없이 기본 조례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함으로써 간결한 법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임.

■ 참고 문헌

-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7.
- 국회사무처 의사국, 국정감사·조사편람, 2016. 5.
-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16. 8.
- 국회사무처, 국회선례집, 2016. 8.
- 국회사무처, 국회의사편람, 2016. 6.
- 국회사무처, 국회의안편람 I, 2016. 6.
- 국회사무처, 국회의안편람 II, 2016. 6.
- 법제처 입법지원단, 법령심사 매뉴얼, 2015. 12.
- 법제처, 2016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2016. 12.
- 법제처, 2016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2016.
- 법제처, 2016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2016. 12.
- 법제처, 2017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 2017. 12.
- 법제처, 2018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2018. 12.
- 법제처, 2019년 법제업무편람, 2018. 12.
- 법제처, 법령입안 길라잡이, 2019. 7.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2019. 12.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18. 6.
- 법제처, 자치법규 중요 쟁점 해설집, 2014. 7.
- 법제처, 주제별·조문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2013. 12.
- 서우선, 2015 지방의회운영 선진화를 위한 전국 지방의회 공무원 특별연수(연수교재), 2015. 1.
- 이세정,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Ⅱ), 한국법제연구원, 2016. 10.
- 이세정,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10.
- 최민수, 윤진훈, 자치법규 길라잡이, 2018. 1.
- 최민수, 지방의회운영, 2018. 7.
- 최민수·윤진훈, 지방예산결산, 2020. 3.
- 최민수·윤진훈·박찬수,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2019. 10.

■ 인터넷 자료 등

강원도청, <http://www.provin.gangwon.kr>

경기도청, <http://www.gg.go.kr>

경상남도청, <http://www.gyeongnam.go.kr>

광주광역시청, <http://www.gwangju.go.kr>

대구광역시청, <http://www.daegu.go.kr>

대전광역시청, <http://www.daejeon.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부산광역시청, <http://www.busan.go.kr>

서울특별시청, <http://www.seoul.go.kr>

울산광역시청, <http://www.ulsan.go.kr>

인천광역시청, <http://www.incheon.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전라남도청, <http://www.jeonnam.go.kr>

전라북도청, <http://www.jeonbuk.go.kr>

제주도청, <http://www.jeju.go.kr>

충청남도청, <http://www.chungnam.go.kr>

충청북도청 www.chungbuk.go.kr

행정안전부, <http://www.moi.go.kr>

대한민국 국회, <https://www.assembly.go.kr/assm/userMain/main.do>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조례) 분석 목록

구 분	일련 번호	절 번호	목 록	보고서 페이지
제8편 일자리 노동경제	1	1	대전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6
	2	2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	8
	3	3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10
	4	4	대전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조례	13
	5	5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15
	6	6	대전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해위 금지에 관한 조례	17
	7	7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1
	8	8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26
	9	9	대전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28
	10	10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	31
	11	11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34
	12	12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	35
	13	13	대전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38
	14	14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41
	15	15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	43
	16	16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46
	17	17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	48
	18	18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55
	19	19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64
	20	20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65
	21	21	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66
	22	22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68
	23	23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70
	24	24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73
	25	25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75
	26	26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76
	27	27	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조례	78
	28	28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	80
	29	29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82
	30	30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83
	31	31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84
	32	32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87
	33	33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90
	34	34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조례	93
	35	35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96

구 분	일련 번호	절 번호	목 록	보고서 페이지
	36	36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96
	37	37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98
	38	38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100
	39	39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3
	40	40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104
제9편 과학 산업국	41	1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107
	42	2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110
	43	3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12
	44	4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115
	45	5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16
	46	6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17
	47	7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118
	48	8	대전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120
제12편 문화체육 관광국	49	1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122
	50	2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124
	51	3	대전 고암 미술문화재단 조례	126
	52	4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128
	53	5	대전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129
	54	6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130
	55	7	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조례	132
	56	8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133
	57	9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	135
	58	10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136
	59	11	대전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138
	60	12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설치 및 운영 조례	139
	61	13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140
	62	14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	141
	63	15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142
	64	16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143
	65	17	대전광역시 체육인 스포츠 인권 조례	146
	66	18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148
	67	19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149
	68	20	대전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 조례	152
	69	21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153
	70	22	대전 스카이라드 조례	154
제13편 보건 복지국	71	1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56
	72	2	대전광역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157
	73	3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59
	74	4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160

구 분	일련 번호	절 번호	목 록	보고서 페이지
	75	5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62
	76	6	대전복지재단 조례	163
	77	7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165
	78	8	대전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	167
	79	9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169
	80	10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172
	81	11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	174
	82	12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175
	83	13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179
	84	14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조례	182
	85	15	대전광역시 경로당지원조례	183
	86	16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	185
	87	17	대전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187
	88	18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	188
	89	19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189
	90	20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190
	91	21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조례	192
	92	22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194
	93	23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195
	94	24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97
	95	25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198
	96	26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조례	202
	97	27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	202
	98	28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204
	99	29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206
	100	30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	208
	101	31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209
	102	32	대전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10
	103	33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	212
	104	34	대전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	214
	105	35	대전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215
제15편 환경 녹지국	106	1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217
	107	2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220
	108	3	대전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조례	224
	109	4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227
	110	5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	229
	111	6	대전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조례	230
	112	7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234
	113	8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36

구 분	일련 번호	절 번호	목 록	보고서 페이지
	114	9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	238
	115	10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 조례	239
	116	11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241
	117	12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244
	118	13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246
	119	14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249
	120	15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253
	121	16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256
	122	17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259
	123	18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261
	124	19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263
	125	20	대전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조례	265
제18편 도시재생 주택본부	126	1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68
	127	2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270
	128	3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71
	129	4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272
	130	5	대전광역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276
	131	6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277
	132	7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279
	133	8	대전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283
	134	9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284
	135	10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289
	136	11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91
	137	12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291
제21편 사업소	138	1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297
	139	2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301
	140	3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302
	141	4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 조례	304
기 타	142	1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06